

건축과 도시공간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만드는
건축도시정책 전문저널

Vol.15 - Autumn 2014

국민행복과
공공건축

공공기관은 건축물 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절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1항

(a u r _i)

Vol.15 - Autumn 2014

건축과 도시공간

발행

2014년 9월 30일

발행인

제해성

편집책임

임유경

편집

고효진, 박선희

발행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B-301

편집부 031.478.9600

팩스 031.478.9608

www.auri.re.kr

information@auri.re.kr

디자인

디자인인트로

02.2285.0789

www.gointro.com

ISSN

2288-2332

표지



자원과 아이디어가 산재해 있다 해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조직하여 결과를 이루지 못하면 의미와 가치를 갖기 어렵습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양적인 자원과 아이디어를 잘 구성하여 질 높은 공공건축을 만들어 내고, 좋은 공공건축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함의를 이뤄내는 '구심점'이 되고자 합니다. 이는 곧 이 공간과 도시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건축과 도시공간〉에 수록된 모든 사진과 그림자료는 저작권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모든 도판의 출처 및 저작권자를 찾아 명기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부 착오가 있거나 빠진 부분은 추후 저작권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고 저작권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도시공간〉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정책이슈 및 건축도시 동향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 투고가 가능하며, 심의를 거쳐 원고가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또한 본지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및 기획에 대한 의견이나 필진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메일을 통해 제안하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CONTENTS

정책이슈 : 국민행복과 공공건축

| | | |
|----|--|-----|
| 06 | 시론 :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공공건축의 역할 | 재해성 |
| 12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와 중장기 운영방향 | 차주영 |
| 21 | 공공건축 기획력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 | 김은희 |
| 29 | 현황정보체계(DB) 구축과 활용을 통한 공공건축의 합리적 관리 기반 조성 | 임현성 |
| 38 | 기고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 거는 기대 | 김진숙 |

통계 자료실

| | | |
|----|------------------------|-----|
| 40 | 건축설계사무소 종사자의 현안 인식과 과제 | 오성훈 |
|----|------------------------|-----|

건축도시동향

| | | |
|----|--|-----|
| 46 | <u>해외동향</u> 시애틀 알래스카 고가도로 철거와 지하 대체 터널 건설 | 김충호 |
| 51 | 중국 대도시의 팽창, 상하이 템스타운 | 김형민 |
| 56 | 영국의 전통건축물 보존 · 관리제도와 인력양성 현황 | 신치후 |
| 62 | <u>국내동향</u>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 및 향후 계획 | 임강륜 |
| 65 | '경관협정 활성화', 공동체 형성부터 | 전인재 |
| 68 | 우수 녹색건축 사례 발굴을 위한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 김재홍 |
| 72 | <u>해외 단신</u> 푸에르토리코 비에케스 섬의 생태 복원 사업 : 미국 해군 군사 기지로부터의 해방, 그 후 10년 | 정수지 |
| 76 | 영국왕립건축가협회, 정부에 건축정책의 필요성 제안 외 | |
| 80 | <u>국내 단신</u>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표준안 배포 외 | |

장소탐방

| | | |
|-----|-----------------------------------|-----|
| 88 | 아픈 수탈의 현장에서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삼례문화예술촌 | 김상기 |
| 100 | 도시를 품어 주고, 생명을 키워 내는 광고호수공원 | 최원만 |

신간소개

| | | |
|-----|---------------------|-----|
| 112 | 〈한옥고치는 책 I - 대청과 방〉 | 이민정 |
| 114 | 〈내일의 건축〉, 〈건축을 걷다〉 | 엄운진 |

auri소식

| | | |
|-----|----------------------|--|
| 118 | 2014년도 수시 · 수탁 과제 소개 | |
| 121 | 포럼 및 세미나 | |
| 126 | 연구소 단신 | |

정책이슈

좋은 공공건축은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문화적 자산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건축은 그 양적·질적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건축기본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건축 건립 방안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리고 지난 6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문을 열며, 보다 효과적인 공공건축 지원을 예고했다. 이번 호는 센터의 개소를 계기로 국민행복을 위한 공공건축의 효율화·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공건축의 역할을 되짚어보고,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 배경 및 운영 방향, 주요 업무, 공공건축 정보체계 구축방안 등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국가공공건축지원 센터의 역할을 알리고, 바람직한 공공건축 건립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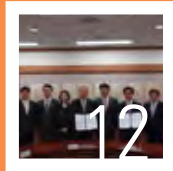
국민행복과 공공건축

PUBLIC BUILDING
AND NATIONAL HAPPINESS



시론 :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공공건축의 역할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공공건축 관련 업무들을 일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조직이 되기보다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지식인들이 좋은 공공건축의 가치와 규범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중추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와 중장기 운영방향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공공건축의 공공적인 가치를 높이는 것, 나아가 이를 위해 공공건축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공공건축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건축 기획력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는 공공건축 초기 사업기획을 내실화하고 전문적인 디자인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기획 내용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도록 규정한 것이다.



현황정보체계(DB) 구축과 활용을 통한 공공건축의 합리적 관리 기반 조성

공공건축 현황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경우 단순히 물리적 실태를 파악하는 것 이상의 효용을 제공한다. 공공건축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건립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련 현황정보관리 체계의 구축과 적극적인 활용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고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 거는 기대

지금까지는 작업 · 생활 · 활동할 공간 · 시설 면적을 확보하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우수한 건축물을 확보하여 우리 삶의 질을 높여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그 나아감의 시작으로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개소에 큰 격려와 기대의 박수를 보낸다.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공공건축의 역할

제해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국민행복과 공공건축

아침 시간, 어린 아이들은 엄마 손을 잡고 동네 어린이집에 가고 학생들은 등교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켄달음으로 학교로 향한다. 직장에는 출근한 여성은 잠깐 시간을 내어 우체국에 들러 지인에게 보낼 우편물을 부치고 점심시간에는 운동 삼아 주변 공원에서 산책을 한다. 연세 많은 어른들은 일주일에 몇 차례씩 복지회관에서 취미활동을 하고 지인들과 소식을 나누며,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들러 건강검진을 받는다. 주말에는 가족이나 연인이 함께 도서관과 미술관을 찾아 문화생활을 즐기며, 때로는 이색적인 볼거리를 즐기기 위해 도심에 위치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찾기도 한다. 요즘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이웃의 삶의 모습이다.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공공건축

‘공공건축’이라고 하면 흔히 정부청사, 시청이나 구청, 의회사나 법원 등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라고 이해한다. 하지만 어린이집, 학교, 우체국, 복지회관, 보건소, 도서관, 미술관 등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들 중 많은 부분이 공공 주도로 계획되고 지어진 공공건축이다. 특히 복지 분야의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공공건축은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공공청사도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담장과 문턱을 낮추고 일반 국민에게 개방되고 있다. 일부 공공건축물은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어 외부인들이 일부터 찾아오는 관광 거점이 되기도 하며, 많은 지자체에서 이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공건축은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양적으로도 크게 증가하였다. 정부와 지자체는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 도보권 이내에 각종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10분 동네 프로젝트’와 같은 공공시설 확충 계획을 앞 다투어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러한 공공시설의 양적 확충이 국민행복 증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공건축의 질적 수준이 담보되어야 한다.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우리의 아이와 청소년들은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하며, 보건소에서는 노인과 환자들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의 공공건축물은 주민들이 자주 찾고 좋아하는, 나아가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바야흐로 국가 권위를 상징하는 공공건축이 아니라 삶의 토대가 되는 공공건축, 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건축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공공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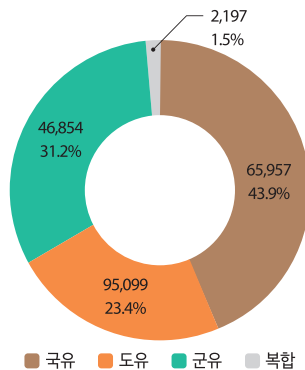
공공건축 우수사례: 2013 신인건축사대상 대상 수상작 풍기읍사무소 전경(©황규백)

우리나라 공공건축의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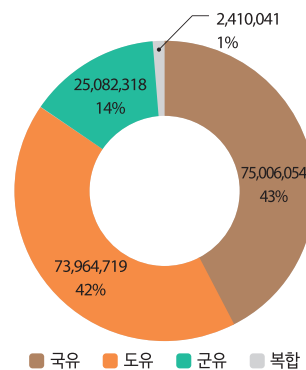
최근의 통계는 우리나라에서 공공건축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2013년 5월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건축물은 약 15만 동이며, 매년 약 6,000동의 공공건축물이 신축되고 있다. 2012년 공공 부문의 국내 건축공사 계약 금액은 17조 1,000억 원에 이른다. 연도별 공공건축 계약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1년 대비 2011년 계약 금액은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공공건축 허가건수와 연면적도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약 140% 증가하였다. 예산은 물론 건축물 동수와 면적 모두 크게 증가한 것이다.

숫자로 보는 공공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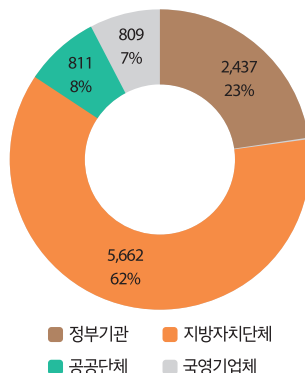
150,107동 전국 공공건축 동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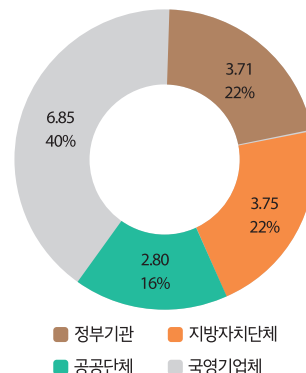
176,463,133m² 전국 공공건축 연면적



10,719건 공공부문 국내건축공사 계약건수(2012년)



17.1조 원 공공부문 국내건축공사 계약금액(2012년)



이렇듯 공공건축 조성 건수와 규모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공공건축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청사를 신축하면서 실제 수요를 훨씬 넘어서 지나치게 거대하고 호화롭게 짓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대형 청사 건축물 입면에 유리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호화청사 논란이 일었던 용인시청의 에너지 효율은 2010년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의 실태 분석 결과 최저로 나타나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최근에는 서울 도심에 서울시 신청사와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들어서면서 주변 맥락과의 부조화, 역사성에 대한 고려 부족 논란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공공건축 건립 이후의 활용과 관리 측면의 문제도 있다.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고 운영되다 보니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행복 실현의 토대로서 공공건축이 지향해야 할 가치

그렇다면 좋은 공공건축이 갖추어야 하는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유럽에서는 근대 국가가 성립되던 18세기 이후부터 공공건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좋은 공공건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가치 규범을 정립하여 왔다. 프랑스에서는 1789년 대혁명 이후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던 시기에 공공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뒤랑(J. L. Durand), 가데(J. Guadet) 등에 의해 법원·시청·학교 등 공공건축물의 규범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적절하게 구성하고 조합하여 새로운 공간 이용 수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실 구성과 이들을 연결하는 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원칙과 모델을 제시하였다. 19세기에는 기념비적 성격이 중요시되어 도시 공간에서 공공건축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주변 지역을 정리하고 전면에 광장이나 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는 등 공공건축에 대한 규범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공공건축에 대한 규범 논의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서구에 비해 우리나라는 좋은 공공건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공공건축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공공건축은 디자인, 성능, 비용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이는 뒤라미 건축물의 목표로 언급한 경제성(economy)과 효율성(utility)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 공공건축은 무엇보다 국민들이 목적에 맞게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공사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지어져야 한다. 또한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적 요구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공공건축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하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화려하고 복잡한 디자인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로 잘못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공공건축에 있어서 디자인은 미적 측면이라기보다는 윤리적 측면에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본래의 프로그램에 부합하게 공간이 합리적으로 계획되고 사용자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프로그램 결정 과정과 건축 계획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합의가 전제되고 합리성이 담보될 때 좋은 공공건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좋은 공공건축 조성을 위한 과제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개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공건축의 가치와 규범을 사회적 합의 속에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일이다. 호화청사 논란, 과도한 디자인과 에너지 효율 저하에 대한 비판, 잘못된 기획으로 이용률이 떨어지는 공공시설에 대한 문제 제기 등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비판과 논의들은 공공건축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지난 3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으며, 이후 6월 23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법정센터로 지정되어 공식 업무를 시작하였다. 국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 일상적 삶의 토대가 되는 공공건축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좋은 공공건축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 및 공사 단계, 준공 이후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디자인 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며 국가 예산 활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들을 수행할 계획이다.

좋은 공공건축 규범
논의의 구심점(중추)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공공건축의 역할

부산 푸른솔 경로당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와 중장기

운영방향

차주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센터장

좋은 공공건축의 조건

‘좋은 공공건축’은 여러 가지 여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건축의 고유한 기능에 충실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도서관은 충분한 양의 도서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필요한 도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병원은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는 설비와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쾌적한 치유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공공청사는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좋은 공공건축은 우선적으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편리하고 쾌적해야 하며, 사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필요한 공공기능을 충족시키는 쾌적한 공간을 확보한 것만 가지고는 좋은 공공건축이라 하기 어렵다. 공공건축은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고, 공공의 자본으로 만들어지고, 공공에게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상징성도 크다. 그렇기에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는 신기술을 도입한다든지, 랜드마크적인 상징성을 부여해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거나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선도적으로 친환경기술을 도입하거나 무장애공간을 설치하는 것, 그리고 건축자산으로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아가 좋은 공공건축은 오랫동안 사용되어야 한다. 이는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한 시대의 건축문화를 대대로 이어간다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이와 같은 ‘좋은 공공건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기술과 경험이 많은 우수한 설계자와 시공자가 참여하여야

공공건축의
영향력과 상징성

하고, 기획에서부터 설계와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예산과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사용자를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고, 이에 맞게 건축물의 보수와 수선을 비롯한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가 필요하다.

흔히 좋은 공공건축은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값싼 땅에 최소한의 규모로, 값싼 재료와 공법을 이용하여 조성한다. 하지만 그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향후 증축으로 생기는 추가적인 비용과 냉난방 등의 유지·관리 비용을 생각하면 저렴하게 지은 것이 결과적으로도 예산을 절감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건축물이 처음 기획되어서 사용되는 단계까지 드는 모든 비용을 고려해 디자인할 때, 우리는 보다 좋은 공공건축을 조성하게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품격 높은 공공의 자산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공공건축물의 조성과 사용, 유지·관리 단계까지 모두 고려한 것을 ‘공공건축의 생애주기 관리’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생애주기를 고려한 공공건축의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공공건축사업의 기획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도 많지 않고, 부실한 기획으로 인해 설계단계에서 잦은 변경과 시공의 문제가 초래된다. 무엇보다 기획단계에서 추구하는 건축물의 질이 명확하지 않아 예산이 너무 많게 또는 너무 적게 책정되는데, 이로 인해 예산의 낭비나 부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된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건축의 공공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공공건축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공공건축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배경과 추진 경위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내에 독립적인 센터로 2014년 3월 연구소 규정 개정을 통해 처음 설립되었으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2014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함에 따라 법정센터로 출범하였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은 오랜 준비기간과 사전 논의를 통하여 탄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처음 설립되던 2007년부터 공공건축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관련 연구와 포럼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좋은 공공건축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안하였다. 특히 공공건축물 조성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과 무엇보다 기획단계 내실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수행한 공공건축 관련 연구 현황

| 연도 | 제목 |
|------|---|
| 2007 | ● 공공건축의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추진 방안 |
| 2008 | ● 장소의 가치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통합화 방안 연구 |
| 2009 | ●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운영 방안 연구 ●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디자인 품질지표 개발 연구 ● 공공건축을 통한 영주시 도심재생 방안 연구 ● 공공건축 설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디자인 행정 지원 방안 |
| 2010 | ●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 관리시스템 구축 연구 ●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건축 프로세스 개선 및 에너지 효율 제고 방안 |
| 2011 | ● 중소도시재생을 위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활용방안 ●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
| 2012 | ● 공공건축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 시범 적용 및 제도화 연구 |
| 2013 | ● 공공건축 활용성 증대를 위한 관리 정책 연구 |
| 2014 | ● 여건 변화에 따른 공공청사 계획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제고를 위한 설계발주제도 개선 방안 |

공공건축
총괄관리기구의
필요성 논의

이러한 연구 성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2010년 11월 ‘공공건축 총괄관리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대통령 보고를 하게 되었고, 공공건축 총괄관리기구 설치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협동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추진에 대해 대통령 보고를 하였다. 2013년부터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을 일반사업으로 편성하여 진행하면서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통합계획 수립 지원, 설계공모 대행, 공공건축 기획업무 지원 등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내실화를 위한 시범사업들을 다수 진행하였다.

2013년 6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규정이 포함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어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이 본격화되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그간의 연구 성과와 당시 수행 중이던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을 바탕으로 연구소 내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를 2014년 초 설립하였고, 2014년 6월 5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6월 23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내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법정센터로 지정받게 되었다.

2013년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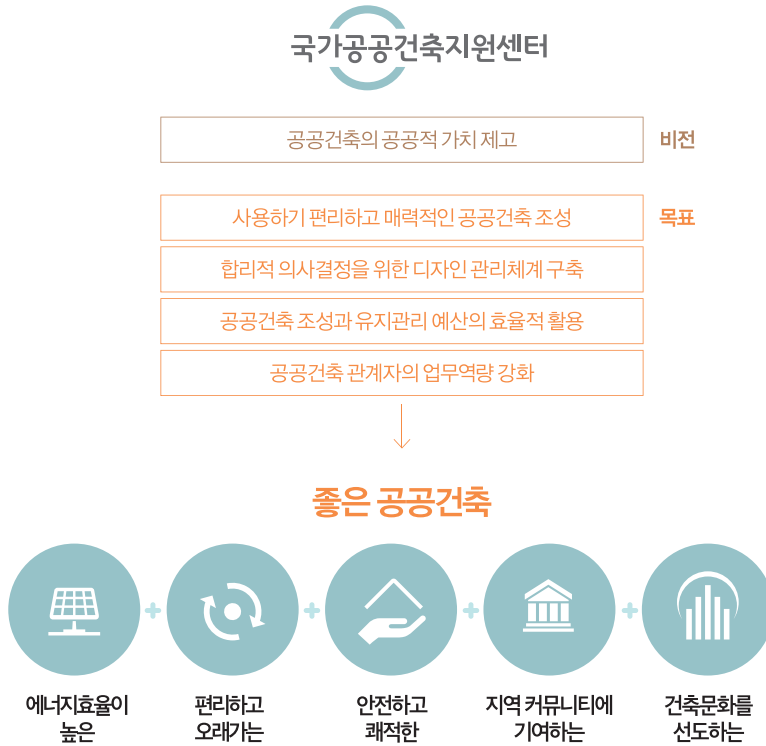
| 구분 | 주요 내용 |
|-----------------|--|
| 자문 및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TRA 등 공공건축 관련 자문 ●외교부 해외공관 건립 자문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건축도시디자인관리체계 구축방안' 발제 |
| 공공건축 DB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상 수상작을 대상으로 20개의 우수공공건축 사례 조사 ●익산시 및 강릉시의 공공건축 공간정보 DB 구축 |
| 공공건축 통합계획 수립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교부 소관 국유재산 활용 기본계획 관련 현황 조사 ●익산시 도농복합도시 모델 구축을 위한 도심재생과 공간특화발전전략 수립 지원 ●강릉시 강릉도심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 공공건축 기획업무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교부 미대사관 활용에 대한 프로그램 기본구상 기획 지원 ●수원시 물체협관 건립 사업 프로그램 기획 수행 지원 |
| 공공건축 설계공모 대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체육관 신축 설계공모 대행 ●KOICA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직업훈련교육원 신축 설계공모 대행 ●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설계공모 대행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비전은 우리나라 공공건축의 공공적인 가치를 제고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사용하기 편리하고 매력적인 공공건축을 조성하고, 나아가 공공건축의 자산적인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좋은 공공건축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며 첫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디자인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공공건축 조성·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며 셋째, 공공건축 조성·관리에 참여하는 관계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 분야

| | | |
|------|--|---|
| 법정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공공건축 관련 자문에의 응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건축 관계자에 대한 교육 ●공공건축 DB 구축 |
| 연구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주기에 따른 공공건축 관리시스템 구축 연구 ●공공건축 관련 기준 및 사례 연구 ●공공건축 관련 제도 개선 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건축 관련 매뉴얼 개발 ●연구결과 실증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크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명시된 법정업무와 앞서 언급한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거나 개선해 나가기 위한 연구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법정업무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와 제24조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공공건축 관련한 자문의에 응답, 공공건축 관계자에 대한 교육 실시, 그리고 공공건축에 대한 DB 구축이 포함된다.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는 공공건축 사업 기획단계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검토하는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건축 사업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 방향의 결정과 예산계획, 그리고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친 일관성 있고 전문성 있는 디자인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공공건축의 품질과 품격을 제고하기 위해 성능과 디자인, 그리고 예산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설계변경이나 예산낭비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상의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 ① 공공기관은 건축물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절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
-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자문할 수 있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해당 공공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기관은 예산편성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를 추진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검토의 절차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공공건축지원센터)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공공건축의 발주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2. 공공건축의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3. 공공건축의 디자인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4. 공공건축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5. 공공건축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6.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7. 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정부는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 및 임직원의 의무 등에 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공공자산으로서의 공공건축이 갖는 가치를 높이기 위함이다.

‘공공건축 관련 자문의 응답’은 공공건축의 조성과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문 업무로 △공공건축의 기획에 필요한 사항 △공공건축 발주방식과 디자인 관리 방안 △공공건축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공공건축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사항

공공건축 관련
자문의 응답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발주처의 기획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업무다.

‘공공건축 관계자에 대한 교육’은 공공건축의 기획과 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건축 교육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공공기관의 관계자와 공공건축 설계를 담당하는 실무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공공건축의 조성과정과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필요한 기준 등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이를 위해 교육프로그램과 매뉴얼을 개발하고 배포하며,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건축 DB 구축

‘공공건축 DB 구축’은 공공건축 자산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고도화하여, 국내 공공건축 관련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나아가 공공건축의 조성과 관리에 참여하는 관계자가 해당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가공하고 배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공공건축 관련 통계 DB, 지리정보에 기반한 공공건축 DB, 국내외 공공건축 관련 기준 DB, 우수한 공공건축 조성사례 DB, 공공건축 생애주기 관리 기반 DB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연구업무에는 생애주기에 따른 공공건축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 공공건축 조성이나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그리고 공공건축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등이 포함된다. 나아가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실증적으로 적용하고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과 공공건축 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강릉시 MOU 체결



영주시 설계공모 관련 회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관계자 교육



수원시 물체험관 조성 기획회의

‘생애주기에 따른 공공건축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연구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고, 개별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공공건축 관리체계를 통합·연계할 수 있는 공공건축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별 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연구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수행했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기획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사후평가제도의 개선과 확산을 통해 공공건축이 공공자산으로서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공공건축의 전생애주기 관리시스템을 완성해 나가고자 한다.

전생애주기
관리시스템 구축

‘공공건축 관련 기준과 사례’와 관련한 연구는 공공건축의 조성과 관리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과 매뉴얼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로, 현행 기준의 운영현황과 선도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분야다.

공공건축 관련 기준 및
사례 제공

‘공공건축 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한 연구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법정업무와 연구업무, 그리고 시범사업 사례 등을 토대로 공공건축 조성과 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업무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중장기 운영방향과 과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우리나라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공공건축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공공건축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장기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기획력을 제고하고, 공공건축의 설계와 시공을 발주하고

관리·감독하는 디자인관리체계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유지·관리의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좋은 설계자와 시공자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과 건설산업의 기술력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실현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는 현재 그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업무와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제도를 정착시키고,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자문의 응답 업무와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나아가 공공건축 DB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공공건축의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동안 쌓은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공공건축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공공건축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성과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실행 가능한 전략과 과제를 제안하며, 제도적인 개선방안들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본 제도를 정착·확산시키는 데에도 힘쓸 것이다. 일례로 발주업무와 관리업무, 사후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이나 중앙정부 공공청사의 구성과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청사관리소 등의 중앙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지방의 연구기관과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공건축의 생애주기 관리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공공건축 기획력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

김은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건축물의 기능을 규정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건축물의 소유나 조성 주체에 따른 구분은 정치·경제·사회 활동에 보다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기준으로, 국가와 개인에게 깊은 상관성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이 소유한 건축물 등을 민간건축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이 조성하고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공공건축이라 구분한다*.

공공건축은 민간건축과 달리 국가 운영의 거점으로서,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복리증진 등 사회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관리와 지원의 차원에서 조성된다. 이는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한 공유 재산임과 동시에 국민의 다양한 사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기능하며,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건축 품격과 품질을 필요로 한다.

공유 재산으로서
공공건축

그동안 「건축기본법」과 「경관법」이 제정되고 각종 시범사업과 지침이 마련되는 등 공공건축의 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와 각계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럼에도 공공건축 조성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과 공기지연 등의 불합리나 에너지 효율 및 공간배분의 불균형,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디자인으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의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공건축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산적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

문제의 원인을 특정 집단이나 공공의 불합리한 행정시스템으로만 단정하여서는 안 되겠지만,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공공기관의 초기 기획력 부족이나 업무체계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은 건축 분야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공공기관이 디자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못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는 공공건축 초기단계의 사업기획 내실화와 합리적인 디자인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하였고,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공공건축의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201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가 현재 관련 법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대상 및 주요 내용

1)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기관 및 사업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공공건축 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적용 대상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수는 38개 국가행정부처를 포함하여 982개가 해당된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 1항에 의거하여 2014년 6월 23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내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http://www.npbk.or.kr)를 설치하고 사업계획서 사전검토와 더불어 공공건축 조성과정에서 발주, 기획 및 관리, 디자인 관리,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유지·관리 등에 관한 자문 응대,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공공건축 DB 구축 관련 법정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기관

| 구분 | 국가기관 | 지방자치 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합계 |
|------|------|---------|----------------------------|--------------------|-----|
| 기관 수 | 38 | 244 | 304 | 396 | 982 |

한편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사업은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이상인 건축물이다. 다만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와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경우는 제외된다. 기타 지역자치센터, 유치원, 노유자시설 등 국민의 일상적 활용도가 높은 용도의 건축물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2011년 공공건축 건립 현황을 토대로, 연간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 약 530건과 면제대상 약 270건을 제외하면 사전검토 대상 건축물은 연간 250여 건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

| 총 공사비 | 2011년 기준 | 검토제도 | | |
|---------------------------------------|----------|--|--|--|
| 1,000 500 200 100 50 0 | 13건 | 예비타당성조사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 | 타당성 조사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건축비 300억 원 이상 | 사업계획 사전검토 면제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건축비 300억 원 이상 |
| | 35건 | | | |
| | 103건 | | | |
| | 119건 | | | |
| | 257건 | | | 우선적용 |
| | 11,347건 | | | 확대 적용 |

*
2014년 9월 기준 2억 3,000만 원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2호

2)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내용

공공건축 사업계획은 시설 수요에 적합한 기능과 규모와 사업비, 사업특성에 맞는 발주방식을 결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디자인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발주기관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및 목적, 디자인방향, 예산,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에 대한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발주방식', '디자인관리 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발주기관은 건축설계부터 시공과 유지·관리까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계용역 발주 전에 명확한 사업의 범위와 방향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발주 시에는 설계지침서 등을 통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사업을 추진할 때 발주자가 스스로 해당 업무를 파악하고 사업기획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발주기관의 경우 각각의 사업특성에 부합하는 예산계획과 이의 집행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의견을 제공받음으로써 설계 및 시공 등 향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합리적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추후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측하여 대응방향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실행과 활용

1)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시작된다. 신청방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앞서 서술한 주요 사업계획 내용을 포함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공공건축지원센터 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신청서는 법 시행령에 별첨된 양식을 준용하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마련해 시행 중인 세부계획서를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세부계획서는 앞서 설명한 대로 법에서 명시한 사업계획 내용을 준용하되, 해당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업추진 시 필요한 계획 요건으로 논리적으로 재구성되어 있다.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의 세부내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 |
|----------------------------|
|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 발주방식 |
| 디자인관리방안 |
|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 |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의 세부 내용

| | |
|------------|--|
| 사업개요 | 사업의 목적/ 사업추진경위/ 향후일정/ 부지현황 및 특성/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 건축디자인 기본방향 | 배치계획의 주안점/ 규모,공간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품격제고 관련사항/ 기타사항 |
| 예산 | 예산계획/ 재원조달 및 집행계획 |
| 디자인관리방안 | 발주방식/ 관리체계 |

사전검토 신청 후 대상 사업의 대지 위치 또는 건축물의 주용도가 변경되거나 건축물 연면적의 20% 이상 또는 총 사업예산금액의 20% 이상 증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발주기관의 장은 사전검토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을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하여야 할 경우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이미 제출한 사전검토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수행

사전검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신청서 작성 및 사업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 가이드'와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를 발행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자문 요청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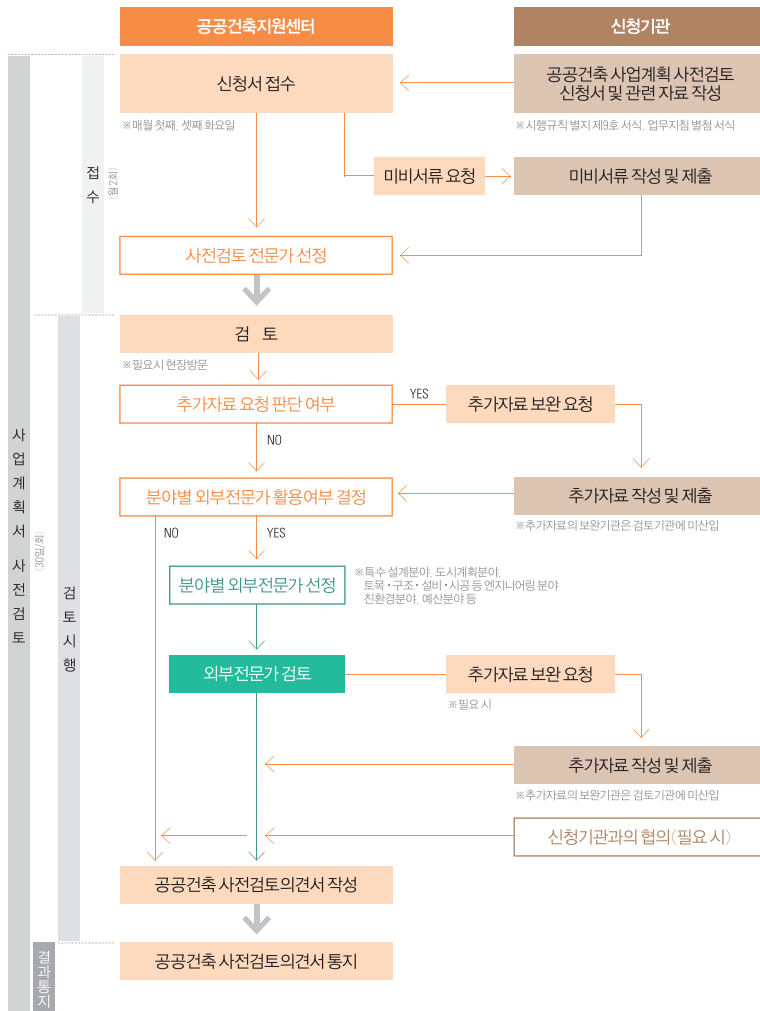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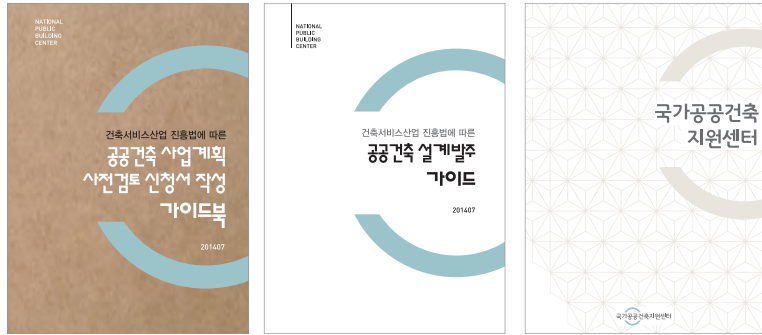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

수시로 대응하는 등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할 각종 요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지원하고 있다.

한편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이 요청한 사전검토 신청서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4항에 따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여야 하고 이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접수일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 원칙에 따라 매월 첫째와 셋째 화요일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신청서 검토과정에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기간은 사업계획 사전검토 기간에서 제외한다.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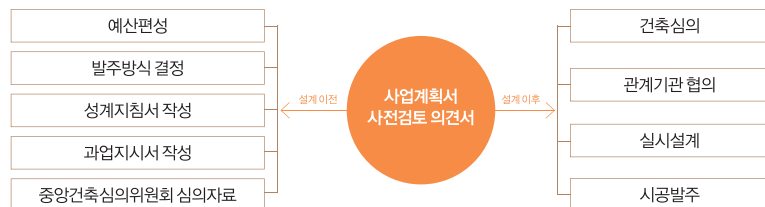
사전검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검토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와 자료 등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의 활용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가 완료되면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소관 업무를 추진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설계용역발주 이전에는 예산편성,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의 작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설계발주 이후에는 실시설계 및 시공발주 시에 과업지시서의 작성이나 「건축법」 제4조의 2에 따른 건축심의자료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만약 발주기관이 설계공모 우선 적용 대상 사업을 다른 방식으로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통하여 이의 당위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이때 추정 설계용역비가 5억 원 이상이면 사전검토 이후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과업지시서 작성 및
건축심의자료 등에
반영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의 활용 방안



▶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 건축물을 사전검토를 거쳐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사전검토 내용을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자료로 제공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발주자가 대상 사업의 설계범위와 방향, 그리고 공사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초기부터 구체화하기 위한 사업계획단계의 업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발주자가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기능과 성능, 품질의 수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설계변경이나 공기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마다 일부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건축 분야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사전검토 지원이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 반하여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공공기관에 부과된 ‘또 다른 행정절차’ 또는 ‘옥상옥’이라는 관계기관의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본 제도가 외형상 1개월의 법정 업무기간을 필요로 하고,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여, 2014년도 하반기 예산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로부터 기인한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불편을 회피하기 위하여 추정설계비를 조정하거나, 법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별도의 조치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일부 나타났다.

여기서 법적 이행 여부에 대한 규제는 향후 국토교통부의 법 개정을 통하여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이지만, 본 제도에 대한 공공기관의 근본적 오해를 불식하고 사업계획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것은 모두가 선결해야 할 과제다. 사업계획의 전문성과 이를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 향상에 얼마나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하고 스스로의 역량 강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즉각 담보할 수는 없지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와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공공건축 사업추진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합리적인 공공건축
사업추진 환경 조성

참고문헌

- 1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지침」, 2014.
- 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 가이드」, 2014.
- 3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발주 가이드」, 2014.
- 4 김은희·차주영,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의 시행과 정책효과”, 『auri brief』 92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4.

현황정보체계(DB) 구축과 활용을 통한 공공건축의 합리적 관리 기반 조성

임현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현황정보체계(DB) 구축의 필요성

그동안 공공건축에 관한 문제점*들이 공론화되고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들이 강구되고 있다. 특히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기획 단계의 지원업무는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노후 공공건축물의 비중과 기존 시설에 대한 관리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부실한 현황 정보로 인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건축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또한 주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개선 과제임이 분명하다.

전국적으로 15만여 동으로 추정***되는 공공건축물은 그 정보가 관련 주체 및 활용 목적에 따라 건축물대장, 국공유재산관리대장, 시설편람 등의 일부로 개별적·파편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조성·설치·운영에 관한 실태 파악이 어려워 업무 추진 시 합리적 판단 근거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정보의 부실과 오류, 자료 간 중복 및 불일치, 필요 자료의 항목 부재 등은 공공건축 전반에 적용되는 고질적인 문제****이며 건축물의 질적 수준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된다. 반면 공공건축 현황정보를 체계적으로

노후 공공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에 대한
관리 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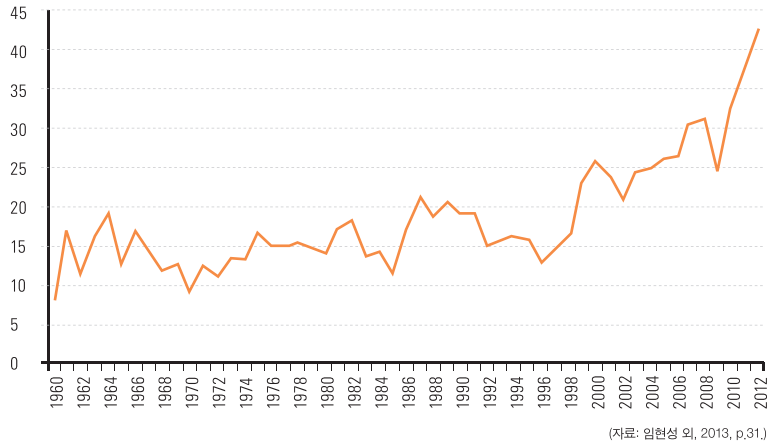
* 생활거점 기능 확보 미흡, 창조적 공간계획 부족, 시설 중복 및 연계성 저하, 자산(asset)으로서 종합적 성능확보 부족 등, 서수정 외(2007) 「공공건축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80~87.

** 임현성 외(2013), 「공공건축 활용성 증대를 위한 관리 정책 연구」, pp.30~31.

*** 임현성 외(2013) 전계서, p.31.

**** 임현성 외(2013) 전계서, p.172.

신축 대비 노후 공공건축물 증가 추이(196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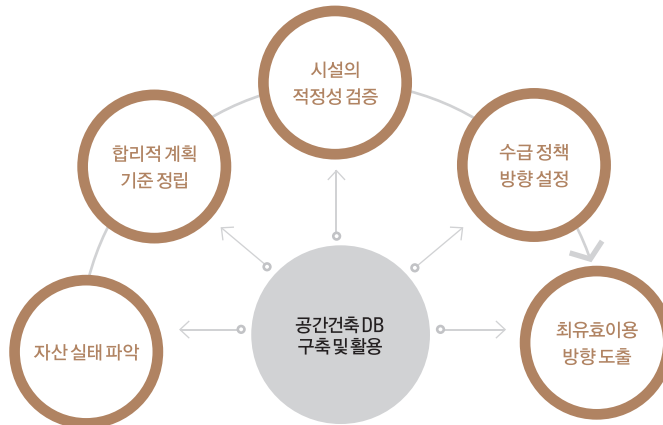


공공건축 현황정보의
구축 및 활용효과

관리할 경우 단순히 물리적 실태를 파악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발생한다. 구축된 현황정보를 바탕으로 공공건축 수급(supply-demand)정책의 기본 방향을 가늠할 수 있으며, 인구·지리·지역 정보 등 각종 관련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프로그램·규모·입지의 적정성 등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축적된 물리적 현황을 기초로 합리적인 계획 기준을 정립하고, 운영 현황의 객관적 진단으로 가장 유효한 이용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결국 공공건축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건립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련 현황정보의 관리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활용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효과를 바탕으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에 대한 현황정보체계(DB) 구축을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설정하고 그 실천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공공건축 현황정보체계의 예상 효과



현황정보체계(DB) 운영 원칙

공공건축 현황정보 관리 업무를 크게 조사·구축·활용으로 구분할 때 운영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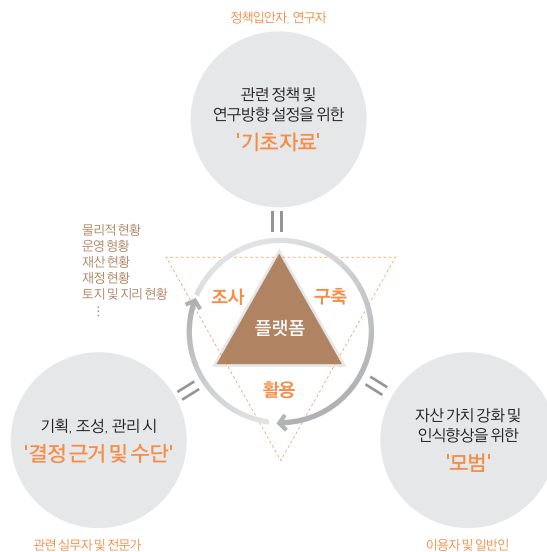
첫째, 중장기적 차원에서 점진적인 자료의 구축과 단계별 추진방안이 요구된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이하 세움터)를 비롯한 공공건축 관련 현황정보는 실제와 오차가 크고 부정확한 정보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당 정보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재조사 또는 전수조사 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이를 무시하고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한다면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만이 양산될 뿐 자료의 효용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뢰도 확보가 용이한 정보의 우선순위에 따라 중장기 추진 로드맵을 정립하여 자료의 구축과 공개, 활용 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황정보 플랫폼(Platform)을 공유하여 기존 관련 정보를 일원화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물리적 정보는 ‘세움터’, 운영비용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재산정보는 ‘세출행정시스템’, 토지 및 지리정보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으로 관련 전산시스템과 정보가 분산·개별화되어 건축물은 하나의 자산 단위로 효율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사 업무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등으로 대상과 목적에 따라

현황정보체계
구축의 중장기 추진
로드맵 정립

현황정보 플랫폼을
통한 정보의 일원화

공공건축 현황정보 관리체계 운영 모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 2항 7호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한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시설물 단위로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일원화된 현황정보 플랫폼의 구축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부처와 연구기관의 입장에서는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한 현황분석과 통계자료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지방정부와 시설관리자에게는 공공건축 기획·조성·관리 시 합리적 결정 근거 및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인 또는 이용자들에게는 공공건축물의 가치를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하여 우수시설이 확산될 수 있는 사회적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관련 주체별 요구를 고려하여 현황정보는 업무지원 및 인식확산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현황정보체계(DB) 관리 전략

현황정보체계의 관리 전략은 크게 장소(place) 기반의 통합적 관리, 생애주기(total life cycle) 기반의 지속적 관리, 모범사례(exemplary cases) 기반의 선도적 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1) 장소(place) 기반의 통합적 관리

건축물은 실제 지리를 기반으로 위치하고 주변의 현황과 수요를 고려하여 건립된다. 특히 공공건축은 민간시설에 비해 지역성과 공공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만큼 건축물 정보는 주위 여건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상태로 구축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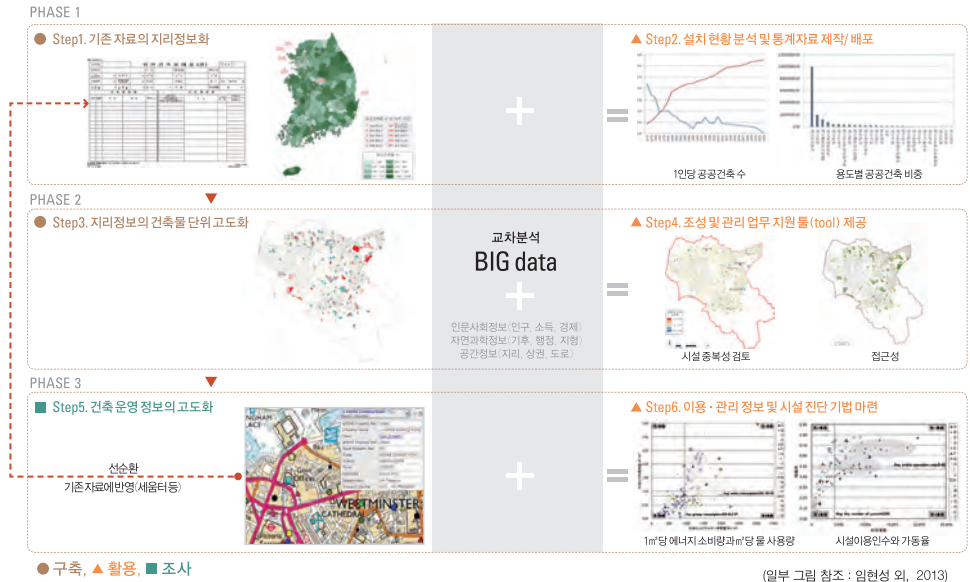
하지만 현재의 공공건축 현황은 개별 건축물의 물리적 정보가 텍스트(text) 위주의 서류로 관리되고 있어 지리적 특성 및 여건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도시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시설 분포, 밀집도, 지역 수요-공급 특성, 접근성, 유사시설 중복성 등의 파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건축물의 물리적 현황 이외에 이용·운영·재정·재산 정보 등의 종합적인 자산 실태를 파악하기 힘든 점도 한계다.

따라서 기존 정보를 지리 기반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물리적 정보에서 나아가 다양한 자산 정보의 보완을 통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추진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기존 자료의
지리 기반 전환

조준배 외(2008), 「장소 가치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통합화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20~21.

장소 기반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



1차적(phase1)으로 '세움터'에서 추출이 가능한 주체별 공공건축(국가 및 지방정부 소유) 정보를 지리정보로 전환(step1)하고 관련 빅데이터(Big data)와의 교차분석을 통해 전국 단위 현황분석을 실시(step2)하여 공공건축 조성 현황 파악 및 향후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전국 단위
공공건축 현황분석 및
통계 산출

2차적(phase2)으로는 기존 지리 기반의 정보를 건축물 단위로 구체화하고 그 대상도 국·공유 건축물에서 공공기관의 건축물로 확대(step3)한다. 이를 바탕으로 발주자가 기획단계 등에서 개략적인 규모, 입지, 프로그램, 예산 등을 추정하여 건립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업무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step4)한다.

기획단계 업무 지원
프로그램 개발

마지막으로(phase3) 기존 공공건축 현황 자료를 재조사(또는 전수조사)하여 건축물의 이용·운영 현황, 관리 상태 정보 등을 추가(step5)한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 운영 상태와 관리 정보를 구축하고 시설 진단 및 관리 지원 툴(tool)을 개발하여 관련 업무를 지원(step6)할 수 있다.

관리단계
시설 진단 툴
개발

상기의 추진과정을 통해 '세움터'를 비롯한 기존 관련자료는 신뢰도가 확보되고, 공공건축 현황정보체계는 더욱 그 효용가치가 커지게 되는 선순환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2) 생애주기(total life cycle) 기반의 지속적 관리

공공건축이 본연의 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자(건축주, 시민, 관리자, 관련 부처 등) 간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초기 의도된 사항이 조성·관리 단계에까지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공건축의 조성과 관련한 근거 법령이 절차마다 상이*하고 추진 과정에서 이를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생애주기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현황정보의 활용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추진방안의 모색이 가능하다.

생애주기 모니터링
수단 제공

첫째, 기획 의도의 지속적인 구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수단을 제공(part1)하는 것이다. 공공건축의 조성 절차를 기획·설계·시공·운영의 4단계로 구분하였을 때 단계별(또는 단계 내에서)로 결정되는 사항들의 이후 과정에 반영 및 계획사항의 변경 여부 등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기획 단계에서는 사전검토(「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또는 타당성 조사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지방재정법」 결과, 설계 단계에서는 건축심의 (허가·신고, 「건축법」) 결과, 시공 단계에서는 준공(사용승인, 「건축법」) 결과, 운영 단계에서는 사후평가(「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국공유재산실태조사(「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결과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수행되는 기획 자문 및 사전검토 대상에 한해 향후 조성 주요업무에 대한 결과를 추적·확인하여 기획 의도의 반영 여부를 파악하며 장기적으로는 이를 공공건축 시설 평가에 활용하거나 기획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항목들을 고도화하는 기초자료로 반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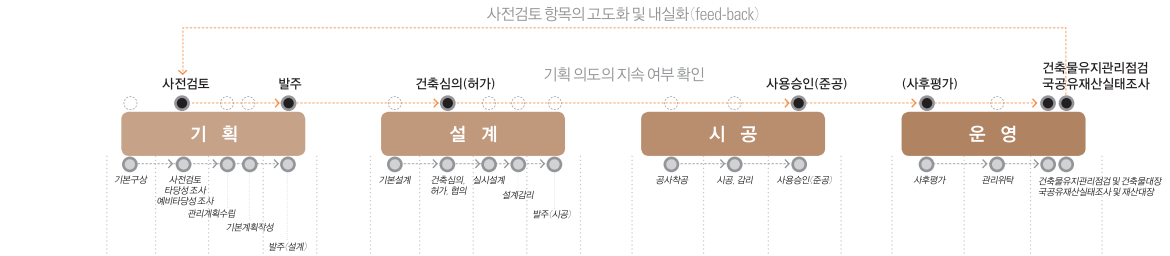
통합 지침 및
매뉴얼 작성·배포

둘째, 절차별 주요 지침과 매뉴얼을 체계화하여 이를 제공하고 나아가 통합 지침 및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는 것(part2)이다. 공공건축은 용도·규모·지역별로 그 조성 과정이 복잡하여 비효율적인 업무 진행과 혼선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원활한 조성 업무와 발주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 절차별 주요 법령·지침 등을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종합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제공되는 법령 기준은 조성 과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목과 용도·지역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항목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업무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향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주요 용도별 또는 유형별로 발주자 통합 가이드라인 등을 제작하여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초 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서수정 외(2007) 전제서, p.31.

생애주기 기반의 지속적 관리 방안

Part1. 일관성 있는 조성관리 업무 기반 마련



Part2. 주요 절차별 업무 지침 및 매뉴얼 제공 (지역별, 유형별 세분화)

| | 구상 | 검증 | 구체화 | 발주준비 | 설계 | 허가 | 구체화 | 발주준비 | 착공 | 시공 | 준공 | 평가 | 운영 | 점검관리 |
|----------------------|----|----|-------|------|----|----|----------|------|----|-------|----|-----|----|-------|
| 관련기준(a, b, c...) | a1 | a2 | a3 a4 | a5 | b1 | b2 | b3 b4 b5 | | c1 | c2 c3 | c4 | d1 | d2 | d3 d4 |
| 관련법령(@, #, \$, %...) | @ | A' | % | A'' | B' | \$ | B'' | & | | & | % | #S% | | |
| 업무매뉴얼(A, B, C) | | | | | | | B''' | | | C | | | D | |

3) 모범사례(exemplary cases) 기반의 선도적 관리

공공건축물은 건축의 공공성과 우수성을 대변하는 대표성을 갖는다. 영국 CABE 등에서는 우수 공공건축 사례를 발굴·포상·홍보함으로써 이러한 선도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모범적인 공공건축 사례의 발굴과 축적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가치를 고양하며 좋은 공공건축의 양산을 유도하는 촉매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는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비롯하여 관련 기관, 건축 유형, 지역별로 다수의 건축물 시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준공 결과와 운영 상태에 대한 평가만으로 시설을 선정하는 경향이 있어 합리적 추진과정이나 발주자·시민·설계자 등 관계자들 간의 적극적인 협의 과정이 평가에서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민간건축물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건축만의 최적화된 평가기준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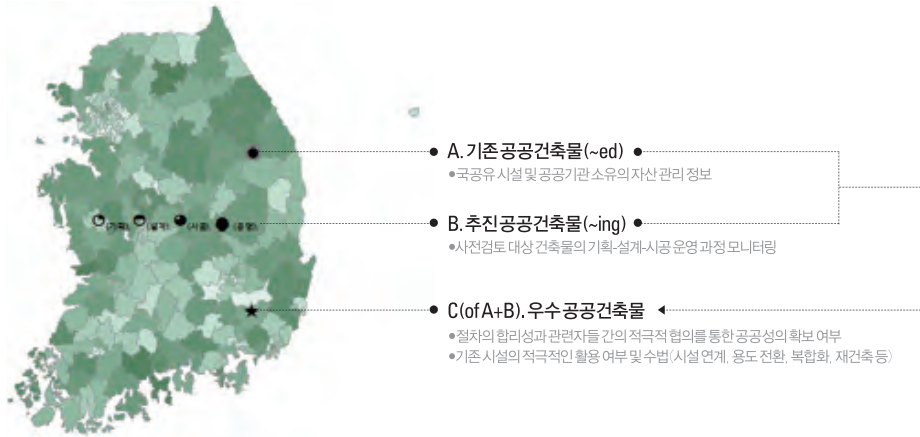
따라서 공공건축의 조성 과정을 평가하고 추진 과정의 합리성을 중심으로 우수 공공건축물을 발굴·축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건축에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평가기준과 방법이 정립되어야 하고, 절차별 추진 과정에서의 합리성과 공공성이 충분히 검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생애주기 기반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갖춰질 모니터링 체계는 모범사례의 선정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모니터링과 사후평가

우수공공건축
발굴·축적

* 한국건축문화대상, 한국건축전, 한국건축가협회상, 김수근 건축상, 서울특별시 건축상, 대한민국공간 문화대상,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등

모범사례 기반의 선도적 관리



예시) 윤동주 문학관



기획단계

폐기압장을 활용하기 위한 기획구상에서부터 설계자 선정과 전문가들과 소통

계획설계단계

설계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시공단계

난이도 있는 철거작업으로 인한 어려움 컨소시엄으로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

운영단계

개관 이후 1년 동안 약 7만 명 방문 방문객수 과다로 화장실 부족, 향후 화장실 추가 건립 검토 예정

기존시설 또는 대지 사진
관련자 회의록
기획검토서 등

과업지시서(설계지침서)
포토샵 디자인(스케치)
설계도면
설계 협의과정(인터뷰)

시공과정(사진)
관련 주체별 역할 및 애로(인터뷰)
공정 및 감리(보고서)

사후평가결과
운영현황 분석 결과
이용자 평가(인터뷰)
활용도 진단 결과

사례가 축적될수록 추진 과정에서의 우수성을 담보한 공공건축물 사례는 많아질 것이고, 타 시설 조성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건립이 완료된 기존 공공건축물 중에서도 시설 간 연계, 용도 전환, 복합화, 재건축 등 적극적인 시설의 활용을 꾀하는 사례들을 발굴하여 관리자들에게 다양한 관리 방안과 활용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고 시설의 유효이용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맺음말

현황정보체계(DB)의 구축과 활용을 위해서는 원천 자료의 고도화와 각 정보들의 공개·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주요 정보 출처로서

* 일본의 경우 공공재산의 다양한 활용사례를 발굴하고 적절한 관리 방향을 모색하고자 'PRE(Public Real Estate)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안내서'를 발간, 배포하고 있다.
(참조: 임현성 외, (2013), pp.227~232.)

시기별 추진방안

| 구분 | | 당해(2014년도) | 차년도(2015년도~) |
|-----------------|--------------|--|---|
| 장소기반의 통합적 관리 | 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단위 시설 설치 및 분포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기반의 공공건축 현황관리를 위한 플랫폼 시범 구축 |
| | 관련 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우터 자료 (국유·도유·군유 시설)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기타 BIG dat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건축 이용 및 관리 현황 고도화 운영비용, 재산정보, 도시계획 현황 정보 등 |
| 생애주기 기반의 지속적 관리 | 모니터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자료 협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 구축 |
| | 법령 및 지침통합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차별 관련 법령 및 지침 취합·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건축 조성 통합 매뉴얼(지침) |
| 모범사례기반의 선도적 관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 공공건축 선별 기준 정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본 사례 발굴 및 홍보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 공공건축 발굴/지정(시상) 모니터링을 통한 우수 사례 시범 선별 |

‘세우터’를 입력·관리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재산관리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청(재산관리관)의 적극적인 참여는 필수적이다. 정보관리 주체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황정보체계(DB)를 통한 업무 개선 효과와 가능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시범사업의 추진이 요구된다. 특히, 공공건축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또는 중앙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관련 정보를 취합·정제·통합하고 기획업무 지원, 자산실태 진단, 지역단위 통합관리의 수단으로서 현황정보체계(DB)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여 그 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관리 주체의
자발적 참여 유도

더불어 공공건축 정보는 건물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이하 BIM)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를 활용한 선제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통합설계의 수단으로서만 인식되고 있는 BIM을 도입 취지에 맞도록 전생애주기 관리 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BIM 제출도서의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GIS와의 연계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지리+건축 정보체계’가 중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겠다.

BIM 활용

지리+건축
정보체계 마련

상기의 시범사업과 중장기 추진 방안을 위해서는 DB는 단순히 정보의 관리라는 측면이 아니라 기획자·설계자·연구자·관리담당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건축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로서 인식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중추적 역할과 역량의 강화를 기대해본다.

2016년 이후 조달청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 발주 사업에 건물정보모델링(BIM)이 의무적으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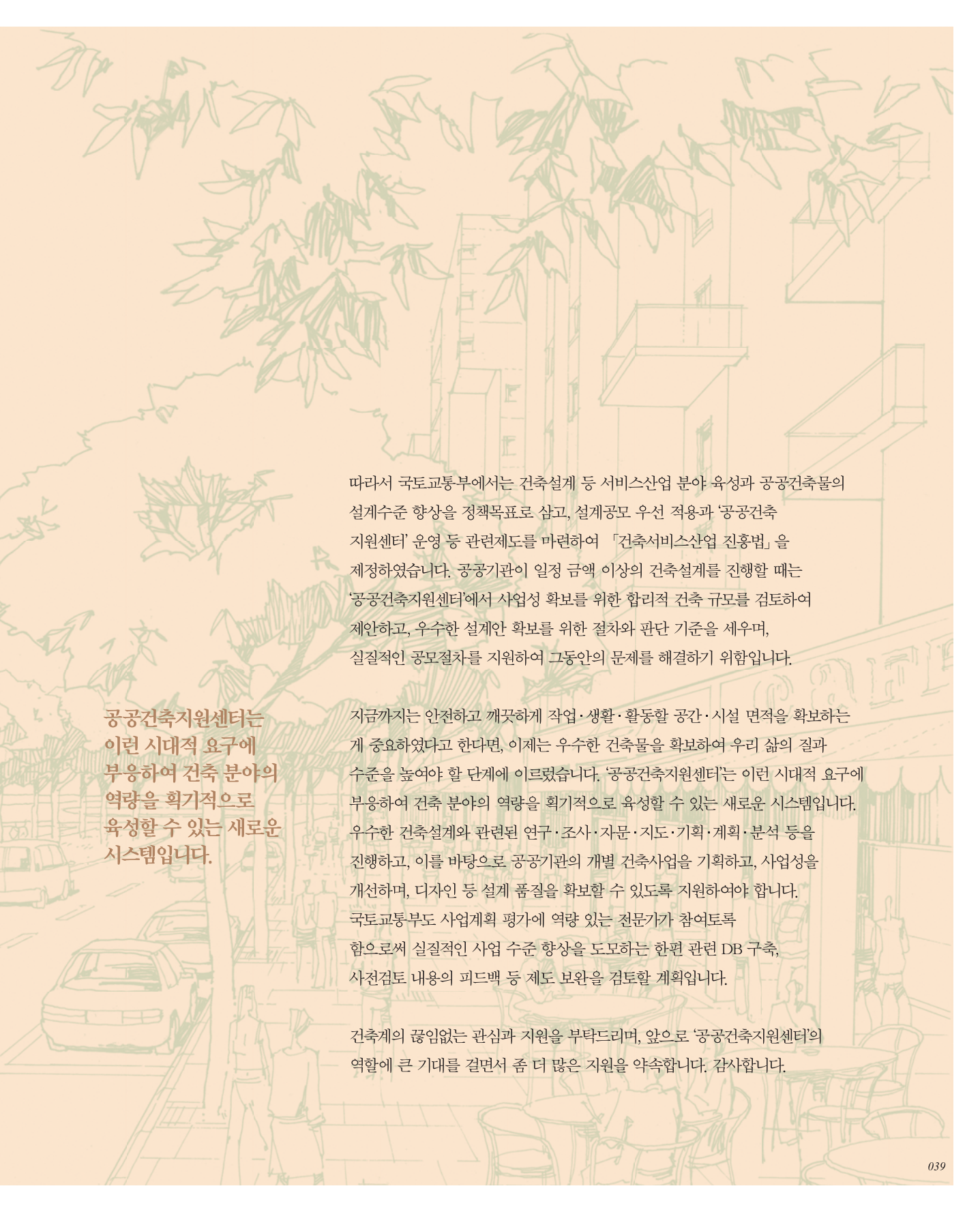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 거는 기대

김진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우리 국민은 하루 24시간 중 20시간 이상을 건축물 안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투자되는 건설 투자의 60%를 건축 분야가 차지하는 등 건축은 우리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물은 국가·지방자치단체 활동의 중심이 되고, 도시 경관의 중심을 이루는 시설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은 도시와 국토공간의 품격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건축물은 그 나라의 문화와 기술력의 상징으로서 국가·도시·조직 이미지를 표현하고 결정합니다. 우리가 파르테논 신전으로 그리스를, 성가족성당(사그라다 파밀리아)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떠올리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런 우수한 건축물 등은 국가·도시의 자산으로 관광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건축물 시공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수한 인적자원, 한국인 특유의 끈기로 건설이 어려운 초고층 건축물과 독특한 구조의 건축물을 정말 훌륭하게 지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건축물 설계 분야는 건설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의 건축물도 세계적 '스타 건축가'가 설계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동안 민간 영역으로 간주하여 정책적 지원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고,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공공건축물 설계는 가격 위주로 평가되어 진행되는 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건축 분야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설계 등 서비스산업 분야 육성과 공공건축물의 설계수준 향상을 정책목표로 삼고, 설계공모 우선 적용과 '공공건축 지원센터' 운영 등 관련제도를 마련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 일정 금액 이상의 건축설계를 진행할 때는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건축 규모를 검토하여 제안하고, 우수한 설계안 확보를 위한 절차와 판단 기준을 세우며, 실질적인 공모절차를 지원하여 그동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는 안전하고 깨끗하게 작업·생활·활동할 공간·시설 면적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수한 건축물을 확보하여 우리 삶의 질과 수준을 높여야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건축 분야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우수한 건축설계와 관련된 연구·조사·자문·지도·기획·계획·분석 등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개별 건축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성을 개선하며, 디자인 등 설계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도 사업계획 평가에 역량 있는 전문가가 참여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업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관련 DB 구축, 사전검토 내용의 피드백 등 제도 보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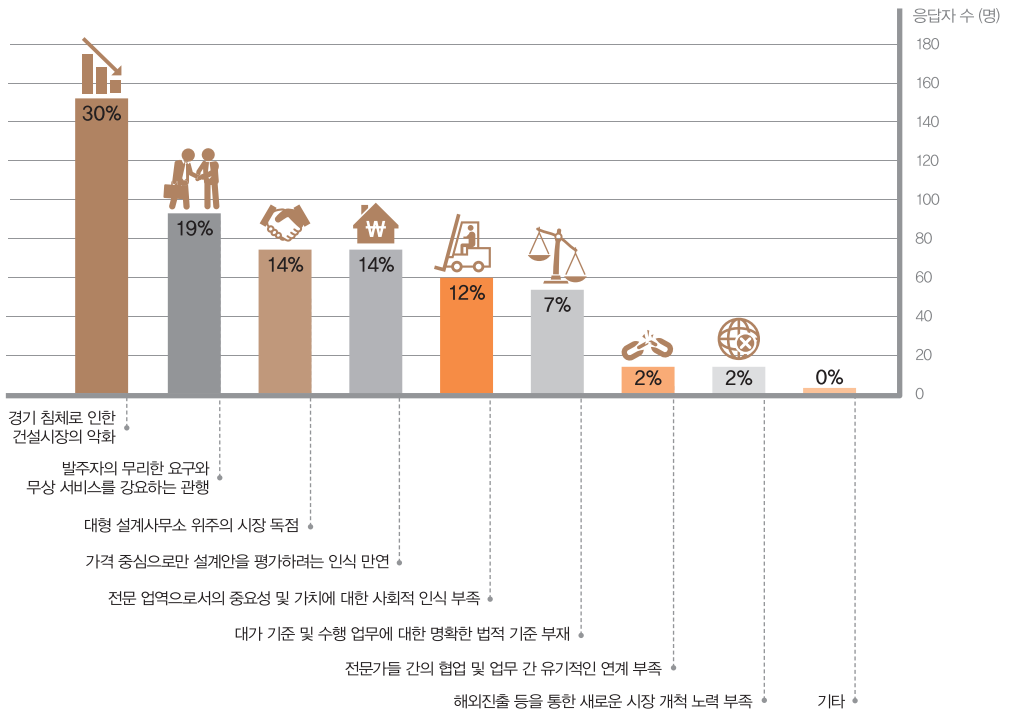
건축계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설계사무소 종사자의 현안 인식과 과제

오성훈 연구위원
("건축설계산업의 현안과
제도개선 방향", 「auri brief」 81호)

건축설계사무소 규모별로 대규모 업체(100명 이상) 종사자 25%, 중규모 업체(10명 이상~100명 미만) 종사자 37%, 소규모 업체(10명 미만) 종사자 33%, 기타(무직 및 프리랜서) 5%로 구성된 256명의 건축설계사무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과 이메일을 활용하여 2013년 9월 조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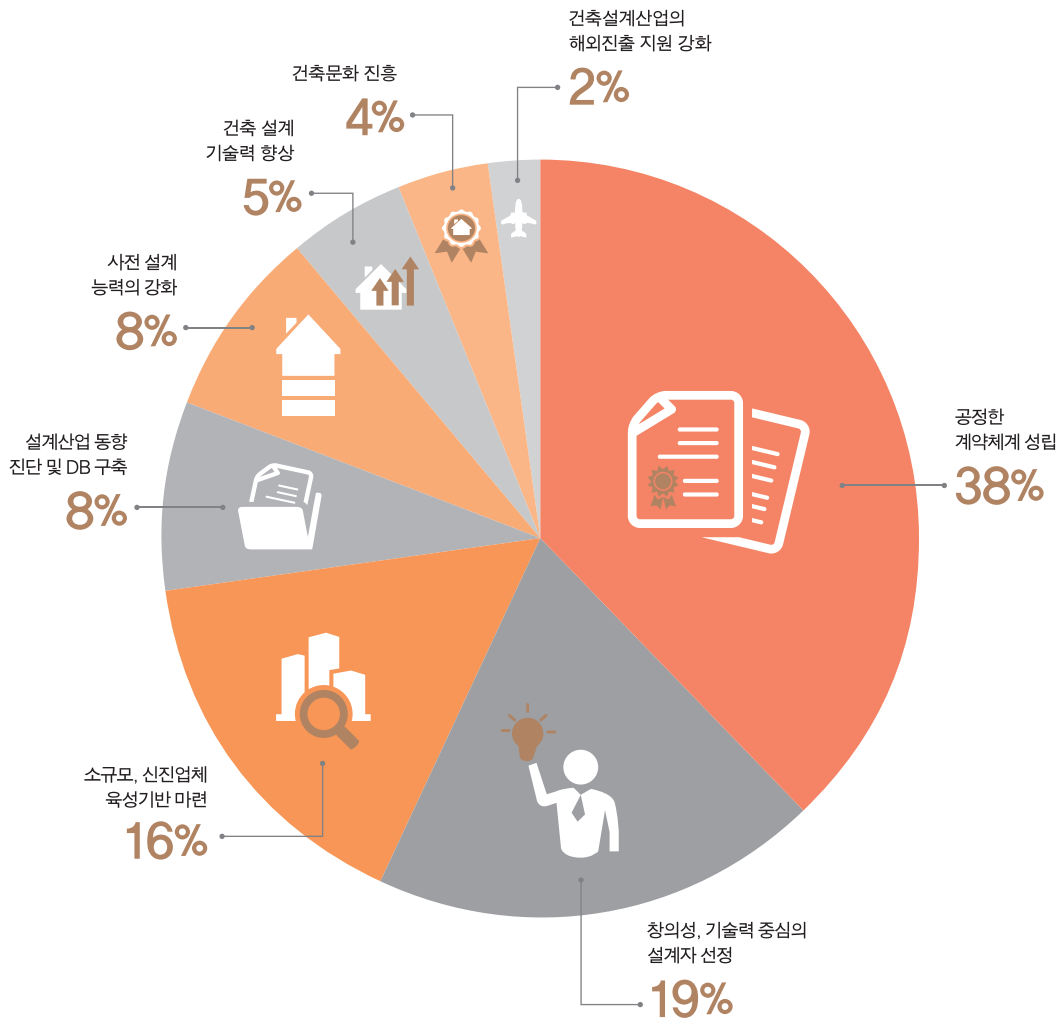
Q1. 건축설계사무소는 왜 어려운가?



A.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시장의 악화가 주된 요인

응답자의 약 30%가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시장의 악화'를 주요 원인으로 응답하였다. 이어서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와 무상 서비스를 강요하는 관행'(19%), '대형 설계사무소 위주의 시장 독점'과 '가격 중심으로만 설계안을 평가하려는 인식 만연'(각 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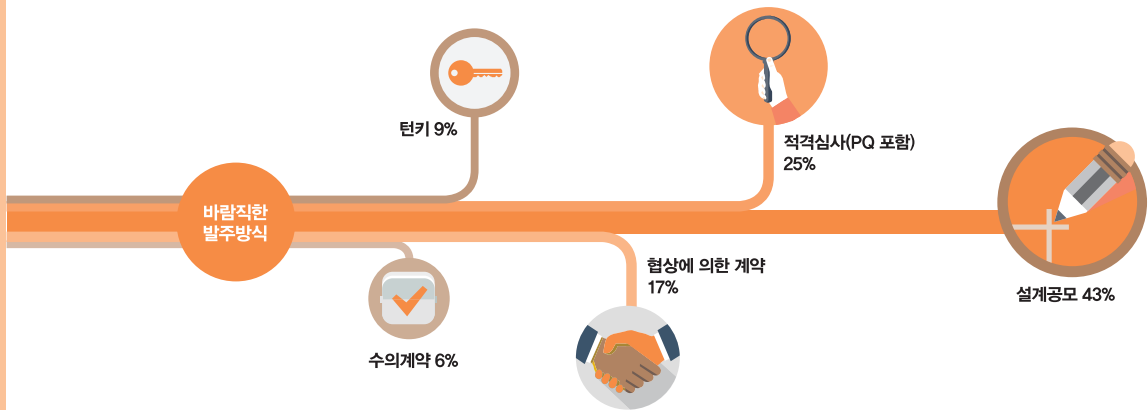
Q2.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추진과제는?



A. 공정한 계약 체계의 성립이 가장 시급

응답자의 약 38%가 '공정한 계약체계 성립'을 중요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창의성, 기술력 중심의 설계자 선정'이 19%, '소규모, 신진업체 육성기반 마련'이 16%로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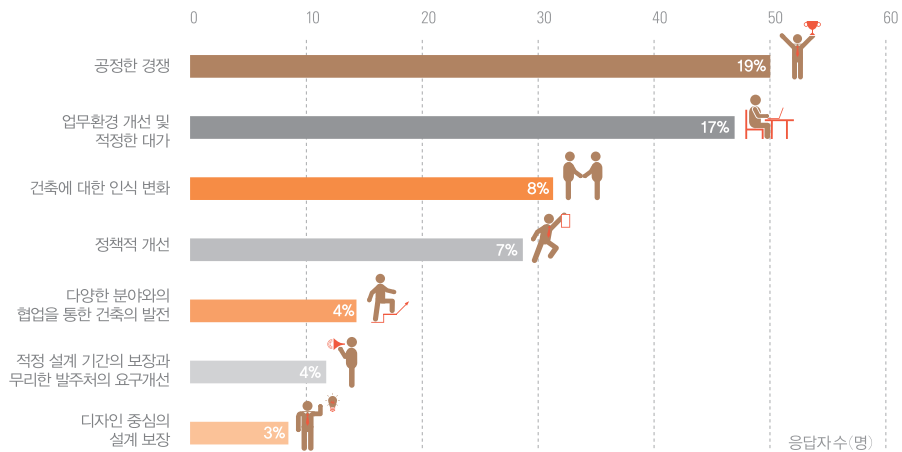
Q3. 가장 바람직한 발주방식은?



A. '설계공모'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순으로 집계

응답자의 약 43%가 '설계공모'를 가장 바람직한 발주방식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설계안 중심의 경쟁을 원하는 분위기로 파악된다. 이어서 '적격심사(PQ포함)' 25%, '협상에 의한 계약' 17%, '턴키' 9%, '수의계약' 6%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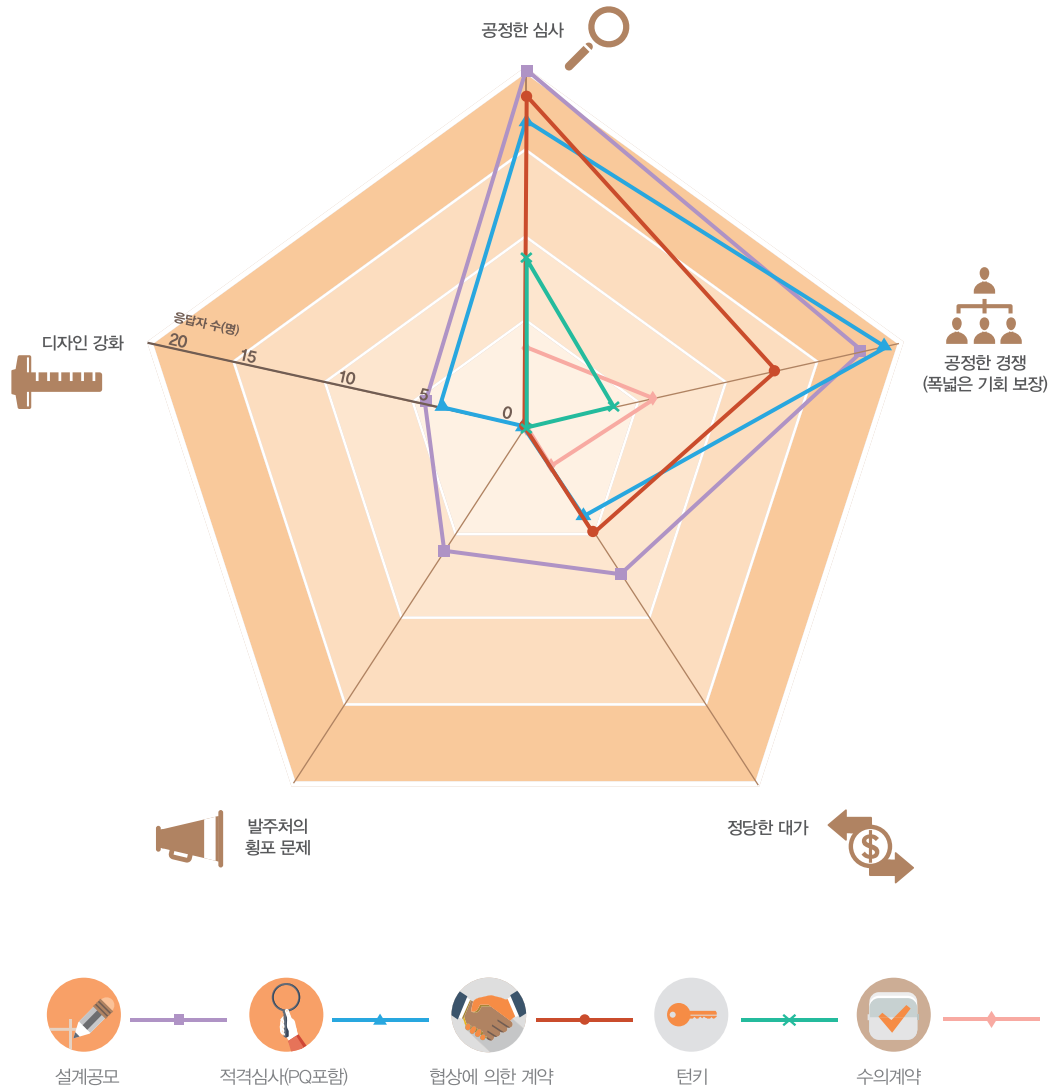
Q4. 건축설계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제언



A. 공정한 경쟁, 업무환경 개선 등 필요

건축설계산업 종사자의 약 19%가 건축설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공정한 경쟁 보장(소규모 및 신진업체의 참여기회 확대)'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설계실무자의 약 17%는 '업무환경 개선 및 적절한 대가 보상'을, 약 8%는 '건축에 대한 인식 변화'를 건축설계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인으로 들었다.

Q5. 발주방식별 개선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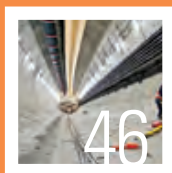


A. 폭넓은 기회보장 및 차별 관행 폐지 필요

발주방식에 따른 차이를 보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공정한 심사와 공정한 경쟁(폭넓은 기회보장과 사무소 규모에 따른 차별 관행 폐지)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건축도시동향

국외 여러 국가에서는 시간에 따른 변화와 그 맥락 속에서 건축과 도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적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찾은 해결책은 건축과 도시가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새로 태어나는 다양한 시각과 방향을 보여준다. 국내에서 또한 비슷한 의미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도시재생, 주민공동체 기반 건축사업, 녹색건축과 같이 과거와 현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건축과 환경이 공존함으로써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시애틀 알래스카 고가도로 철거와 지하 대체 터널 건설

우리나라의 청계천 복원 사업이 27개월 만에 완료된 데 비해, 그와 비슷한 성격의 알래스카 고가도로 사업은 대안 선정과 시공 과정에 있어 10년 이상의 시간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알래스카 고가도로 사업은 우리의 도시설계에 여러 시사점을 던져준다.



중국 대도시의 팽창, 상하이 템스타운

템스타운의 예에서 살펴볼 수 있듯, 중국의 도시는 형태 면에서 다양화되고 있으며 공간적으로 확산, 분화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주도적이며 국제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외국의 디자인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영국의 전통건축물 보존·관리제도와 인력양성 현황

영국에서 전통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제도적인 노력과 시행 중인 관련 교육시스템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세부적인 시행에 있어 좋은 참고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 및 향후 계획

도시재생선도지역 추진 단계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되짚어 봄으로써,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도시재생지원기구로서 보다 나은 도시재생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식·경험 축적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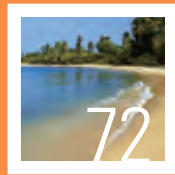
'경관협정 활성화', 공동체 형성부터

경관을 향상시키는 일은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특히 경관협정처럼 주민공동체에 기반하는 사업은 더욱 더 긴 호흡이 필요하다. 고속 성장 시대를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시대를 맞은 만큼 중장기적인 안목과 목표를 가지고 경관을 개선해 나가야 할 때다.



우수 녹색건축 사례 발굴을 위한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은 녹색건축의 설계기법과 시공기술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우수사례를 직접 접해 보고, 녹색건축에 대한 정책성과와 함께 녹색도시의 미래를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푸에르토리코 비에케스 섬의 생태 복원 사업 : 미국 해군 군사 기지로부터의 해방, 그 후 10년

미 해군의 해상 폭격훈련장이자 화학무기 창고로 활용되던 비에케스 섬. 옛 상처가 섬 곳곳에 아직 남아 있지만, 캐리비안의 숨겨진 생태 보고이자 주민들의 온전한 보금자리로 탈바꿈하기 위해 오늘도 비에케스 섬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국내외 단신

- 영국왕립건축가협회, 정부에 장기적 건축정책의 필요성 제안 외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표준안 배포 외

시애틀 알래스카 고가도로 철거와 지하 대체 터널 건설

김충호

워싱턴대학교 도시설계 및 계획학 박사과정

개요

알래스카 고가도로 (Alaskan Way Viaduct)는 시애틀 도심부의 엘리엇 만(Elliott Bay)에 있는 2개 층으로 구성된 차량 전용 도로다. 이 고가도로는 1953년 최초 개통 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 시애틀 도심부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중요한 차량 통행로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알래스카 고가도로는 SR 99 (Washington State Route 99)와 연결되는데, 1960년대 I-5 (Interstate Highway 5)가 건설되기 전까지, 이 도로는 시애틀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유일한 차량 전용 도로였다.

알래스카 고가도로의 역사는 사실 193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애틀 도심부의 교통 혼잡으로 인해 알래스카 고가도로에 대한 계획은 이미 논의되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과 경제공황

으로 알래스카 고가도로 사업은 지연되었고, 전후 1947년에 이르러서야 사업이 다시 시작되었다. 마침내 1950년대 알래스카 고가도로가 개통되었으며, 1960년대 도심부에서 여러 개의 도로 진출입 램프가 추가되었다. 시애틀의 도시성장과 함께 알래스카 고가도로의 통행량도 증가하였다. 계획 당시 1일 6만 여 대로 예측되었던 통행량은 이후 1일 평균 11만 대에 이르렀다.

하지만 시애틀 도심 통행량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던 알래스카 고가도로는 2011년부터 철거되기 시작했다. 또 이를 대체할 지하 터널은 2013년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이런 일련의 변화는 필자가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알래스카 고가도로 철거 전후의 모습

자료: 개인 블로그, GIZMODO (<http://gizmodo.com/6-freeway-demolitions-that-changed-their-cities-forever-1548314937/+alissawalker>)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도대체 왜 알래스카 고가도로는 철거되었을까?’ ‘알래스카 고가도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철거되고 있으며, 고가도로의 철거는 시애틀 도심부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이 글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지난 80여 년에 걸친 알래스카 고가도로의 건설, 그리고 철거와 관련된 여러 일들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설계적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알래스카 고가도로 철거의 결정

시애틀은 왜 알래스카 고가도로를 철거하기로 결정하였을까? 철거의 가장 큰 원인은 2001년에 발생한 진도 6.8의 니스퀄리 지진(Nisqually earthquake)이었다. 니스퀄리 지진은 당시 알래스카 고가도로를 직접적으로 파괴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고가도로와 하부 방파제의 지속적인 침하를 일으켰다. 니스퀄리 지진 이후 워싱턴 주 교통과(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WSDOT)는 알래스카 고가도로에 1450만 달러 규모의 예산으로 긴급 보강공사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진이 몇 분 이상 더 지속되었으면 알래스카 고가도로가 붕괴되었을 것이다”라거나 “앞으로 10년 안에 알래스카 고가도로가 붕괴될 가능성이 5%다”라는 무서운 예측들을 연이어 내놓는다. 그러던 중 2007년에 이르러 워싱턴 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의 연구진이 “4년 이내에 알래스카 고가도로를 폐쇄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를 시애틀 시장에게 하기에 이른다.

사실 과거 기록에 따르면 알래스카 고가도로는 건설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주된 이유는 시민들이 워터프런트에 대한 접근성과 공공성을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시애틀 시는 엘리엇트 만 근처에 공원과 수족관 등의 관광시설을 건설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의 부두 시설과 창고 등은 식당, 사무실, 주거용 아파트 등으로 탈바꿈되기 시작한다. 시민들은 소음과 매연을 발생하는 알래스카 고가도로의 거대 콘크리트 구조물을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쾌적한 워터프런트가 되지 못하게 하는 커다란 장애물로 인식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알래스카 고가도로는 시애틀 도심부의 중추적인 전용 차량 고가도로였기 때문에, 철거에 대한 공론은 오랜 시간 동안 쉽사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다.

지하 대체 터널 대안의 선정

2001년 니스퀄리 지진으로 촉발된 알래스카 고가도로 철거의 논의는 바람직한 대안 선정에 대한 합의의 어려움으로 거의 10년 동안 표류하게 된다. 이 시기에 주와 시정부는 새로운 계획안을 위해 90개 이상의 대안을 검토하지만, 만족스러운 의견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07년에 시애틀 시는 알래스카 고가도로 철거 사업을 북측의 도심부 사업과 남측의 비도심부 사업으로 나누고, 남측 부문에 대한 사업을 먼저 시작하려고 한다. 이는 정치인과 시민들이 북측의 도심부에 위치한 워터프런트의 개발 방식에 대해 오랫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애틀 시는 상대적으로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남측 부문에 대한 사업을 통해 전체 사업 일정을 줄이려고 한 것이다.

이후 2009년에 오랜 시간 표류 상태에 있던 북측 도심부 고가도로 철거 방식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터널 공법에 대한 재인식 때문에 가능하였다. 터널 공법은 원래 비싼 공사비로 인해 배제된 방식이다. 하지만 터널 공법은 그동안의 놀라운 기술 발전 덕에 이제 저렴한 공사 방식이 되었다. 더욱이 지하 대체 터널 건설은 오랜 공사기간 동안에도 기존의 알래스카 고가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어서 도심부 교통 혼잡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식으로 인식되었다. 이후 2011년 여름에 이르러 알래스카 고가도로 철거와 대체 터널 건설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와 연방 고속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의 허가를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애틀 시는 전 세계에서 지름이 가장 큰 보링 터널(Bored Tunnel)을 도심부에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심부 워터프런트 복합화 사업

시애틀 시가 알래스카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이를 대체하는 지하 터널을 건설하면서 이 사업은 본격적으로 도심부 워터프런트를 위한 복합화 사업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사업은 구조물을 철거하고, 터널을 건설하는 토목 프로젝트를 넘어서서 도심부 워터프런트의 접근성을 높이고,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조경 프로젝트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42억 5,000만 달러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서로 결합된 3가지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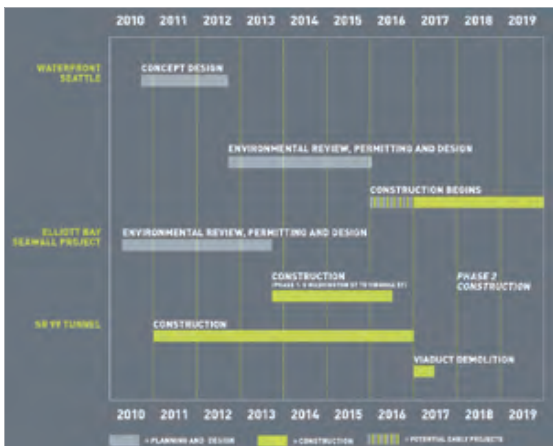


알래스카 고가도로 철거 사업 위치도

자료: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http://www.wsdot.wa.gov/Projects/Viaduct/About>)

알래스카 고가도로 철거와 지하 대체 터널 건설 사업(SR 99 Tunnel)
시애틀 시는 2016년 후반기 완공을 목표로 현재 2개 층으로 구성된 총 4차선 2마일(3.2km)에 이르는 지하 대체 터널을 도심부에 건설하고 있다. 지하 터널의 완공은 기존 알래스카 고가도로의 전면적인 철거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시애틀 시는 고가도로 철거로 인한 도심부의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터널 공사기간 동안 알래스카 고가도로를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지하 터널 공사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알래스카 고가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 공사가 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하 터널은 2013년부터 오사카에 있는 히타치 조선소



도심부 워터프런트 복합화 사업 일정

자료: Waterfront Seattle (<http://waterfrontseattle.org/waterfront/schedule.aspx>)

(Hitachi Zosen Corporation)에서 제작한 8,000만 달러의 보링 기계로 시공되고 있는데, 이것의 톱날은 17.5m에 이르는 역사상 최대의 지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보링 기계는 길이 99m에 무게가 6,700톤에 이르는 까닭에 40개의 조각으로 분해되어 배를 통해 시애틀로 운반되었으며, 현장에서 다시 조립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보링 기계는 시애틀 최초 여성 시장의 이름을 딴 ‘베르타(Bertha)’라는 별명으로 불리는데, 이는 유치원부터 고3까지의 학생들이 참여한 작명 공모전에서 결정된 이름이다.

하지만 시애틀 시의 당초 예상처럼 하이테크에 기반한 터널 건설이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공사 시작 3주 만에 드릴 전면 부의 강화 유리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지하에 있는 강관 시설물들과 충돌이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 당초 14개월로 예상되었던 공사 기간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 대체 터널 공사의 지연은 이후 단계적으로 진행될 워터프런트 복합화 사업 전반의 공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엘리어트 만 방파제 보강 사업(Elliott Bay Seawall Project)

2001년의 니스킬리 지진은 알래스카 고가도로뿐만 아니라 고가도로의 기초를 이루는 엘리어트 만의 방파제 역시 부실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알래스카 고가도로의 철거와는 별 방파제 위의 도로와 보행로 전반에 대한 보강을 요구하게 되었다. 시애틀 시는 알래스카 고가도로가 철거되는 대로 약 80m 깊이의 방파제 보강 공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깊이는 연약지반 아래의 암반에 이르는 거리이며, 시애틀의 랜드마크인 스페이스 니들(Space Needle) 높이의 절반에 해당할 정

도로 깊다. 이를 통해 지금보다 더 넓은 차선과 보도의 알래스카 길(Alaskan Way)이 안전하게 방파제 위에 건설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엘리엇 만 방파제 보강 사업은 아래에서 설명될 시애틀 워터프런트 정비 사업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기반 보강 사업이다.

시애틀 워터프런트 정비 사업(Waterfront Seattle)

2010년 시애틀 시는 워터프런트 정비 사업을 맡길 회사에 대한 국제 경쟁 공모를 하였다. 이 공모에는 30여 개의 세계적 디자인 회사가 참여하였다. 심사는 총 2단계로 진행되었는데, 1차 심사는 기존 수행 실적과 인터뷰로 평가하였으며, 2차 심사는 1차 심사 선정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민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평가하였다. 최종적으로 뉴욕의 하이라인(New York City High Line) 프로젝트를 수행한 '제임스 코너의 필드 오퍼레이션(James Corner's Field Operations)'을 선정하였다.

이후 필드 오퍼레이션은 21개월의 기간을 거쳐 워터프런트 정비에 대한 개념 설계를 완성하였다. 계획안은 우선 엘리엇 만의 공공성을 위해 휴식 · 산책 · 조깅 · 자전거 · 관광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으로서 피어와 산책로,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또한 도심부에서 워터프런트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파

이크 플레이스 마켓에서 수족관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램프뿐만 아니라 연결 가로와 보행로의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이 계획안의 실제적인 실현을 위해 시애틀 시는 시 소유 부지의 선(先) 개발과 인근 시민 소유 부지의 유도 개발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우리의 도시설계에 주는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애틀 알래스카 고가도로 사업은 지난 80여 년 동안 도시를 바라보고, 계획하는 관점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알래스카 고가도로의 건설과 철거는 차량 교통량을 최우선시하는 도시에서 자연 환경, 도시 경관, 시민의 어메니티를 극대화하는 도시로 도시설계의 관점이 변화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하 대체 터널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날 도시설계의 참여권 의사결정에 있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보여준다.

한편 시애틀 알래스카 고가도로 사업은 서울의 청계천 복원 사업과 여러모로 유사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사업 모두 차량 교통량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 도시개발의 전형에서 벗어나 환경 친화적인 도심 워터프런트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워터프런트 프로그램 계획

자료: 2013 ASLA Professional Awards (<http://www.asla.org/2013awards/501.html>)



지하 터널 공사 현장 모습

자료 : WSDOT Flickr 페이지 (<https://www.flickr.com/photos/wsdot/11315992075/in/set-72157631880763139>)

두 사업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도 있다. 알래스카 고가도로 사업이 대안 선정과 시공 과정에 있어 10년 이상의 시간이 예상되는 것에 비해 청계천 복원 사업은 27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공사를 완료하였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음에도 알래스카 고가도로 사업은 우리의 도시 설계에 여러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알래스카 고가도로 사업은 도심 복합화 사업을 통해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알래스카 고가도로 사업은 지난 60여 년의 유물과 같은 육중한 콘크리트의 철거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워터프런트 정비 및 개발이나 도심 교통 개선 및 활성화 등의 여러 목적을 복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도시 설계의 바람직한 대안은 편협한 대지적 한계를 넘어서, 위기와 문제를 기회로 삼아 여러 목적을

복합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알래스카 고가도로 사업은 채움이 아닌 비움을 통해 환경 친화적 다양성을 확보한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고가도로는 차량 통행을 위한 하나의 목적에 충실하지만, 비움을 통해 만들어진 유연한 워터프런트는 환경 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담아내는 도시 공간이 된다. 이는 현대 도시의 의도적 비움이 경직된 채움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알래스카 고가도로 사업은 고가도로의 철거 및 대체 터널의 건설, 워터프런트 정비 및 방파제 보강 공사 등이 10년 이상의 일정에 따라 현재 단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각각의 세부 사업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의사 결정 및 공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본 사업은 2011년 12월 시애틀을 도심부에 개설한 'Milepost 31'이라는 무료 홍보관을 통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Milepost 31은 시민들에게 지역의 역사를 알리고, 사업 내용을 소개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관광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Milepost 31의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 여러 기관들의 상^{*}을 휩쓸었다.

마지막으로, 알래스카 고가도로 사업은 오늘 이 시간에도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도시계획 및 설계 과정은 우리의 그것과 많은 점에서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우리가 흔히 범하는 깊이 없는 사례 조사는 이해할 수 없는 미국의 사회·문화적 시스템이 알래스카 고가 사업에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도심 워터프런트 복합화 사업이라는 동일한 목적 실현을 위해 서울과 시애틀이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어떤 최종의 종착점에 도달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흥미로운 일이다.

*
2012년 4월 King County로부터 John D. Spellman Preservation Award 수상
2012년 4월 Washington Museum Association으로부터 Project Excellence에 대해 수상
2012년 5월 American Association으로부터 State and Local History merit award 수상
2012년 5월 History in Progress Award 수상
2012년 8월 Exemplary Human Environment Initiatives(FHWA) 수상

참고문헌

- 1 Alaskan Way Viaduct Replacement Program 2013. Olympia, WA: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2013.
- 2 <http://www.wsdot.wa.gov/Projects/Viaduct/>
- 3 <http://waterfrontseattle.org/>
- 4 <http://www.viaducthistory.com/>
- 5 <http://www.asla.org/2013awards/501.html>

중국 대도시의 팽창, 상하이 템스타운

김형민

서안교통대학교 도시계획 및 설계학과 조교수

개요

중국은 현재 급격한 도시화 과정 속에 있다. 빠른 속도로 대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는 중이어서 중국 정부는 다핵화 정책을 기조로 인구 집중으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상하이도 2000년에 ‘하나의 도시, 9개의 타운(one city, nine towns 一城九镇)’ 건설 정책을 도입하여 뉴타운 건설을 통한 도시 기능 분산을 추진 중에 있다. 1km² 규모의 상하이 템스타운(Thames Town in Shanghai)은 도심에서 40km 정도 떨어진 송장(松江)뉴타운에 위치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인 쑹장뉴타운건설공사에서 개발을 맡았고, 영국계 도시설계 회사인 Atkins에서 설계하였다. 2001년 설계를 시작하였고 2002년 완공되었다. 본 사례 연구는 템스타운의 개발 배경과 추진 과정, 주요 개념과 성과 등을 살펴 보면서 시사점과 한계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템스타운 개요

- 개발업자: 상하이 쑹장뉴타운개발공사
(Shanghai New Town Development Corporation)
- 설계: British Atkins Corporation
- 중국 협력업체: China Shanghai Architectural Design & Research Institute
- 설계기간: 2001~2003년
- 건설기간: 2003~2004년(기반시설 및 주요 시설물), 2004~2006년(주택건설)
- 규모: 1km²
- 계획인구: 1만 명 (2020년)

자료: Hartog, 2010

개발 배경

상하이 도시의 외연적 확산과 함께 상하이 정부는 뉴타운 개발 정책을 도입하였다. 상하이 10차 5개년 개발계획에 ‘하나의 도시, 아홉 개의 뉴타운’ 건설 정책을 반영하여 신도시개발을 추진하였다. ‘하나의 도시’는 쑹장뉴타운을 뜻하며 쑹장뉴타운은 규모 면에서 가장 크다. 안팅(安亭, Anting), 루디안(罗店, Luodian), 주자자오(朱家角, Zhujiajiao), 핑징(枫泾, Fengjing), 푸장(浦江, Pujiang), 가오차오(高桥, Gaoqiao), 링강(临港, Lingang), 펑청(奉城, Fengcheng), 천 자전(陈家镇, Chenjiashen)이 9개의 뉴타운이다.

이러한 신도시 개발에 독일 마을, 이탈리아 마을, 네덜란드 마을, 스페인 마을, 스칸디나비아 마을, 미국 마을 등 서양식 도시 형태를 도입 또는 복제하였으며, 템스타운은 쑹장뉴타운에 위치한 영국 마을에 해당한다. 서구식 디자인은 다문화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도시환경 제고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템스타운이 개발되기 이전에 본 지역은 농촌마을이었으며, 템스타운 개발과 함께 1,100여 가구를 위한 단독주택 및 저층 타운하우스가 주요 주거형태로 개발되었다.

행정구역상 상하이는 약 6,300km²다. 상하이 중심지역은 토지면적상 4.5%를 차지하지만(289km²), 상하이 2,000만 인구의 35%

템스타운 및 상하이뉴타운 위치도



가 중심지역에 거주하고 있다(Shen and Wu, 2012).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를 수용한 중국은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 도시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다핵화 도시구조를 기조로 도시기능 분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상하이 지방정부는 신도시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개발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소득 계층의 수요에 맞게 개발되었다.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토지임대수익 증대를 위해 상하이 지방정부는 교외 지역 고급 도시개발에 적극적이다. 교외지역은 기존의 시가지에서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산업도 제조업 대신 서비스업을 지향한다. 교외지역에 새롭게 개발된 주택은 지불능력이 있는 고소득 가구에는 주요 투자수단이라 할 수 있다(Shen and Wu, 2012).

추진 과정

템스타운이 위치한 쑹장뉴타운은 지방정부 주도하에 개발되었다. 쑹장뉴타운은 개발 규모가 크고 개발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2001년부터 2003년 사이 10km² 면적이 도시용도로 전환되었고 40억 위안(약 6,800억 원)이 기반시설에 투자되었다. 이후 2005년까지 계획면적 23km²의 대부분이 완공되었다. 쑹장뉴타운은 상하이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개발구역을 지양하고 소비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5개의 설계 회사를 초청하여 국제 설계 공모를 하였으며 2001년 3월 최종적으로 영국 설계회사인 British Atkins Corporation이 설계 공모에 당선되었다. Atkins는 쑹장뉴타운 전체 60km²의 전략계획을 수립하였고 23km² 부지를 설계하였다. 계획과 설계는 쑹장뉴타운 개발에서 필수적인 요소였으며 Atkins는 600만 달러(62억 원) 상당

템스타운 배치도



의 컨설팅 비용을 받았다(Shen and Wu, 2012).

템스타운의 개발업체는 지방정부들이 투자하여 설립한 송장뉴타운개발공사(Songjiang New Town Development Corporation)다. 3개의 상하이 지방정부는 1억 위안(약 170억 원)을 투자하였고 상하이의 자치단체(구)는 토지를 제공하였다. 송장뉴타운개발공사는 템스타운이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여 도시개발 수익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였다. 민간 개발업자들이 주택 및 상업지역 개발을 하도록 하였고, 송장뉴타운개발공사는 학교, 운동시설, 아트갤러리 및 송장뉴타운 도시개발전시관 등 템스타운의 공공시설물을 설립하였다. 송장뉴타운개발공사는 상하이 헝스(上海恒世, Shanghai Hengshi)를 비롯한 몇몇의 부동산개발회사와 계약을 하여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지역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송장뉴타운개발공사의 주 수입원은 토지임대료와 주택단지개발이었다. 200평(중국 토지단위 1무)당 42만 위안(약 7,140만 원)씩 부동산 개발업체에 토지를 임대하였으며 개발업체는 총 2억 7,000만 위안(약 4,500억 원)의 토지임대료를 지불하였다. 그중 50~60%가 송장뉴타운개발공사의 수익이 되었다(Shen and Wu, 2012). 주택단지 개발을 통하여 송장뉴타운개발공사는 2억 위안(약 340억 원)의 추가 수익을 올렸다. 송장



템스타운 조감도

뉴타운개발공사는 공공시설물을 공급하며 준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개발 과정을 관리감독하였고, 개발 이후 템스타운을 관리하고 있다.

송장뉴타운개발공사는 템스타운 자체로 수익성을 확보하기보다는 템스타운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주변지역 임대료를 향상시켜 전체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주요 개념 및 성과

쑹장뉴타운의 핵심 지역인 템스타운은 저밀 복합단지 개발에 해당한다. 단독주택과 저층아파트가 주요 주거형태이며 1km² 전체를 영국풍 마을로 설계하였다. 현대적이면서도 국제적, 생태적 요소 및 관광문화를 추가하였다. 신도시개발임에도 도로를 바둑판 형태로 계획하지 않고 영국 도시의 도로구조와 유사하도록 자연발생적인 도로처럼 계획하였다. 중심부에는 주요 공공시설이 위치한 광장이 자리잡고 있다. 광장 앞에 템스타운을 홍보하기 위한 도시계획전시관이 있다.

템스타운의 외관상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영국' 스타일에 있다. 영국의 보통 마을을 그대로 복제하여 거주자 또는 방문객에게 서구형 주거형태를 강조하였다. 템스타운 입구 및 내부에서 템스타운의 경비들은 영국 군인 복장을 하고 있으며, 지붕 · 창문 · 벽재 · 입구 등 주택의 외관 또한 전형적인 영국주택 형태를 갖고 있다. 영국 주택을 모방하기 위해 주택에 굴뚝을 달아 놓기도 하였다. 도로폭, 도로바닥재, 신호등, 가로등 등도 영국 중소도시와 유사하도록 설계하였다.

서양식 교회건물과 교회 앞 잔디밭은 결혼사진 촬영 장소로 유명해졌다. 가로조형물을 활용하여 영국 마을을 더욱 강조하였다. 영국에서 사용되던 빨간색 공중전화기를 공공조형물 측면에서 배치하였고, 윈스턴 처칠과 셰익스피어 등 영국의 위인 동상을 템스타운 곳곳에 배치하였다. 또한 영국의 상징인 시계도 주요 건물에 부착하여 영국스러움을 더하였다.

템스타운은 상하이 교외지역에서 개발된 신도시 중 가장 방문객이 많은 지역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템스타운은 결혼사진 촬영 장

템스타운 현황

- 총 가구수: 1,100가구
- 총인구: 3,500명
- 건축총면적: 35만 8,526m²
 - 단독주택: 8만 6,363m²
 - 준단독주택: 3만 4,164m²
 - 저층아파트: 6만 1,199m²
 - 주상복합주택: 3만 5,078m²
 - 주상복합상가: 5만 9,612m²
 - 상가: 1만 1,723m²
 - 기타 생활 편의시설: 7만 384m²
- 평균용적률: 33%

자료: Shen and Wu(2012), 템스타운 홈페이지와 Atkins 홈페이지

소로 유명해졌고, 다수의 개인과 단체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2006년 완공과 동시에 모든 주택이 분양되었다(Shen and Wu, 2012). 2006년 분양 당시 아파트는 m²당 4,000~6,500위안(68만~110만 원), 단독주택은 m²당 6,000~8,000위안(100만~136만 원)이었다. 하지만 5년 이후 아파트 가격은 1만 2,000~1만 8,000위안(200만~300만 원), 단독주택 가격은 m²당 2만 5,000 위안~4만 위안(425만~680만 원)으로 뛰어올랐다(Shen and Wu, 2012). 이는 주변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가격이며, 상하이 도심과 40km 떨어져 있음에도 상하이 도심의 주택가격과 유사한 수준이다.



템스타운의 영국형 디자인



시사점 및 한계점

분양에 성공하고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살펴볼 때 템스타운은 도시개발 사업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성공의 요인은 다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아래 사업이 진행되었다. 개발 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방정부에서 출자한 도시개발공사가 개발을 주도하였다. 중국에서는 토지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신도시 개발 이전 토지소유권에 대한 이해관계는 복잡하지 않다. 일원화된 토지관리와 도시개발 체계가 개발과정을 촉진하였다. 지방정부의 주도는 주택 구입자들에게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둘째, 템스타운을 비롯한 쑹장뉴타운은 전체 부지가 계획된 신도시다. 중국에서 마스터플랜에 의해 개발된 지역은 많지 않다. 계획을 통해 전 지역에 공공시설물과 도로가 배치되고, 개별 건물 디자인이 계획 지침에 의해 이루어졌다. 환경친화적, 수변공간 친화적 개념이 포함되어 살기 좋은 주택단지로서의 이미지를 높였다.

셋째, 영국형 마을이라는 상징성을 활용하여 템스타운의 희소 가치를 높였다. 중국의 도시는 획일화된 공동주택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는데, 템스타운은 영국 도시라는 테마를 갖고 개발을 시도하였다. 영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가로시설물, 건물 외관, 운전자 등 눈에 보이는 대다수의 것들을 영국과 유사하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영국 최대의 도시계획 및 설계 회사에서 설계를 하여 영국스러움을 더하였다. 주변 중국 도시와는 확연히 다른 서구식 외관이 다수의 방문객을 이끌어내고 있다.

넷째, 중국의 다른 신도시 개발에서도 서구형 마을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템스타운과 같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템스타운

은 영국스러움에 고급스러움을 더하여 증가하는 고소득계층의 구미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였다. 상하이 중심지역에는 교통체증, 혼잡, 소음 등으로 주거여건이 좋지 않지만 템스타운은 저밀도로 개발되어 혼잡의 문제가 적고, 자연친화적 디자인으로 살기 좋은 면모를 갖추고 있다. 고소득층 사이에 자가 소유가 보편화되면서 대중교통 연결성보다는 주거 환경 자체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 템스타운이 그 선호를 충족시키고 있다.

하지만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템스타운은 지방정부가 주도한 고소득층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이다. 지방정부의 수입을 높이는 역할이 있었음은 분명한데, 정부 주도의 고급단지 개발 필요성은 분명하지 않다. 또한 템스타운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템스타운은 전형적인 도시확산*의 사례다. 상하이 중심에서 40km나 떨어져 사실상 통근권 바깥이다. 대중교통으로 상하이 도심과의 연결은 약 2시간이 소요된다. 템스타운이 위치한 쑹장뉴타운에 대학과 서비스 중심의 산업을 유치하고 있지만 경제활동과 주거활동은 미비한 수준이다. 자립형 신도시라기보다는 '고립된 신도시'에 가깝다. 분양에는 성공하였지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는 많지 않다. 2006년 1,100가구 분양 이후 2010년 5월 입주자는 468가구로 43%의 소유자만이 거주하고, 나머지는 투자목적 또는 주말 별장처럼 사용하고 있다(Shen and Wu, 2012).

템스타운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중국 도시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공간적으로 확산 및 분화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주도적이며 국제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외국의 디자인 기술을 접목 중에 있다.

참고문헌

- 1 Shen and Wu, The development of master-planned communities in Chinese suburbs: a case study of Shanghai's Thames Town, *Urban Geography*, 22(2), 2012, pp.183-203.
- 2 Hartog, *Shanghai New Towns*, Rotterdam: 010 Publishers, 2010.
- 3 Wu, "Gated and packaged suburbia: packaging and branding Chinese suburban residential development", *Cities*, Vol. 27, 2010, pp.385-396.
- 4 Atkins 홈페이지, <http://www.atkinsglobal.com>
- 5 템스타운 홈페이지, <http://www.thamestown.com>
- 6 중국 관련 자료의 수집은 연구조교 Miss, Shuyue Cai의 도움을 받았다.

영국의 전통건축물 보존 · 관리제도와 인력양성 현황*

신치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건축자산 보존 및 관리의 필요성 증대

2014년 6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받는 건축물 이외에 특별한 보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건축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법률에서는 우수 건축자산의 등록과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어 전통건축물을 포함한 건축자산 보존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한옥과 관련하여 보급 및 확산과 관련된 내용과 한옥 설계, 시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 인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인 전문인력 양성과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법률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축자산의 보존 성격 및 방법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이나 운영 등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영국에서 실행 중인 전통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과 관련 교육시스템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세부적 시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영국의 전통건축물 보존 및 관리 제도

영국은 기본적으로 1914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 전통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영국 건축물의 20%가 이에 해당하며,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전통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이러한 전통건축물은 문화재로 등록되며, 총 3단계로 역사건물을 분류하고 있다. 1등급(1star)은 국가적 가치를 가진 건축물, 2등급(2star)은 지역적 가치를 가진 건축물, 3등급(3star)은 가로 환경적 가치를 가진 건축물의 의미를 가진다. 재개발 공사를 하는 중 그 건축물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명되면, 24시간 이내에 문화재 지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1960년대 콘크리트 구조물인 프레스턴 버스 정거장(Preston Bus Station)의 문화재 지정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현대건축물도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문화재 지정을 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또한 건축물의 외관뿐 아니라 건물의 용도까지 보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영국 교회건물들의 경우 다른 기관에 의해 매입되어 훼손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시설들의 보존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잉글리시 헤리티지(English Heritage: 영국 역사 건축물 및 기념물 관리 단체)는 내셔널 트러스트(영국, 웨일스, 북아일랜드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거나 자연미가 뛰어난 곳을 소유 · 관리하며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는 일을 하는 민간단체)와 함께 현재 총 38만 5,000~50만 개

* 이 글은 「한옥 전문인력 교육 및 자격인증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영국 런던의 보존 관련 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작성되었다.

의 전통건축물을 보존 및 관리하고 있으나 건축물 수가 많아 총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지역사회의 가치 있는 문화재 보존을 위한 법률로서 ‘로컬리즘 액트’(Localism Act · 지역주권법)^{*}가 있으며 전통건축물의 증축 및 보수를 규제한다. 이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 · 보수하려면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반 전통건축물 소유주는 건물면적 30% 이하의 증축 및 개 · 보수 시 특별한 허가 없이도 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화재등록건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증축이나 개 · 보수 시 허가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건물파사드, 더 나아가 거리의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진다.

영국에서 전통건축물의 보존 및 관리와 관련하여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전통건축보존담당 공무원이다. 이 때문에 보존담당 공무원과 예비 공무원을 위한, 옥스퍼드대학의 MSC in Historical Conservation 과정과 같은 실무 대학원 과정이 20개 정도 개설되어 있다.

영국의 전통건축 인력 양성 및 관리 현황

Construction Skills Card Scheme (CSCS)^{*}는 CITB-Cskills에 의해 Heritage Skills 온라인 시스템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와 건설회사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건설기술인증제도는 실무 기술 수준을 정의하고 올바른 전문기술자의 실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인력양성을 유도할 수 있다. 기술자들이 온라인으로 자신의 보유기술을 입력하면 제시된 기준에 의해 각 레벨별로 자격증을 발급한다. 정규교육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술을 보유한 자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기술자들의 저항을 줄였다. 인증된 전문기술자를 고용하면 초기비용은 다소 높을 수 있으나 기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유지비용이 현저히 절감되어 장기적으로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고용을 장려한다.

현재 영국은 정부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의무화보다는 간접적인 소프트파워(재정지

원 등)를 통한 지원을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기술자격증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부의 재정 지원기준이 자격증 소유자를 활용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실질적인 인증카드 및 인증교육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인증자격이 없는 기술자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건축 인력 양성 기관의 관리 The Official Body for Inspecting Schools (OFSTED)라는 정부 교육시설 관리기관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을 감독한다. 1년에 한 번, 3명의 감독관이 3~4일에 걸쳐 학교 운영시스템, 학생 안전 및 커리큘럼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실시한다. 평가 등급은 1점-Outstanding, 2점-Good, 3점-Improvement, 4점-Unsatisfactory로 이루어져 있으며, 2점 이상의 판정을 받은 교육기관만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최저인 4점의 판정을 받은 경우 계약을 파기하거나 교장 및 운영 팀의 해체와 대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City & Guilds’ (awarding bodies, 자격증 수여 및 인증기관)에서 1년에 한 번 감독 관리를 실시하며 교육기관들은 이러한 감독을 준비하기 위하여 Building Craft College의 College Quality Management Team과 같은 부서를 마련하기도 한다.

잉글리시 헤리티지의

Historic Environmental Local Management^{**}

2004년 잉글리시 헤리티지에 의해 만들어진 Historic Environmental Local Management (HELM)는 영국 정부의 전통건축 보존관리 관련 자문을 담당하며 역사경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방당국 의사결정자와 지역단체, 국가기구에 역사경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판물 제작 및 배포, 훈련 및 교육활동, 역사문화 관련 법률 개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책보고 및 안내 등 역사경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자원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통건축 기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Heritage Lottery Fund (HLF, 문화유산복권기금)를 운영하고 있다.

^{*} CSCS는 일종의 건설기술자격증제도로 영국 건설산업 종사자들의 기술향상을 통해 산업의 기존, 질 및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또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업종별로 다양한 종류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CSCS발급 센터를 찾아가서 온라인 객관식 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발급된다.

^{**} 2013.11.4, Bob Hook(Historic Environment Analyst(Skills), English Heritage)와 면담



Historic Environment Local Management



Building Craft College

전통건축기술 교육과정 지원

HELM은 지역사회 고고학, 역사학, 식물학 관련 정원사 과정 등 다양한 전문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전통건축기술 교육 과정은 'Traditional Building Skills Bursary Scheme(전통건축기술 학비보조금제도)' 과정과 'Traditional Building Craft Skills Bursary Scheme for Displaced Apprentices(이직자를 위한 전통건축장인기술 학비보조금제도)' 과정이 있으며 National Trust, Cadw*, CITB(Construction Industry Training Board)** , NHTG(National Heritage Training Group)***와 함께 운영된다. 교육내용은 이론과 현장실무를 병행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Traditional Building Skills Bursary Schemes 과정은 실무에서 자격증을 딸 때까지 매달 1,000파운드(약 169만 원)를 지원하며 현재 모두 60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초급과정에서부터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NVQ, 국가직업자격) 수업 및 기초학위 과정까지 이수하고 있다. Traditional Building Craft Skills Bursary Scheme for

Displaced Apprentices 과정은 2009년 금융위기에 기술자 보호를 위해 내셔널 트러스트의 주관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서, 기술자들의 이직을 돕기 위한 과정이다. Traditional Building Skills Bursary Scheme의 보조프로그램으로서, 견습 과정을 부분적으로 이수했거나 고용주의 사업종료 등의 사유로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중도하차 견습생을 위한 실무위주의 프로그램이다. 졸업생의 90% 이상이 관련 업종에 취업하였다.

이러한 교육자금은 HLF에서 지원을 받는다. 2006년부터 2012년 사이에 약 170만 파운드(24억 6,000만 원/ 1,700만 파운드는 약 286억 9700만 원)의 HLF 지원금을 통해 138개의 훈련장소에서 기술교육이 이루어졌으며, 78%의 학생이 문화재 관련 부서에 취업하고, 그중 반 이상의 학생이 Heritage Skills NVQ와 CSCS Heritage Skills Card를 취득하였다.

*

1984년 설립된 웨일스(Wales) 정부의 역사환경부서로 주택과(Housing Department), 재생과(Regeneration Department) 및 유산과(Heritage Department)로 구성된다. 웨일스 지역의 역사환경과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Cadw는 웨일스 말로 '유지, 보조'를 뜻한다.

**

1964년 설립된 영국 건축산업을 위한 산업훈련기관이다.

2003년 English Heritage와 CITB의 파트너 형태로 설립되었으며 전통건축공예 분야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훈련, 교육, 인력인증제도에 대한 지원이 목적이다. 정부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 주도적(industry led) 경향이 강하며 실무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Building Craft College의 내·외부공간

대학 전통건축 교육과정 지원

이러한 자체적인 교육과 더불어 영국의 각 대학들과 협력하여 전통 건축 기술자 양성과정을 2011년부터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HELM에서는 기본 교육과정과 지도교수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대학은 5년간 전통건축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된다. 하나의 예로 케임브리지 대학 전통건축 교육과정은 HELM과 협력하에 이루어지는 2년 과정으로, 20명 정도의 학생이 등록한다. 1학년 과정은 학업 중심의 프로그램으로서 전통건축에 대한 지식과 현장 답사 등으로 이루어지며, 2학년 과정은 실무중심의 프로그램으로서 6개월간의 현장 실무와 논문평가로 이루어진다. 졸업 이후 전통건축 보존관리 실무 쪽이나 학업 쪽으로 진로 설정이 가능하며, 2013년 졸업생은 관련 직종으로 100% 취업하였다.

전통건축 관련 인력조사와 고용 장려

HELM에서는 4년마다 'Labor Market Intelligence Report'를 출판하고 있다. 연령층, 예상 퇴직연도 등을 조사하여 각 분야에 필요한 기술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5년 후 시장을 분석 및 예측하여 알맞은 기술훈련과 교육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성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율이 조사 첫 해 30% 정도에서 2013년에는 92%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설문조사가 균형 있는 노동력시장 형성과 시장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HELM에서는 인증된 전문기술자를 고용하면 초기비용은 다소 높을 수 있으나 기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유지비용이 현저히 절감되어 장기적으로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논리에 따라 고용을 장려한다. 이를 위하여 잉글리시 헤리티지에서 시공업체와 인증된 전문기술자의 리스트를 제공받아 이들이 진행하였던 주요 프로젝트를 검토하여 전문기술자들을 선발한다. 기술자의 실적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지만 관련 업체 또는 소비자가 필요로 할 때 연락처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문 기술자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전통건축물 소유주들에게 전통건축물의 중요성을 교육시키고 인증기술자를 고용하여 빌딩을 보수·유지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한다.

Building Craft College의 전통건축 관련 교육 사례*

Building Craft College(BCC)는 1893년 Worshipful Company of Carpenters의 기술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립학교로 영국 전통건축의 보존관리를 위한 전통공예기술(목재와 석재 중심)의 실

* 2013. 11. 5. John Applefon(director of development)와 면담을 통해 작성



Building Craft College의 실습실



무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교육 전문기관이다.

영국 전역에서 오는 학생들에게 건축과 관련된 고급과정이나 특화된 건축물 보존 전문가 과정을 제공한다. 교육과정은 목공과정, 목공 Diploma과정, 목공기계, 전통건축물 보존 Foundation Degree 과정, 석공과정, 석공 Diploma과정, 목재가구과정 등 다양하게 구성된다.

전통건축 관련 교육프로그램

연령별 교육과정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성격을 달리한다. 14~15세의 교육과정은 어린 학생들의 건설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년간 일주일에 하루 수업이 이루어진다. 교육 내용은 건설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배관, 목공, 공예)를 돕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된다. 16~18세의 교육과정은 영국에서 추가되는 교육과정으로서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19세 이상 교육과정은 영국정부의 지원이 매우 한정적이다.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 (국가공인자격증)’ 과정은 재직자를 위한 도제과정으로서 수료 시 레벨 1~3까지 수여한다. 교과과정은 1주간의 학교 수업(Practice & theory: 수학, 영어, 실무, 이론)과 6주간의 실무(Block Release* Program)로 구성된다. 실무교육의 인증은 현장에서 만든 포트폴리오(사진 및 기술서)와 현장 매니저의 서명으로 이루어지며, 학교의 평가자가 실무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학생의 작업 능숙도를 평가한다. 도제제도는 반드시 대학교육(기술수업, 수학, 영어)과 실무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

산업체 또는 기업주가 그 종업원 또는 산업훈련의 일환으로 산업체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급여를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주간에 학교에 보내어 교양교육 및 산업훈련과 관련된 전문이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대개 일주일에 하루 정도 등교하는데, 이것이 곤란할 경우 시간을 한데 몰아서 일정기간 동안 주간에 등교하는 방법으로서 한 번에 계속 등교하는 기간이 샌드위치(sandwich)식보다는 짧다.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 하우동설, 1995)



Building Craft College의 실습강의실 내 기계실

트레이닝만 받는 것은 도제제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전통건축 유지·보수 FD(foundation degree)’ 과정은 영국의 전통건축물들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전문 인력을 배출하고자 개설되었으며 킹스턴 대학(Kingston University) 등 타 대학들과의 협력 하에 이루어지는 대학 진학 이전의 교육과정이다. 교육대상자는 관련 교육 이수자 또는 역사건축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교육과정은 역사건축 분석 및 기록, 건물결함 및 병리학, 건물보존 경제학, 건물보존 법률, 디자인과 역사경관, 유럽 프로젝트, 역사적·지속가능한 건물재료, 재생 등의 수업으로 구성되며 이외에 공예기술과정과 문화유산 전문가 과정(craft training & specialist heritage training) 등이 있다. 대부분의 수업은 타 대학에서 이루어지며, 주1회 BCC에서 전통건축물 견학, 전문가 강연청취 등의 수업

을 진행한다. 2년간의 과정을 수료한 후에는 석사학위로 이어가거나 더욱 전문적인 일에 참여가 가능해진다. NHTG, English Heritage, National Trust, Historic Royal Palaces, CITB-Cskills 등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을 받음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문화유산 관리 교육 프로그램(Heritage management training program)’ 과정은 BCC에서 실무자의 작업현장을 찾아가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레벨4나 레벨5에 해당하는 자격이 주어진다.

참고문헌

- 1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 하우동설, 1995.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 및 향후 계획

임강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 접수와 평가위원회 구성

지난 3월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 접수가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와 평가주관기관인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평가의 기본방향과 방법, 기준 등을 마련해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월 9일 :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공모계획 공고와 지자체 대상 관련 사전설명회 개최
- 2월 10일~3월 4일 : 평가위원 전문가 풀(pool) 구성
- 3월 12일 : 평가위원 구성을 위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 3월 12~14일 :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공모 접수
- 3월 17일 :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구상서 예비검토
- 4월 5일 : 서면평가
- 4월 11~20일 : 현장평가(분과별 일정에 따라 시행)
- 4월 22일 : 종합토론
- 4월 24일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4월 28일 :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발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1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총 61일간 공모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으며, 80건이 넘는 질의사항에 대해 도시재생과와 협의·검토를 통해 총 7회(공통 답변 2회, 개별 답변 6회)에 걸쳐 답변하였다. 주요 질의내용은 ①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②공모에 대한 서류 제출과 평가항목 및 사업구상서 작성에 대한 세부적 질문 ③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기준에 대한 세부적 질문 ④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원 예산과 타 부처 지원 사업 활용 ⑤질의응답 연장과 자료요청 등이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공모 평가를 위해 관계 부처와 기관(총 77개)에 평가위원 추천을 요청하여 분과별(도시경제기반 37인, 근린재생 61인), 분야별(건축 18인, 도시 44인, 경제 7인, 지역계획 7인, 문화 9인, 복지 4인, 인문·사회 2인, 방재 2인, 환경 5인)로 총 98명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였다. 특히 정부위원회, 도시재생 등 전문성, 중앙정부 공모 사업 평가 참여 경험 등을 주로 고려하였으며, 이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선도지역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민간전문가를 선정하여 도시경제기반 1개 분과(7인)와 근린재생 2개 분과(일반규모 7인, 소규모 5인) 등 모두 3개 분과를 구성하였다. 이때 도시재생특위 민간위원(13인) 중 5인을 분과별 평가위원으로 포함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위원회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접수를 마감한 결과, 도시경제기반 7건과 근린재생 79건(일반규모 46건, 소규모 33건) 등 모두 86건의 사업구상서(안)가 접수되었다.(16개 시·도 85개 시·군·구 제출). 지역별 접수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평가주관기관은 우선 「도시재생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서류 누락(주민공청회와 지방의회 개최 등) 여부 등을 예비 검토하였다. 이후 주민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자산 활용(문화자산, 건축자산 등), 생활환경개선, 기반시설확충 등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사업 내용과 국정 과제와의 연계성, 쇠퇴도 등을 주로 검토하였다.

그런 뒤 지자체별 사업구상서 평가와 현장평가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서면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위원회는 평가주관기관 지원을 통해 제출한 사업구상서를 분과별로 검토한 후 선도지역 유형별 지정개수의 2배수를 선정(도시경제기반항 4곳, 근

지역별 접수 현황

|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총계 |
|--------------|----|----|----|----|----|----|----|----|----|----|----|----|----|----|----|----|----|
| 도시경제 기반형 | - | 1 | 1 | 1 | - | 1 | - | 1 | - | 1 | - | - | 1 | - | - | - | 7 |
| 근린재생형 (일반규모) | 6 | 7 | 1 | 1 | 1 | - | 2 | 6 | 4 | 1 | 3 | 2 | 4 | 4 | 3 | 1 | 46 |
| 근린재생형 (소규모) | 4 | 3 | 3 | - | - | 3 | - | 3 | 2 | 2 | 3 | 1 | 6 | 2 | 1 | - | 33 |
| 총계 | 10 | 11 | 5 | 2 | 1 | 4 | 2 | 10 | 6 | 4 | 6 | 3 | 11 | 6 | 4 | 1 | 86 |

린재생형 23곳(일반규모 13개, 소규모 10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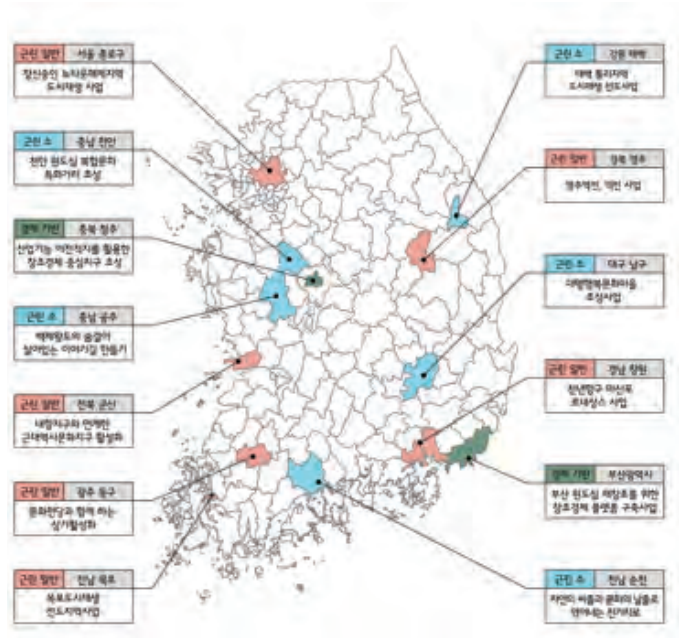
서면평가에서 뽑힌 지자체에 대해서는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분과별로 현장 평가를 벌였다. 각 지자체는 현장을 방문한 평가위원회에 사업구상(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질의와 함께 현장실사를 끝으로 평가가 마무리되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평가 결과 및 발표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평가위원회는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다음의 네 가지 원칙과 제시된 공모지침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첫째, 사업구상서 내용(도시 전체의 구조적 쇠퇴 및 문제점 인식 여부, 지역특성 반영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전략적 재생방안의 제시 여부 등), 둘째, 주민·지자체의 추진 역량,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전담기구 등 도시재생기반 마련을 위한 준비 여부, 셋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구체적 실천방안의 제시 여부, 넷째, 정부 지원의 당위성과 선도지역으로서 기대되는 재생사업의 성과 및 파급효과 등이다.

평가위원회는 상기의 원칙과 평가항목에 입각하여 도시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일반규모 6곳, 근린재생형 소규모 5곳을 도시재생 선도지역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4년간의 정부 지원 이후에는 지역의 자생역량 및 기반을 토대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였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전국 현황도



도시재생선도지역 및 선도지역 외 지자체 지원계획*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주민과 지자체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도록 국토교통부는 2017년까지 4년간 재정지원(계획수립비, 사업비)을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 지정", 2014. 4. 28.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원계획

| 구분 | 도시경제기반형 | 근린재생형 | |
|------------|---|--|-----|
| | | 일반규모 | 소규모 |
| 특성 | 산단, 항만, 역세권 등 정비 · 개발 및 배후재생 | 쇠퇴 중심상가지역 및 근린주거지역 재생 | |
| 개수 | 2곳 | 6곳 | 5곳 |
| 국비지원 | 계획비 | 0.9 | 0.5 |
| | 사업비 | 100 | 60 |
| 컨설팅 지원 | 민간투자가 가능한 복합개발사업 등 앵커사업*을 지자체 · 주민이 발굴할 수 있도록 현장여건 분석 | 주민 스스로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실행력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추진주체 구성과 주민교육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
| 행정 및 기술 지원 |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각 부처 연계사업 패키지 지원 | | |
| |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통한 모니터링 지원 | | |

* 2014년도는 총사업비의 20%(경제기반 50억 원, 근린재생 12억~20억 원) 지원

(단위 : 억 원/개소)

또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지자체가 도시재생과 연계 가능한 각 부처의 사업들을 계획에 포함하여 지원을 요청하면, 도시재생특위의 심의를 거쳐 패키지로 지원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 국토연구원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3개 전문기관과 함께 행정 ·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는 선도지역 외의 다른 지자체에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에는 선도지역 공모에서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지역의 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 교육 프로그램을 국비로 지원한다. 그 외의 지역도 수요조사를 통해, 6~7월중 주민 · 지자체 공무원 · 현장 활동가 등을 대상(200여 명)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도시재생지원기구는 지자체가 도시재생전략계획(기본구상)과 활성화계획(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시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쯤 주민 · 지자체가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국고지원을 요청하면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2016년부터 매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원(매년 약 35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워크숍 개최 및 모니터링 실시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추진과 도시재생정책 및 가이드라인 설명, 도시재생 사례 및 기법 등

의 공유를 위해 담당공무원 · 전문가 · 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합동워크숍(5월 19~21일)을 열었다. 이와 함께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을 상시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기구가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중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선도지역 가운데 일반규모 3곳(광주시 동구, 전북 군산시, 경북 영주시), 소규모 2곳(대구시 남구, 강원 태백시)의 모니터링을 전담한다. 2014년 현장 모니터링은 ·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발주 전까지의 단계 · 활성화계획 수립 단계 · 우선사업 실행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그 외에 근린재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미나를 열어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단계별로 의견서를 상시 작성하여 향후 성과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의 공모사업 모니터링 노하우를 반영하여 사업추진 준비가 양호한 지역은 용역발주 지원 및 우선추진사업의 선정 등 진행을 촉진하고, 준비가 필요한 지역은 사업추진체계 준비사항(조직 · 지원센터 · 주민협의체 등)과 지역협업체계 구축 등을 점검하는 등 담당 5개 선도지역의 지역성, 현장 특수성, 이해관계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과정 중심의 맞춤형 모니터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도시재생지원기구로서 보다 나은 도시재생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식 · 경험 축적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경관협정 활성화’, 공동체 형성부터

전인재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사무관
(전)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소속

추진 배경 - 경관 관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정말 표현 그대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왔다. 우리나라의 GDP는 1960년 39억 달러에서 2013년 1조 2,000억 달러로 늘었으며, 도시화율은 1960년 39%에서 2013년에는 91.5%로 높아졌다. 말 그대로 숨 쉴 틈 없이 달려온 결과다.

그리고 이제는 초고속 성장기가 끝나고 한번 숨을 고르며 다시 도약할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사실 그동안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물량공급에 치우쳐 경관이나 무형적인 가치를 챙길 여력이 없었던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름다운 경관 관리를 통해 도시의 창의성과 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일은 직접적으로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마이스(MICE) 산업 등을 활성화하여 서비스 업종의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된다. 간접적으로도 도시의 전반적인 가치를 높이고 매력적인 도시를 만듦으로써 창조적인 역량을 가진 인재와 자본, 기관을 불러 모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나아가 창의적인 첨단 산업의 발전을 이루는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변화와 경관 향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2007년 「경관법」을 제정하였으며 경관협정·경관계획·경관사업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경관법」 전부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경관 정책기본계획 수립, 인구 10만 명 초과 지자체의 경관 계획 의무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및 개발 사업 등에 대한 경관심의제도 도입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경관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보다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경관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역별 통합 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돕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으며(2009~2014년까지 총 32곳에 196억 원 지

원), 올해부터 ‘경관협정 지원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하여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경관 개선에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인 경관협정제도를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경관협정이란?

경관협정제도는 2007년 「경관법」 제정에 따라 처음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경관협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주민약속’이나 ‘주민협약’ 등의 명칭으로 경관협정과 유사한 내용의 협정이 자생적으로 체결되고 있었다. 경관협정은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과 분위기에 맞추어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지역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경관협정은 아름답고 개성 있는 경관의 형성을 위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인 참여로 자기 지역의 경관을 보존·관리 및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경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라 지역의 주민이다. 경관을 훼손하는 가장 직접적인 주체도 건축주인 주민(개발사업자를 포함)이고, 아름다운 경관 형성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객체도 주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는 데 선택 동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단순히 시민의식의 성숙이나 문화적 수준을 거론하기에 앞서 경제적 가치가 최우

*) 국토해양부, 「경관협정 수립방향 및 주민참여 유도방안 연구」, 2008.

선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경관협정 활성화처럼 효율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방향과 수단을 정하는 데 있어 다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경관 정책의 최대 함정, 규제의 편리성

사실 경관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아주 상세한 토지별 건축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만 개발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가용 토지가 부족하고 국제사회와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을 후순위로 한 채 엄격한 규제만을 통해 경관을 관리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규제는 매우 편리하고 효과적이지만 궁극의 수단은 아니다. 규제는 경관의 훼손을 막고 올바른 경관 형성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의 창의성이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관 규제는 경제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품격을 높이고, 기존 개발사업과의 차별화를 통해 오히려 경제성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올해 초에 도입된 ‘경관심의제도’와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가 바로 그러한 측면을 고려한 결과물이다.

경관협정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경관 관리의 기준을 만듦으로써 규제의 부담은 적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해 경관 관리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관협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의 경관협정

2007년 경관협정이 제도화된 이후 정부에서는 「경관협정 수립방향 및 주민참여 유도방안 연구」(2008. 국토해양부)를 통해 구체적인 경관협정 수립 매뉴얼을 마련하였으며,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범적으로 경관협정을 통한 주거지 경관 개선 사업을 벌였다*.

* 신중진 외, 「경관협정 활용에 의한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의 방향 연구」, 2012.

초기의 경관협정은 주민이 주도하기보다는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주도하여 경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된 협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주민 동의와 참여를 통해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제도 도입 초기인 점, 지역별 공동체의 기반이 없었던 점, 지자체 여건상 중장기 사업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단기간에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방식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관 주도로 단기간에 이루어지다 보니 경관협정의 가장 근본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의 기반이 약하였고, 경관 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부산시·인천시 등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으로 경관협정 사업을 실시하면서 사업의 종류나 주민 참여 방식 등을 개선해 오고 있다.

경관협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공동체 결성을 위한 교육·활동·자원 등을 통해 기반을 다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민 간 경관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스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개선할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관협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경관협정의 모델을 정립하고, 그동안의 문제점과 사회 변화를 반영한 경관협정 매뉴얼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번 정부의 정책에 의미가 있다.

경관협정 지원 시범사업, 주민공동체를 위한 마중물

이번에 실시하는 경관협정 지원 시범사업은 경관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지역의 전문가 참여와 교육·단체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기반을 다지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경관협정의 모델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시범사업에는 지자체 공모 결과 5개 지자체에서 8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그중 공무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경관협정의 체결 가능성과 유형 등을 고려하여 3곳을 선정하였다.

부산시의 ‘보수동 중북도로 경관개선 사업’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지역의 필로티 공간을 어린이도서관 등으로 개선하고 안전한 생활가로로 만드는 사업으로, 향후 전국적인 확산이 가능한 롤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인천 옹진군의 ‘덕적면 경관사업 사후 관리’는 기존에 수립된 경관협정의 재검토를 통해 지속성을 높인다는 측면과 농어촌 지역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 전북 익산시의

경관협정 지원 시범사업 대상 선정 결과

| 지자체 | 협정지원 사업명 | 추진 주체 |
|-------|------------------|---------|
| 부산시 | 보수동 중북도로 경관개선 사업 | 보동길 사람들 |
| 인천 용진 | 덕적면 경관사업 사후관리 | 덕적면 주민 |
| 전북 익산 |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경관협정 | 익산주민협의회 |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경관협정’은 노후한 구도심의 도시재생이 경관협정과 연계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는 민간 전문가 인건비, 교육비, 단체활동비 명목으로 각 1,500만 원씩 지원되며 내년 3월까지 연구진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예산 집행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총괄계획가나 코디네이터를 통해 직접 집행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그동안 경관협정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단순히 시민의식 부족이나 문화적 수준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경관개선에 삶의 수준이 올라가고, 경제적 가치도 높아진다는 공감대가 주민들 사이에 형성되지 못한 탓이다. 또한 이를 도울 수 있는 지원 근거나 예산이 부족했고, 절차도 충분치 못했다.

경관협정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려면 관에서는 주민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고, 전문가 참여를 통해 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며, 행정 절차 처리나 연계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보조해 줘야 한다. 물론 경관개선을 위한 예산투입 이전에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 그리고 필요한 일을 찾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사실 1,500만 원은 경관사업에서는 매우 미미한 금액이다. 그러나 그동안 경관 사업 이전 단계에서 집행하기 어려웠던 공동체 활동과 교육, 민간 전문가 참여를 지원할 수는 있다. 이는 경관협정의 특정한 기초가 되고, 주민공동체를 이루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국토 경관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

경관을 향상시키는 일은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특히 경관협정처럼 주민공동체에 기반하는 사업은 더욱더 긴 호흡이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고속 성장 시대를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시대를 맞은 만큼 중장기적인 안목과 목표를 가지고 경관을 개선해 나가야 할 때다.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지역별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경관협정을 보다 다양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지역 간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아름답고 특색 있는 경관을 만드는 것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앞으로도 사회의 요구에 맞추는 적극적인 제도적·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우수 녹색건축 사례 발굴을 위한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김재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연구위원

최근 국내의 주말 풍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 캠핑 장비를 차에 잔뜩 싣고 강이나 산의 캠핑장으로 떠나 자연 속에서 주말을 보내는 일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땅을 고르고 텐트를 치고 숯불을 피우는 등의 노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콘크리트의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과 좀 더 가까이 하여 몸과 정신의 힐링을 찾는다. 요즘 우리 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친환경', '녹색', '힐링'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구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온도변화(지난 100년간 1.5℃)로 아열대화되고 있다. 또한 해수면 상승은 지구 평균의 3배(제주도 기준 지난 40년간 22cm), 수온 상승도 지구 평균의 3배(동해 기준 지난 100년간 1.1~1.6℃)에 달한다. 이로 인해 열대야 일수와 여름철 기간이 늘고 농작물과 해양생물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상기후의 이유 중 하나가 화석연료의 사용증가에 따른 온실가스다. 석유로 대표되는 화석연료의 사용은 온실가스 증가를 가져와 지구온난화를 만들어 냈다.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기후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봄까지 눈이 내리고, 마른장마에 초대형 허리케인과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연재앙이 잇따른다.

온실가스 배출은 CO₂ 등을 만들어 내는데, 이는 인류의 에너지 사용량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건물 부분에서 약 24%를 차지하고, 건축자재의 생산과 운반이나 건설 과정에서 소비되는 것까지 포함시킬 경우 그 소비량은 30%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다.

인류의 생존까지도 위협하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 결과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8년 '저탄소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포한 이후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

서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선언문 채택과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개최, 2012년 10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인천 송도 유치 확정 등 녹색성장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처럼 최근 건물에서의 에너지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에 세계 선진국에서는 건물 부분에서의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각국은 각자의 나라에 맞는 친환경 건물기준을 마련하여 친환경기술을 건물에 채용하는 정도에 따라 적절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사업홍보에 활용하거나 금융·세제 또는 그린빌딩 건축을 위한 추가비용에 대한 인센티브에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친환경 정책 분야의 경우도 환경오염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친환경건축물을 촉진하고자 지난 1999년 친환경건축물 시범인증을 시작으로 2002년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인증을 시

각국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현황

| 국가명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 국가명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
|------|------------------|------|-----------------------|
| 대한민국 | G-SEED | 네덜란드 | BREEAM Netherlands |
| 미국 | LEED | 핀란드 | PromisE |
| 영국 | BREEAM | 스페인 | VERDE |
| 일본 | CASBEE | 호주 | Nabers/Green Star |
| 프랑스 | HQE | 포르투갈 | Lider A |
| 독일 | DGNB | 홍콩 | HKBEAM |
| 이탈리아 | Protocollo Itaca | 캐나다 | LEED Canada |

행하였다. 이후 2003년에는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 2005년에는 학교 시설과 공공 건축물 등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여 매년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건축법」 제65조에 의거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 자연친화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2012년 2월 제정되어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 인증제(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 Environmental Design)'로 바뀌게 되었다.

G-SEED는 건축물의 자재생산단계,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에 걸쳐 건축물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 및 오염물질 배출과 같은 환경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건축은 단순 건축물 그 자체로 표현·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자연의 일부다. 건축의 디자인이나 설계도 역사성과 그 당시의 시대정신이 녹아 있는 가장 큰 철학물이고 문화이기에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되는 것이다. 결국 건축은 삶의 공간이며, 이 공간이 결국 환경·문화적 공해로 흐트러지면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우리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건축공간을 삶과 문화의 연장으로 자연요소를 끌어안아 설계하고 완성시킬 때, 삶의 건전성과 생활의 안정성으로 올바른 역사관 생성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인간이 거주하기 위한 단순 건축의 시대는 갔다. 건축도 다품종 소량시대를 맞아 각 개인과 사회의 필요에 의한 충족은 물론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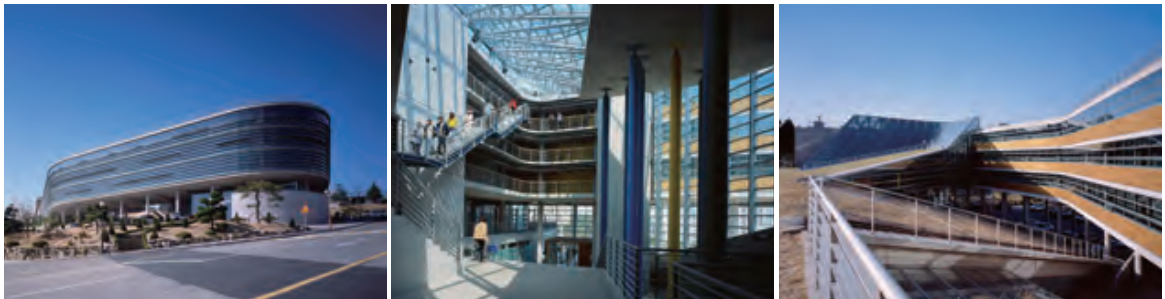
녹색의 공감을 이끌어낸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이러한 시대적 소명과 요구에 의하여 녹색건축 패러다임을 적극 반영한 건축물을 공모하여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녹색건축물의 조기정책을 유도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2012년 '지속가능한 녹색건축 창출'을 주제로 제1회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을 열었다.

본 대전을 통하여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고 도시와 건축 분야를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구조로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모두를 시상함으로써 건축에 관한 모든 이해관계인을 포함시켰다.

2012년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은 녹색건축 및 에너지 분야 등 관련 전문가 9명이 심사위원(심사위원장 김광우 서울대 교수)으로 나서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해 1차 서류 및 패널 심사, 2차 현장 방문, 3차 종합토론을 거쳐 대상(국가건축정책위원장상)으로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을 선정하였다. 또 최우수상(국토교통부장관상: 대구울하2 세계육상선수촌1·2단지아파트, 지식경제부장관상: 노원에코센터 등) 3개 작품과 8개 우수상(유사단체장상)을 포함해 12개의 작품을 뽑았다.

작품 심사에 있어서는 1차 심사의 경우 건축물의 친환경성과 미학적 디자인의 우수성, 녹색건축물로서의 창의성, 건축물의 사회적 공공성이라는 3개의 범주에서 심사하였다. 2차 심사에서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1차 심사단계에서 제출된 자료와 실제 준공 상태와의 일치성, 친환경 건축물 구현을 위한 기술성, 친환경 건축물로서의 파급효과성 등 3가지의 범주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끝으로 3차 심사에서는 1·2단계 심사결과를 토대로 종합토론을 통하여 대상작품을 선정하였다.



2012년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대상 수상작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2013년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대상 수상작 충청남도 본청 및 의회청사 전경

대상으로 뽑힌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은 지형과 조화되는 옥상 녹화 기법과 아트리움을 통한 자연관의 이용, 지열을 실제 난방에 이용하는 쿨루프 시스템 등 친환경적 테크놀로지와 건축 미학적 디자인을 자연스럽게 결합하고 학생과 사회를 향한 열린 공간으로서의 창조적 디자인 개념이 잘 구현된 작품으로, 우리나라의 건축적 품격과 녹색건축을 향한 의지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작품으로 판단되었다.

심사에는 건축의 녹색기술만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이 건축적으로 어떻게 잘 조화되어 표현되었는지도 고려하였으나, 우수한 녹색의 개념은 있지만 건축적인 표현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고, 건축 디자인은 매우 우수하나 녹색의 개념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 많은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다.

한편 선정된 작품에 대한 전시행사와 녹색건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녹색건축 정책과 효율적 조성’을 주제로 컨퍼런스도 개최하였다. 중앙정부, 각 지자체, 연구기관, 학계 및 위원회가 각각 녹색건축에 대한 고민과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단순 작품 공모에만 그치지 않고 녹색건축의 현재와 미래방향을 제시하는 컨퍼런스를 통하여 녹색건축정책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자 한 것이다.

2012년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에서 녹색건축물은 단순히 건축주·시공자·설계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사회의 트렌드로서 국민적 홍보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3년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은 녹색건축한마당(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주최)과 통합 진행되었다. 기존 녹색건축 관련 각종 행사들을 녹색건축 한마당으로 통합하여 녹색건축 분야 최고 권위의 행사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Green Architecture for Happiness and Warmth(행복이 가득하고 따뜻한 녹색건축)’이라는 주제 아래 녹색 분야 국외 전문가(BRE Global CEO Richard Hardy 박사) 초청강연, 녹색건축 정책 발표 및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 성과와 녹색건축대전 수상작 소개, 녹색건축 기술(설계·시공·마케팅), 그린 리모델링 설계·시공 사례, 녹색건축물 체험 사례 발표, 공모전 수상작과 녹색건축 자재 등 국민들이 녹색건축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시장 마련 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2013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에서는 건축물 패시브 디자인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과 그린리모델링 건축물을 추가하여 그 대상범위를 확대·공모하였다. 학계와 관련 건축단체 위원, 건축설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명을 심사위원(심사위원장 이언구 중앙대 교수)으로 구성하였으며, 2012년에 부진했던 행사의 전문성과 국민적 홍보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행사추진상의 주요사항 및 시행의 전문성을 높였다. 아울러 녹색건축대전 홈페이지 개설, 건축 관련 학·협회 협조체계 구축, 언론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적 관심을 적극 유도하였다.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토론을 거쳐 대상으로 총

청남도 본청 및 의회청사를 선정하였다. 대상작은 우선 건축물 배치상 북향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외부차양, 로이복층유리, 중수 및 우수 활용설비 등 다양한 녹색건축 기술을 적용하였다. 중정계획을 비롯한 옥상정원 등 건축의 미학적 디자인 요소도 돋보였다. 또 공공청사의 사회적 파급성 측면을 고려할 때 녹색건축물의 우수성과 편리성을 널리 알리는 데도 적합하였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상에는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에는 교보생명(광주 누문동) 사옥 리모델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는 국립생태원 생태체험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주관 및 6개 후원기관에 대한 유관단체상을 포함하여 총 11개의 작품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3회째를 맞는 2014 대한민국 녹색건축은 지난 6월 30일 공고되어 모든 녹색건축물과 그린 리모델링 건축물을 대상으로 8월 29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았다. 이후 1·2·3차 심사를 거쳐 10월 29일 시상 및 전시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한다. 올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맞물려 우수한 공공건축물의 접수가 많았으며, 소규모 녹색건축물(단독주택 및 전원주택)의 접수 문의도 잇따랐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대규모 건축물이나 건설 회사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녹색건축기술이 이제는 국민 속으로 녹아드는 움직임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맺음말

저명한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은 〈3차 산업혁명〉에서 화석연료 시대는 종말을 맞고, 인터넷기술과 재생에너지가 합쳐져 전혀 새로운 제3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올 것으로 예견하였다. 지구촌의 주택과 사무실 등에서 그들만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소통하듯 에너지를 주고받는 시대를 의미한다. 각 나라의 건물에너지 정책을 보면 재생에너지 개발과 패시브 디자인을 통한 에너지 절감인 녹색건축물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 제러미 리프킨 교수의 제3차 산업혁명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은 녹색건축에 대한 촉제와 소통의 장이다. 녹색정책 홍보보다는 자연을 닮은 건축물, 자연과 공존하는 건축물이 주는 삶의 윤택과 풍요로움을 국민들과 나누는 자리다. 오직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만을 위해 제도와 법률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보다는 시장에 서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이 만들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3차 산업혁명의 다섯 가지 핵심요소

1.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한다.
2. 모든 대륙의 건물을 현장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미니 발전소로 변형한다.
3. 모든 건물과 인프라 전체에 수소저장기술과 여타의 저장 기술을 보급하여 불규칙적으로 생성되는 에너지를 보존한다.
4.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대륙의 동력 그리드를 인터넷과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는 에너지공유 인터넷그리드로 전환한다.
(수백만 개의 빌딩이 소량의 에너지를 생성하면 잉여 에너지는 그리드로 되팔아 대륙 내 이웃들이 사용할 수 있다.)
5. 교통수단을 전원연결 및 연료전지 차량으로 교체하고 대륙별 양방향 스마트 동력 그리드상에서 전기를 사고 팔 수 있게 한다.

자료 : 제러미 리프킨, 2012

따라서 녹색건축물이 일반 건축물보다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을 짓기 위한 기술은 일반 건축물보다 설계적으로나 설비적으로 조금 더 비용을 요구한다. 아직까지는 녹색건축물의 가치가 일반건축물의 가치보다 경제적으로 더 높게 거래되거나 평가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녹색건축물의 에너지 첨단기술 및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환경의 보전을 통해 녹색건축물의 가치가 일반건축물의 가치보다 더 높게 시장에서 인정받을 날은 멀지 않았다. 이에 대한 고민도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녹색자연의 창조적 공간의 가치는 무한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은 녹색건축의 설계기법과 시공기술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우수사례를 직접 접해 보고, 녹색건축에 대한 정책성과와 함께 녹색도시의 미래를 공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1 제러미 리프킨, 『3차 산업혁명』, 민음사, 2012.

푸에르토리코

비에케스(Vieques) 섬의

생태 복원 사업 :

미국 해군 군사 기지로부터의 해방,

그 후 10년

정수지

러트거스대학교 도시계획 및
공공정책학과 박사과정

비에케스(Vieques) 섬은 카리브 해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본토로부터 남동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이다. 지난 1941년부터 2003년까지 미 해군은 이 섬 전체 면적(348.15km²)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해상 폭격훈련과 화학무기 창고로 이용하였다. 약 59km²에 해당하는 섬의 동쪽 끝 지역은 실제 폭발물을 이용한 훈련을 실시하는 장소로 이용되었으며, 약 33km²의 서쪽 지역은 폭발물 무기고로 활용되었다^{*)}.

이렇게 해상 폭격훈련으로 인해 섬의 자연경관이 점차 피해를 입고 섬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게 되자 비에케스 섬 주민은 미 해군의 인권침해와 환경파괴에 반대하는 시위

를 열게 되고, 이로 인하여 미 해군의 점거 실태를 두고 국제적 비난 여론이 일게 되었다. 그 결과 미 해군은 2003년 비에케스 섬에서 철수하게 된다.

이후 비에케스 섬은 크게 세 가지 화두에 직면하게 되었다. 첫째는 이전한 미 해군 군사 지역에 소속되어 있던 토지 소유권을 시와 민간에 이양하는 문제였다. 둘째는 폭탄과 지뢰 제거 작업으로 지역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와 초토화된 자연 생태계를 복구하는 문제였다. 그리고 셋째는 이 모든 정책사업 과정에서 주민 의사와 참여 여부 등을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에 관한 문제였다.

우선 이전한 미 해군의 군사훈련 지역은 대부분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US Fish and Wildlife Service)에서 관리하는 비에케스 야생동물보호구역(Vieques National Wildlife Refuge)으로 바뀌었다. 나머지 소규모의 지역은 푸에르토리코 자연보호 신탁지역(Puerto Rico Conservation Trust)이 되거나 비에케스 섬 시 당국으로 환원되었다.

토지 환원과 분할의 판단 근거로는 해군기지의 폭발물과 탄약 매설 여부 및 민간인들의 접근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폭발훈련장으로 이용되던 동쪽 대부분의 지역과 무기고였던 서쪽 지역은 일반인에게 바로 개방할 수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었기에 야생동물보호지역으로 설정되었으며, 폭발물 제거가 완료된 지역과 민간인의 접근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한해 개방되었다. 앞으로 어류 및 야생

※

Atlantic Fleet Weapons Training Area -
Vieques Activities from 2001 to 2013, May
2013, Update 2013년 5월 2013,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p1



비에케스 섬의 위치 및 이전 군사훈련지역 및 무기창고 지역 지도

(자료: CH2MHILL, "Community Involvement Plan
- Former Naval Facilities Vieques Island, Puerto Rico," 2007년 6월)



비에케스섬의 수거된 폭발물

(자료: NAVFAC Atlantic, Presentation on Munitions and environmental program update- Former VNTR, <http://www.crrt.nrt.org/production/NRT/RRTHome.nsf/resources/CRRTHome.nsf/resources/CRRTHome.nsf/ViequesUpdate.pdf>)



개방된 그린 비치의 전경

(자료: <http://www.crrt.nrt.org/production/NRT/RRTHome.nsf/resources/CRRTHome.nsf/resources/CRRTHome.nsf/ViequesUpdate.pdf>)

동물 관리국은 장기적인 환경보전계획^{*)}을 가지고 비에케스 국립 야생동물보호구역이 단순히 생태계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가족 여가생활과 생태계 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슈퍼펀드 정책의 시행

미국은 비에케스 섬의 이전 군사지역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폭탄을 제거하고 오염된 생태계를 복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슈퍼펀드(Superfund)^{**)} 정책을 적극 운용하였다. 슈퍼펀드는 화학·위해물질로 오염된 지역에 대해 미국 연방정부와 관련된 정부기관들이 장·단기간 지역 환경 복구에 필

요한 자원을 법적·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일컫는다.

슈퍼펀드 정책에 따라 비에케스 섬의 환경 복원에 필요한 예산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아 장기적 계획을 펼칠 수 있었다. 그 결과 미 해군은 2005년부터 2013년 4월까지 1억 8,300만 달러(약 1,900억 원)를 들여 폭발물이 있으리라 추정되는 18개 구역을 조사하였다. 지금까지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된 위험지역 총 36.4km² 가운데 약 11km²의 지역에서 폭발 위험물과 파편을 제거하였다. 그 과정에서 총 3만 8,386개의 폭발물이 수거되었다. 미 해군은 슈퍼펀드 예산으로 2022년까지 토지복구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2029년까지는

^{*)}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Fish and Wildlife Service Southeast Region, "Vieques National Wildlife Refuge Comprehensive Conservation Plan and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August 2007, p6 (<http://www.fws.gov/southeast/planning/PDFdocuments/ViequesFinalEng/Final%20CCP%20Vieques%20Sig%20Overs.pdf>)

^{**)} 정식 표기명은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CERCLA)이다. 오염·위해물질로 오염된 지역을 정화하기 위한 미국연방법의 일환으로, 주로 슈퍼펀드(Superfund)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오일산업, 화학산업 등에 부과된 세금을 예산으로 하는 환경 복구 및 정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연방정부기관과 권리를 이양받은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환경이나 지역 보건·복지를 해치는 피해지역을 복구하거나 그 위험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출처: 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www.epa.gov/superfund/policy/cercla.htm)).

수질 개선 프로젝트를 실행할 예정이다*.

폭발물 제거가 완료된 지역은 민간인에게 개방되었다. 개방된 해변 중 레드 비치, 블루 비치, 그린 비치 등은 그동안 인적 없이 보존된 캐리비안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인해 관광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다.

커뮤니티 참여 계획

한편 슈퍼펀드 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에 발효된 커뮤니티 참여 계획(Community Involvement Plan)에서 미 해군은 폭발물 제거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주민들로 하여금 직접 감사하고 평가하게 하였다. 또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세우는 데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커뮤니티 참여 계획은 연방정부 산하에 있는 기관(미 해군, 환경보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뿐만 아니라 협력기관(국립 해양대기청, 푸에르토리코 정부 직속 비에케스 섬 대책위원회, 푸에르토리코 환경평가위원회, 비에케스 섬 시의회, 비영리 기구와 주민대표 자문위원회 등)**이 일정한 권리와 책임을 갖고 협업하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도록 하였다.

그중 하나의 예로, 주민대표 자문위원회(Restoration Advisory Board)의 정기적인 활동을 들 수 있다. 주민대표 자문위원회는 매년 3~4회의 기관회의 보고와 정기적인 현장학습 및 감사에 참여했다. 이 활동을 통해 주민들은 미 해군과 협력업체로부터 폭발물 제거 과정에 대한 계획과 진행 과정을 보고받고, 애로사항을 환경 전문가 및 생태계 연구자와 함께 논의할 수 있었다. 특히 현지 지형이나 생태 역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섬주민의 비판적 의견은 토

지용도 변경과 운영 계획에 반영돼 민주적인 의견 교류에 기반한 지역 개발 계획이 가능하였다.

비에케스 섬은 슈퍼펀드 정책에 힘입어 폭발물 처리와 환경 위해물질을 제거하는 과제와 민간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과제를 10년간 해결해 나가고 있다. 물론 현재에도 미 해군기지의 폭격 연습이 남긴 상처는 섬의 이곳저곳 폭발물 파편과 수많은 접근금지 팻말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에케스 섬은 지역성 회복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통해, 숨겨진 캐리비안의 생태보고이자 주민들의 온전한 보금자리로 서서히 탈바꿈 하고 있다.

참고문헌

- 1 Carmen I. Aponte, "U.S. Navy versus Vieques, Puerto Rico: Social Justice Through Civil Disobedience", *Journal of Poverty*, October 2008.
(http://dx.doi.org/10.1300/J134v08n04_04)
- 2 Sherrie Bayer, "Peace Is More Than The End of Bombing: The Second Stage of the Vieques Struggle," *Latin American Perspectives*, January 2006.
- 3 Katherine T. McCaffrey, "Forging Solidarity: Politics, Protest, and the Vieques Solidarity Network," *The Puerto Rican Movement: Voices from the Diaspora*, eds, Andres Torres and Jose Velazquez,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98, pp.329-339.
- 4 Katherine T. McCaffrey, *Military Power and Popular Protest: The U.S. Navy in Vieques, Puerto Rico*,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2002.
- 5 Katherine T. McCaffrey, "Social Struggle Against the U.S. Navy in Vieques, Puerto Rico: Two Movements in History," *Latin American Perspectives*, January 2006. (<http://www.jstor.org/stable/27647907>)
- 6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Fish and Wildlife Service Southeast Region, "Vieques National Wildlife Refuge Comprehensive Conservation Plan and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August 2007, p.6.
- 7 U.S Department of the Navy Naval Facilities Engineering Command Atlantic, "Community Involvement Plan", 2007, pp.13-15.
- 8 U.S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Atlantic Fleet Weapons Training Area - Vieques Activities from 2001 to 2013", May 2013, p.2.
- 9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http://www.epa.gov/superfund/policy/cercla.htm>)

* U.S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Atlantic Fleet Weapons Training Area - Vieques Activities from 2001 to 2013", May 2013, p.2.

** U.S Department of the Navy Naval Facilities Engineering Command Atlantic, "Community Involvement Plan", 2007, pp.13-15.

01

영국왕립건축가협회, 정부에 장기적 건축정책의 필요성 제언

영국왕립건축가협회(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 RIBA)에서 차기 정부의 장기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보고서 'Building a Better Britain'을 발간하였다.

현재 영국의 주요 도시는 경기침체, 주택 감소, 인구 고령화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협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장소 형성(shaping places)'을 통한 건축계획 및 건축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택, 교육, 건강, 에너지, 재해 등 다섯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장기적·통합적 차원에서 해당 건축정책이 실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협회는 향후 건축정책이 국가 공간전략(National Spatial Strategy)과 동일선상에서 개발될 것과, 지속가능한 자본 운용을 위하여 경제정책과도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건설 부문에서 최고설계고문을 임명할 것을 촉구하며 건축정책의 추진을 위한 의제 설정 및 의사전달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왕립건축가협회장 스티븐 호더(Stephen Hodder)는 차기 정부가 정책 입안 과정에서 건축과 건축 환경에 시선을 돌릴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차기 정부는 도시와 지자체 및 각 마을의 번영을 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주택과 교육시설은 물론 각종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은 건축과 건축 환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다. 그린벨트를 재구성하고, 더 많은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며, 최근의 실패한 교육시설 프로그램을 개선함으로써 세계무대에서 영국 도시의 권위를 회복시켜야 한다.”

<http://www.bdonline.co.uk/uk-needs-an-architecture-policy-riba-tells-parties/5069501.article>

02

미국 HUD(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샌디 복구전략 보고서 재정비

샌디 피해지역의 많은 거주민과 직장인들이 여전히 복구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그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복구전략 보고서* 재정비를 통하여 복구계획 및 서비스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재정비된 복구전략 보고서는 7가지 목표의 수행을 위한 세부 권고사항을 발전시켰고, 샌디 프로그램 관리자(PMO)를 통한 데이터 공유 및 책임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항목은 기존 복구전략에서 제시하였던 사전 정보와 더불어 수행할 수 있는 주체기관을 명시하고 있으며, 계획 진행이 강조된 지역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더해졌다.

샌디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7가지 목표

- 향후 재난 재발 가능성 고려하여 회복탄력적인 재건 촉진
-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지역 간 의견조율과 탄력적인 접근 독려
- 주택의 복원 및 강화, 사회 주택 옵션 제공
- 소규모 비즈니스 공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보험의 적법성과 경제성 안내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장기 복구 및 재건 계획 수립
- 연방정부, 각 주, 지방정부 간 관련 데이터 공유

http://portal.hud.gov/hudportal/HUD?src=/press/press_releases_media_advisories/2014/HUDNo_14-076

*

2013년 허리케인 샌디 복구 TF팀은 피해지역의 재건을 위한 복구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복구전략은 지역 재건을 위한 장기 계획과 미래의 재난에 대비한 회복탄력적인 지역사회 구축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계획안은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과 동일선상에서 작용토록 하였다.

자가용 소유를 무의미하게 만들 헬싱키의 도시교통 계획안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는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수요에 의한 이동(mobility by demand)'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이번 계획은 이론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자가용의 필요성을 최소화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가격적 측면보다 편리함과 사용의 용이함에 있어서 자가용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수요에 의한 이동' 시스템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헬싱키의 시민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이동경로를 안내받고 이동수단을 구매할 수 있다. 출발지와 목적지, 그리고 몇 가지의 기본 설정사항만 기입하면 된다. 애플리케이션은 무인자동차, 미니버스, 공용자전거, 1인용 페리 등 헬싱키 내의 모든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이동경로를 계획해 준다. 이를 위하여 현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도 앱, 자전거 대여서비스

앱, 택시 앱 등이 함께 활용된다. 아울러 버스와 택시의 중간 개념으로 제안된 'kutsuplus(kutsuplus)' 서비스가 활용된다. kutsuplus는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신개념 미니버스다.

그러나 '수요에 의한 이동' 시스템에 대해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헬싱키의 대중교통은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전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이 시스템이 전체 대중을 위한 진정한 차세대 대중교통 시스템인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또 도시지역뿐 아니라 저밀도의 지방도시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 역시 남아 있다.

<http://archinect.com/news/article/104709729/helsinki-s-ambitious-plan-to-make-car-ownership-pointless-in-10-years>



kutsuplus(kutsuplus) 서비스 이용방법 (출처: <https://kutsuplus.fi/home>)

04

멜버른의 도시계획 보고서 ‘안전한 도시를 넘어’

멜버른 시는 오랜 시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도시 만들기에 집중해 왔다. 1996년 처음 발표된 ‘안전한 도시를 위한 전략’은 멜버른 시의 복잡한 지역안전문제를 관리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해 왔다.

올해 멜버른 시는 기존의 안전도시 계획안을 발전시켜 ‘안전한 도시를 넘어(beyond the safe city)’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도시계획(안)을 발표하였다. 기존의 한계를 뛰어 넘는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안전문제에 접근하기 위함이다. 이번 계획은 특히 지역사회의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정의와 평등, 포괄성, 연결성, 회복탄력성 등의 요소가 도시계획 가운데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가 24시간 동안 작동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24시간 도시’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오늘날의 도시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어 점차 복잡하고 다기능화되고 있다. ‘24시간 도시’는 오늘날 도시의 행태와 문화로부터 발생하는 다각도의 요구를 인식함으로써 공공 공간, 지역 서비스,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각종 이벤트의 효과적 설계 및 관리를 추구한다.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offers-support-for-locally-led-garden-cities>

안전한 도시를 넘어 : 7개 원칙과 5가지 테마

7개 원칙

1. 통합적이고 기반이 탄탄한 해결책을 제시
2. 협력체계 구축
3. 커뮤니티 강화
4. 폭력의 최소화
5. 예방에 전력
6. 성별을 고려한 응답
7. 디자인을 통한 안전

5가지 테마

1. 24시간 활동하는 창조적인 도시 구축
2. 범죄와 폭력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적·문화적 규범을 변화
3.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환경을 개발
4. 술과 마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범죄 최소화
5. 건축 환경의 안전성 강화

토론토의 공공공간 발굴 및 활용방안

토론토 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는 도시공간에 일련의 변화를 가져왔다. 다양한 유형의 대규모 건축공간과 공원녹지 등이 주차장과 작은 건물들로 대체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시에는 공적이지도 사적이지도 않은 공간을 만들어 냈다. 이는 개인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관리되지만 공공의 접근과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POPS(Privately Owned Publicly-Accessible Spaces)'라고 일컬어진다.

2012년 토론토 도시위원회는 공공공간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POPS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POPS는 대중적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공적 공간으로서 쉽게 인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으로는 앉아서 머무를 만한 시설이 부족하거나 잘 가꾸어지지 못한 경관상의 문제로 활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토론토 도시계획부는 이들 공간을 적절한 방식으로 설계하고 공적 활용성을 알리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고, 올해 초 그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적절한 설계를 통하여 벤치·조명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머무를 만한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다. 더불어 POPS가 주변의 오픈스페이스와 생태·문화적 요충지,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공공장소 등과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시계획부는 현재 약 400개의 광장·보행로·오픈스페이스 등을 POPS로 정의하고,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공간을 재구성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http://urbantoronto.ca/news/2014/06/toronto-presents-guidelines-privately-owned-publicly-accessible-spaces>



첫 번째 POPS 명패가 세워진 콩코드 시티플레이스

0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표준안 배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도시재생정책 입안과 사업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조례 표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올해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된 13곳의 지자체는 계획이 구체화되는 금년 말부터 본 조례안을 기초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본 조례안이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주요한 동력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조례 표준안은 주민협의체 구성 등 주민 참여를 강조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행정부서), 민·관 협력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장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보조 또는 용자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지원 금액의 환수 및 용자지원의 조건 등 세부사항을 제시한다. 도시재생특별회계 및 규제완화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본 조례 표준안은 「도시재생특별법」 시행 직후인 작년 12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과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초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과 법제처 사전검토 등을 거쳐 확정하였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2014.9.2.

02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제로에너지조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제로에너지빌딩의 공사비 증가에 대한 문제를 건축 기준 완화와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고 안건의 핵심 내용은 첫째, 현실적으로 제로화가 가능한 수준에서 사업방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저층·고층·타운형 3가지 맞춤형 사업모형을 마련한다. 둘째, 30% 이상 추가되는 초기 공사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범위에서 조례에서 정한 상한의 15/100를 완화함으로써 늘어나는 공간을 분양하여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후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을 통하여 세제 혜택과 에너지 절감의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축자재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넷째, 시범사업 공모를 시행하고, 신재생설치 보조금 등 각종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및 신산업 창출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건축시장을 선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선도할 뜻도 밝혔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2014.7.17.

11월부터 건축물 등에 ‘안전·범죄예방 기준’ 의무 적용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기준과 건축물 범죄예방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19일 입법예고하였다. 해당 내용은 협의 및 심사를 거쳐 금년 11월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공동주택(500가구 이상),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관광휴게시설이나 고시원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하여야 한다. 해당 내용은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집회장과 전시장 등 다중이용건축물과 분양하는 건축물은 천장·벽·바닥 등 실내 공간에 칸막이나 장식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야 한다. 최근 건축물 안에서 증가하고 있는 미끄럼·

끼임·충돌 등 생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실내건축 제도와 기준 의무화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공작물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의무가 없어 태풍 시노후 철탑 등의 붕괴로 건축물과 인명 피해가 잦았다. 따라서 철탑·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공작물 축조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3년마다 공작물의 유지·관리 점검표(부식·손상상태 등)에 따라 점검하고,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행강제금 산정 시 위반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위반행위의 고의성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기시정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매년 주기적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1회차, 2회차까지 20% 감경하여 부과토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14.8.19.

신진건축사 발굴 · 육성정책 활성화

해외의 건축정책을 살펴보면, 신진건축가 발굴과 육성 차원에서 장학제도를 마련하거나 유로판(Europan)과 같은 국제 건축설계경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년 5월) 수립을 계기로 신진건축사 육성 방안을 세부 정책과제로 마련한 바 있다. 현재 이들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신진건축사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작 확정

국토교통부는 신진건축사들이 공공 설계시장에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진건축사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여 왔다. 신진건축사 아이디어 공모는 신진건축사에 게 다양한 공공사업 참여의 물꼬를 터줌과 동시에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신진건축사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공공디자인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난 5월 국토부는 사업 참여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만 45세 이하의 신진건축사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하였으며, 7월 초에 개념도 및 이미지 등을 담은 A3용지 5쪽 이내의 제출물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계획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평가하고 당선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당선자에게 해당 프로젝트의 설계권을 부여하는 부산시 금정구청의 '웅벽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 공모에는 남욱재

건축사(이솜 건축사사무소)가 당선되었다. 웅벽환경개선의 현실성을 염두에 두고 5가지로 구분한 디자인이 우수하였으며, 시공성과 유지·관리적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전광역시 '동명초 효평분교 리모델링 및 관광자원화' 공모에는 전병헌 건축사(더사이트 건축사사무소)가 당선되었다. 신소재인 폴리카보네이트를 접목한 저예산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아이디어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2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추가 시행할 예정"이라며 "신진건축사 설계공모와 신진건축사 대상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의 정책을 통하여 신진건축사 발굴 · 육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2014.7.11.

'2014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 수상자 선정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은 창의력과 기술력 등 설계자의 역량을 중시하는 여건을 마련하고, 경력부족 등으로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신진건축사들에게 설계능력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축설계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건축제전이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하며 올해로 2회째 시행되고 있다.

이번 '2014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은 지난 5월에 공고되

2014 생활문화센터 국고지원사업 최종 선정

어 총 41명의 신진들이 지원하였으며,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8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번 신진건축사 대상의 심사(위원장 인의식)는 대표 설계 작품의 완성도, 건축사로서의 창조적 역량 및 건축주·시공자와의 소통능력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심사평에 따르면, 대상 수상자인 김현진 건축사(에스피엘케이 건축사사무소)는 설계는 물론 시공과정에 이르기까지의 노력과 탁월한 세부디자인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윤태권 건축사(엔진포스 건축사사무소)와 노영자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엘아이엠)는 설계 작품에서 사용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 신진다운 다양한 시도 등이 돋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해 수상자들을 심의·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다방면으로 실질적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전하였다.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2014.8.19.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민생활밀착형 문화시설인 생활문화센터(구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2014년 국고지원사업으로 12개 광역 지자체의 31개 시설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리모델링 사업비(97억 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입지와 규모·기능에 따라 거점형과 생활권형으로 구분되는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의 유휴공간과 기존 문화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의무시설(동아리방, 다목적홀 등)과 특성화시설(댄스연습실, 공작소, 영상미디어실, 작은영화관, 생활체육공간, 문화카페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지역주민의 표현과 소통의 문화공간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의 생활 의제를 담은 프로그램과 주민운영위원회,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2014년 최종 지원 대상 시설로 선정된 생활문화센터는 그동안 도시 발전, 생활방식, 정부 인구의 변화 등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거나 사업이 중단되어 지역의 애물단지로 여겨지던 목욕탕·폐교·모텔·주민센터·승마장 등의 유휴시설을, 해당 시설이 갖고 있는 시·공간적 의미를 살리며 친근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조성될 예정이다. 유휴시설의 재활용 방식 외에도 시설 노후와 이용자 감소로 그 기능이 쇠퇴한 기존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기타 전시시설 등 기존 문화시설의 일부 공간을 생활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운영 활성화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2014.6.30.

경기도, 서울시 등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책 마련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뉴타운 사업과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소규모 정비사업이 도입되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 등은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 국비지원을 통해 맞춤형 정비사업 가속도

경기도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뉴타운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이 불량한 구도심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지난 7월 맞춤형 정비사업을 통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 수원 매산, 성남 단대, 남양주 군장, 오산 오외장터 등 도내 4개 지구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2018년까지 국비 지원을 받게 되었다.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은 지자체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활력 증진지역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여 30%를 지원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보다 국비 지원율이 높아 지방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선정된 4개 지구는 사업비로 도로·공용주차장·공원 등 정비기반시설과 마을회관·경로당·어린이집 등 공동이용시설을 정비하거나 확충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밟는 데

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맞춤형 정비사업을 진행해 계획을 우선 수립한 것이 정부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경기도 도시기획과 주거정비팀 2014.7.2

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서울시는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4대 공공지원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4대 공공지원책은 △조합설립·용자지원 등 공공관리제도 적용 △미분양 주택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매입 △사업관리 및 공동시행자로 SH공사 참여 추진 △25개 자치구 업무전담부서 지정 및 업무처리 매뉴얼 배포다.

공공지원책을 통하여 사업주체는 기존 조합 운영자금 용자지원에서 건축공사비도 전체 40% 이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2% 저리로 용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건립된 주택 중 미분양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시가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아울러 주민 스스로 계획수립 및 추정분담금 산정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자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치구청장이 개략적인 계획수립과 사업비, 추정분담금을 산정·제공해 주민들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2014.7.17.

부산시, 걷고 싶은 보행친화도시 만들기 추진

부산시는 사람 중심의 도심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하고자 2014년을 '보행친화도시 부산 원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보행환경개선 정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시는 이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행환경개선지구 시범사업을 선정하였다.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보행친화도시 부산비전 수립, 보행환경개선 지구사업 중앙공모, 보행자 전용거리 지정 시범운영 등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행환경개선 지구시범사업은 지난 7월 보행환경개선자문단(9명)에서 심의한 결과 북구 젊음의 거리, 수영구 예술의 거리가 최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매년 2곳 이상 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0월부터는 보행전용거리(차 없는 거리) 시범 추진에 따라 주말에는 시민공원과 서면 주변 등 보행자들의 통행량이 많은 거리를 대상으로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거리를 운영(1회 이상 3개월간)한다. 또 시범운영 기간 중 성과를 분석해 전 구·군에 지역특성에 맞게 유형별 보행거리조성을 추진토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부산광역시 교통운영과 2014.7.10.

충남 서북부지역 '난개발 방지 TF팀' 가동

충남도는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도내 서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 방지 TF팀을 가동하고, 개발과 보존이 함께할 수 있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서북부지역은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인접해 개발압력에 따른 공장, 주거단지 개발 등이 급속하게 진행 중으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더욱이 단기간 집중 개발로 인해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토지의 비효율적 공급 등 각종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도는 난개발이 예상되는 해당 시와 협력하여 TF팀을 구성, 중장기적인 난개발 방지 대응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응계획에는 소규모 개발부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환경성과 경관성 검토를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과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도는 효과적인 대응계획 수립을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도·시 합동 TF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도시개발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2014.8.6.

장소탐방

도시와 공간의 가치는 '공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와 현재처럼 지나온 시간 없이, 그 안에 향유하는 사람 없이, 자연과 다른 공간과 상호 작용 없이 오직 홀로 의미를 가지고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삼례문화예술촌에서는 과거와 현재, 공간과 사람이 만난다. 과거 일제 수탈의 아픈 과거를 간직하고 있는 삼례양곡창고를, 주민들과 예술인들처럼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더욱 의미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광고신도시의 광고호수공원은 현대의 문명에 자연을 더한 공간이다. 그러므로써 지금 이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공간은 물론, 조화와 공존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아픈 수탈의 현장에서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삼례문화예술촌

지역의 지리적 · 문화적 가치를 발견하고
고양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삼례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대표적
문화예술의 도시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삼례문화예술촌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예술가와 주민이 어우러져 모든
일상을 문화예술과 함께 하는 장소로
만들고자 한다.



도시를 품어 주고, 생명을 키워 내는 광교호수공원

매끈하게 지어진 광교신도시가 이성적이고
남성적이라면, 대자연을 통해 해방감을
맛보는 광교호수공원은 도시를 품어
주고 생명을 키워 내는 엄마의 품이다.
광교호수공원은 기억 · 생명 · 감성 · 창조의
'성(性)'을 가진 도시자연이자 문화적
기반으로 삶에 뿌리 내리는, 광교신도시를
완성하는 부드러운 힘이 될 것이다.

아픈 수탈의 현장에서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삼례문화예술촌

2013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김상기
디엔씨건축사사무소 대표

설계 개요

| | |
|------|----------------------------|
| 사업명 | 삼례문화예술촌 조성사업 |
| 대지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후정리 247-1번지 |
| 지역지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상대정화구역 |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 대지면적 | 1만 1,825.00㎡ |
| 건축면적 | 3,006.55㎡ |
| 연면적 | 2,669.18㎡ |
| 건폐율 | 25.43% |
| 용적률 | 21.78% |
| 조경면적 | 1,843.00㎡ |

디엔씨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상기(대표 설계자)
(주)휴먼씨 대표 박명구(공동 참여자)







삼례문화예술촌의 탄생

삼례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백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백제 완산주에 소속되어 있던 삼례는 통일신라시대엔 전주(全州), 조선조 중엽엔 전주부(全州府)에 속하였고, 1907년 전주부 삼례면으로 개칭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1956년 7월 8일 완주군 삼례읍으로 승격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삼례읍은 만경강 상류에 위치하여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온화한 만경평야의 일원을 이루는 지역으로, 완주군에 속한 13개 읍·면 중

2014년 5월 현재 면적으로는 9.3%, 인구는 17.38%를 차지한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의 문화예술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을 찾고자 완주군과 문화예술인들이 머리를 맞대었다.

그래서 나온 프로젝트 중 하나가 '삼례문화예술촌' 사업이다. 100여 년 전에 지어진 창고를 철거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현대감각에 어울



삼례문화예술촌 전경(© ㈜휴먼씨)

리는 복합 문화시설을 만들기 위해 2010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삼례문화예술촌의 전신인 삼례양곡창고는 일제강점기 때(1926년) 일본인 대지주 시라세이가 설립한 이엽사농장 창고로 추정되며, 완주지방의 식민 농업 회사인 전북농장·조선농장·공축농원과 함께 수탈의 전위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1914년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한 삼례역 철도를 이용해 군산으로 양곡을 이출하는 기지 역할을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군산 일대 조석 간만의 차가 커서 만조 시에 삼례 비비정 마을까지 바닷물이 유입되면 배로도 양곡을 수탈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런 아픈 역사를 가진 삼례양곡창고는 1920년대 신축되어 2010년까지 양곡창고로 사용되다가 저장기술의 발달 등 환경 변화로 기능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재생을 위해 완주군에서 매입하여 문화 공간으로 조성, 2013년 6월 5일 문화와 예술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담은 삼례문화예술촌으로 다시 문을 열게 되었다.

현상설계 공모를 통한 설계 과정

삼례양곡창고는 1920년대에 지어진 330㎡, 190㎡의 양곡창고 5동과 100㎡의 관리동, 1970년대에 농협에서 새로 지은 양곡창고 등 모두 7개동에 기타 창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완주군은 농협으로부터 삼례양곡창고를 매입하던 2010년을 전후해 개발과 보존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검토한 결과, 장소가 갖는 역사적 의미와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전문가·예술인 등으로 TF팀을 구성한 후 구체적인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입주 예정 예술가 선정 등을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결정된 기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2012년 3월 ‘삼례문화예술촌 조성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건축사사무소+전시설계·시공업체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하였다. 공모의 주된 내용은 ①양곡창고(7동)를 활용한 문화예술촌 조성 ②동별·시설별 연계를 위한 관람동선 구상 및 주변 조경 등 문화예술촌에 적합한 외부시설 마련 ③삼례구역사 활용방안 ④삼례구역사 주변 공간 활용방안 등이었다.

그중 삼례구역사와 주변 활용방안은 향후 2단계 사업을 위한 설계자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수준으로 당시 사업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삼례문화예술촌에 대한 제안이 주로 검토되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필자의 사무소와 전시업체인(주)휴먼씨에서는 첫째, 소외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인포메이션센터 외부 전경(©썬휴먼씨)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늘리며,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재생과 함께 삼례 및 완주군의 핵심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셋째, 예술가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공공예술의 스펙트럼을 확장하여 삼례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계획방향으로 정하고, 이곳을 역사적 가치를 간직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탄생시키고자 약 8개월에 걸쳐 설계(안)을 발전시켰다. 각 동별 용도와 활용방안 등 공모전의 지침이 비교적 명확했던 관계로, 기본설계 진행 과정에서 당초 구상한 창고 7개 동의 프로그램 중 일부 기능(풍류마당학습관 등)이 조정되고 입주 예술가가 변경되는 약간의 진통이 있었으나 큰 틀에서의 방향은 유지되었다. 또 기능상 필요 없는 창고들과 4동 앞의 대형 굴뚝이 철거되었는데, 굴뚝은 그 자체로 디자인이 아름답고 주변과 잘 조화를 이뤘던 만큼 보존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포메이션센터(1동)

정문 앞에 위치하고, 입주기관과 방문자를 위한 종합세미나실·사무실·응접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례문화예술촌 전체의 안내 역할을 담당한다.

인포메이션센터는 한때 관리인이 실제 거주하면서 양곡창고를 관리하던 시설이었으며, 일본 전통 가옥 형식의 건축물로 현대적인 건물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고풍스럽고 멋스러운 외관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균열 부위 보수, 인방 보강, 부식되고 떨어진 합판 교체 등을 하였다. 또 입면 변경에 따른 창호 상부의 골함석 차양을 재활용하고, 장애인용 램프를 제외한 인공적인 부가물을 배제하였다.

결과적으로, 마치 전통 방식으로 문화재를 복원한 듯 관람객들의 시선을 한눈에 받는 인상적인 건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비주얼미디어아트미술관 내부 전시공간(©썬휴먼씨)



비주얼미디어아트미술관(2층) 평면도



비주얼미디어아트미술관(2층) 단면도



비주얼미디어아트미술관(2층) 평면도



비주얼미디어아트미술관(2층) 단면도

비주얼미디어아트미술관(2층)

비주얼미디어아트미술관(VM아트미술관) 관장을 맡고 있는 서양화가 이기전 화백은 '예술은 특별하게 타고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재미있게 즐기며 예술을 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같이 즐기고 참여하는 미술관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런 생각을 펼쳐 보이기 위해 삼례 양곡창고는 최적의 장소였다.

다른 건물과 마찬가지로 기존 양곡창고의 출입문을 그대로 활용하였으며, 골함석 위에 녹물이 흘러내린 외벽과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페인트 글씨는 이 건물이 어떤 용도인지 알 수 없는 묘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내부 전시공간은 양곡의 신선도 보존을 위해 회벽 바탕에 빗살무늬 문양으로 마감한 벽체를 있는 그대로 노출하고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여 최소한의 구획만으로도 그 자체가 훌륭한 예술작품이 될 수 있도록 마감하였다.



문화카페 내부 공간(©썬휴먼씨)

문화카페(3동)

문화카페는 VM아트미술관(2동)과 마주보는 쌍둥이 건물이다. 당초 구상은 2동과 데크 레벨에서 서로 연계하고 그 사이에 휴게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으나, 미술관과 문화카페의 평면계획 변경으로 지붕은 서로 연결하고 외부공간은 수공간과 식재 등 조경 공간으로 변경하였다.

남쪽 홀 일부를 확장한 후 외부 데크를 설치하고 연못을 새로 파서 관람객들이 실내외에서 휴식을 즐기도록 하였다. 특히 내부는 밝고 어두운 공간의 대비, 기존 빗살무늬 벽체와 새로운 인테리어의 조화와 함께 커피 아카데미 등 교육과 전시·공연까지 고려한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문화카페 외부 전경(©썬휴먼씨)



책공방북아트센터(4동)

유럽식 북아트 공방을 도입하여 책 만드는 과정과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조성한 책공방북아트센터는 개인과 단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책과 인쇄물을 만드는 여러 기계장치들을 전시하고 있다.

기존 양곡창고들 중 가장 넓고 면적이 협소하여 지붕의 전면 보수가 이루어졌다. 외부 기둥과 처마 등은 최대한 원형의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장에 야적되어 있던 목재를 사용하여 기존 시설과 어울리도록 하였고, 내부는 벽면을 이용한 전시공간을 활용하여 가용 실내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책공방북아트센터 외부 전경(©㈜휴먼씨)

유럽식 북아트 공방을 도입하여 책을 만드는 과정과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조성한 책공방북아트센터는 개인과 단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 책과 인쇄물을 만드는 여러 기계장치들을 전시하고 있다.

책공방북아트센터 내부 체험 공간(©㈜휴먼씨)





디자인뮤지엄 외부 전경(©㈜휴먼씨)

디자인뮤지엄(5동)

디자인뮤지엄은 산업디자인, 제품디자인 등 실생활에 쓰이는 우수한 작품을 소개하고 전시하여 디자인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디자인 변천사를 볼 수 있도록 한 공간이다.

기존의 다른 창고들과 달리 1970년대에 철근 콘크리트 벽돌조로 지어져 시각적으로는 확연하게 구분되나, 삼례문화예술촌의 외부공간 구성에서 오히려 신선한 느낌을 주고 있다.

내부의 시멘트 벽면과 높은 천고, 노출된 박공지붕틀 아래 꾸며진 전 시장은 과거와 현재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하였다.

디자인뮤지엄 내부 전시장(©㈜휴먼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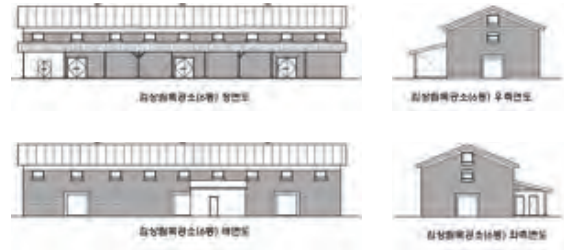


김상림목공소(6동)

우리나라 전통 소목 기술을 활용한 전통가구와 생활가구 제작과정을 체험할 수 있고 직접 목공 기술도 배울 수 있는 장소이다.

책박물관(7동)과 마주보고 평면과 형태가 동일한 벽돌조로 되어 있으며, 처마와 기둥의 전반적인 보수와 함께 후면부의 연약지반을 보강하고 그 위에 일부 창고를 증축하였다.

내벽의 기존 격자형 목재 패턴 벽면은 인테리어 요소로 활용함과 동시에 목공용 도구를 걸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부공간은 작업장과 전시장·주거공간으로 구성하였다.



내벽의 기존 격자형 목재 패턴 벽면은 인테리어 요소로 활용함과 동시에 목공용 도구를 걸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부공간은 작업장과 전시장·주거공간으로 구성하였다.

김상림목공소 내부 체험 공간(©㈜휴먼씨)





책박물관 내부 공간(©휴먼씨)



책박물관 외부 전경(©휴먼씨)

책박물관(7동)

완주는 예로부터 전주와 함께 한지문화를 꽃피운 '책의 고장'이다. 영월에서 책박물관을 운영하던 박대현 관장이 삼례로 이전하여 새롭게 문을 연 책박물관은 신문·잡지·사진·필름 등의 다양한 자료 전시와 함께 지역주민과 일반 시민을 위한 고서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책을 사랑하는 작가들의 참여 속에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출판물의 변천 과정을 전시하고 있으며 간결하고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삼례 책박물관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외부는 6동과 마찬가지로 처마와 인방·기둥 부분의 보수로 원형을 유지하였으며, 내부는 전시물 보호를 위한 항온항습·환기시설과 함께 기존 격자문양 목재들과 전시벽면이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하였다.



삼례문화예술촌 외부 공간(©㈜휴먼씨)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거듭나는 완주

VM아트미술관, 책공방, 목공소 등 삼례문화예술촌 대부분의 콘텐츠가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것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이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TF팀을 구성하여 예술가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완주를 대표적 문화예술의 도시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지자체의 노력에 예술가들이 화답한 결과다.

기본계획 진행 단계에서부터 담당 공무원들과 예술가, 설계·시공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업은 부족한 예산과 한정된 기간 등의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져왔다. 공모전 당선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한 것도 시공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예술촌 전체를 일관성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였다. 준공 후 입주 예술가들과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관람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3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 등 이번 프로젝트를 주관한 완주군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점은 반가움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지역의 지리적·문화적 가치를 발견하고 고양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삼례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대표적 문화예술의 도시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완주군은 향후 삼례문화예술촌을 중심으로 구 삼례 역사를 이용한 막사발미술관, 책마을, 예술인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예술가와 주민이 어우러져 모든 일상이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장소로 만들고자 구상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 상품이 부족하여 콘텐츠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지방 중소도시들에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를 품어 주고,
생명을 키워 내는

광교호수공원



2014 경관대상

최월만
신화컨설팅 대표이사





광교호수공원 조감도

한국의 저수지

한국의 18,000개가 넘는 저수지는 선사시대부터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왔던 흔적이다. 1970년대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저수지는 교외의 유원지가 되었고, 일터와 놀이터가 따로 분리되지 않았던 우리네 삶 속에 저수지는 생산을 위한 관개시설이자 홍수를 제어하는 장치였으며 제

방의 숲은 넉넉한 쉼터이자 공동체의 장이었다. 공원이라는 말이 없던 시절부터 지역마다 고유한 이름의 '방죽'으로 불린 저수지는 고장의 문화와 경관을 반영하며 현대적 의미의 공원을 넘어선다. 또한 교외 유원지가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고픈 욕구를 채우고 고단함을 달래 주었다. 그렇게 저수지는 늘 우리를 끌어 안고 있었다.



광교신도시의 자연·문화적 거점, 광교호수공원

새롭고 매끈하게 지어진 도시가 논리적, 이성적, 남성적이라면, 대자연
 을 통해 해방감을 맛보는 이곳은 도시를 품어 주고 생명을 키워 내는
 엄마의 품이다. 도시를 받쳐온 문화적 기반이 기술적, 물리적 기반보
 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도시 규모를 감당하는 넉넉한 자연성을 담보하

며, 이 자연은 기억, 생명, 감성, 창조의 '성(性)'을 가진 도시자연이
 자 문화적 기반으로 삶에 뿌리내리는 '광교신도시'를 완성하는 부드러
 운 힘이 될 것이다.

광교신도시를 대표하는 광교호수공원은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 일대(2,025,053.6㎡)가 2004년 광교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면서 논의되었다. 이후 광교신도시의 자연적, 문화적 거점이 될 수 있는 호수공원 조성을 목표로 2008년 국제설계 공모를 개최하였다. 국내 조경설계 공모로는 최초로 RFQ(Request for Qualification: 참가의향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내외 8개 업체가^{*} 지명초청되어 경쟁하였다. 신화컨설팅의 'Urban Soft Power'가 당선되었으며, 당선작 선정 이후 약 5년 동안의 실시설계 및 공사기간을 거쳐 마침내 완공되었다.

생산적인 인프라, 공동체의 역할과 공원의 기능까지 포함하는 저수지의 본질적인 의미는 도시 안에서도 그대로다. 우리는 공원의 디자인에 있어서도 의미나 형태가 아니라 저수지를 둘러싼 변화에 대한 대처로 접근했다.

첫 번째 대처. 저수지의 주변의 토속적 풍토 경관을 지키고 구체적인 감각을 느끼며 체험한다.

두 번째 대처. 땅의 기억을 모티브로 하여 새로운 영역 어번 레비(Urban Levee)와 둠bung(Dumbung)을 제안한다.

Design Logic : 어번 레비와 6개 둠bung

광교호수공원은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 두 곳의 저수지 일대를 말하는데 사람들의 이동통로이자 휴식, 모임의 장소였던 원천저수지의 기존 제방에서 이어지는 새로운 제방 '어번 레비'와 땅이 가진 고유한 특성으로 부터 새롭게 창조된 장소인 '6개의 둠bung'으로 조성하였다.

6개 둠bung은 신비한 물너미(Secret of the Water Cylinder), 다목적체험장(Multipurpose Lawn), 행복한 들(Field of Joy(Korean

*

지명 초청된 업체는 다음과 같다.
(주)가원+(주)동심원+(주)삼우건축,
(주)신화컨설팅, 조경설계 서안(주), Field Operations+(주)그룹한 어소시에이트,
발모리 어소시에이트(Balmori Associates),
그로스맥스(GROSS,MAX), 스탠알렌
아키텍트(Stan Alen Architect),
WRT(Wallace Roberts & Todd, LLC)



생산적인 인프라, 공동체의 역할과 공원의 기능까지 포함하는 저수지의 본질적인 의미는 도시 안에서도 그대로다. 우리는 공원의 디자인에 있어서도 의미나 형태가 아니라 저수지를 둘러싼 변화에 대한 대처로 접근했다.

원천저수지 어번 레비 전경



Picnic)), 조용한 물 숲, 향긋한 꽃 섬(Silent Water Forest and Flower Island), 먼 섬숲(Remote Island Forest), 재미난 밭(The Fun Field) 등으로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 곳곳에 조성되어 도시의 다이내믹한 삶으로 작동하는 호수공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원천저수지는 수원 및 수도권 남부지역 시민들의 오랜 기억의 장소이자 대표적인 휴식처였으며, 신대저수지는 주로 낚시터로 이용되며 농업수로 쓰였던 곳이다. 도시의 확장으로 인해 교외의 저수지가 도시 중심에 서게 된 점을 주목하며, 예전 농업저수지의 기능적 역할과 문화적 의미로부터 도시자연이자 도시의 다이내믹한 삶으로 작동하는 호수공원의 역할을 찾고 땅이 가진 고유한 가치와 문화적 기억을 존중함으로써 광고신도시의 창조적이며 강력한 문화적 기반이 되는 호수공원을 만들고자 했다.



어번레비 데크길

마당극장



원천호수에 3개의 테라스로 이루어진 어반 레비(Urban Levee)는 광교신도시 도시민의 일상과 여가를 수용하고 도시와 적극적으로 만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는다. 기존 저수지의 호안을 그대로 유지한 채 떠 있는 구조로 조성된 44레벨의 레비는 가장 가까이에서 물을 바라보고 즐길 수 있다. 47.5 레벨의 레비는 10m 폭의 넓은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지나가는 중심가로로 바닥분수, 플라워가든, 거울 못, 마당극장 등 이벤트가 가득한 산책로이며 수변공원이 되도록 조성하였다. 인접도로와 맞닿은 가장 높은 레비는 주변 곳곳에서 자연스레 호수공원으로의 진입을 유도한다. 또한 레벨의 차이는 나지만 경사도를 고려하여 노약자나 장애인의 수월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성되었다. 특히 600명 이상 수용가능한 마당극장은 어반 레비와 연계하여 간결한 재료 사용과 미려한 아치형 곡선 지붕을 중첩시켜 강한 조형미를 강조하였다. 이와 연계된 진입광장은 도시와 공원을 연결하고 도로와

수변을 연결하는 매개공간으로 레벨차를 이용하는 다양한 수공간과 휴식공간을 조성하였다.

6개의 공간에 뿌려진 동봉들은 고유한 문화적 기억과 연결되는 다양한 스케일의 프로그램과 경관을 담는다. 이곳에 담긴 프로그램은 계절의 변화와 사람들의 수요에 따라 반응하고 장소마다 고유한 가치와 문화적 기억을 바탕으로 한다.

원천저수지 여수로에서 영감을 얻어 계획한 '신비한 물너미(The Secret of the Water Cylinder)'는 지름 60m 규모로 원천호수 수면보다 3m 아래에 위치하여 벽천을 통해 호수의 물이 오버플로우되는 듯한 극적인 체험을 제공하고자 했다. 또한 바닥면에서 솟아오르는 안개분수와 바닥분수는 물과 접하는 다양한 놀이공간이 되기도 한다.

‘신비한 물너미’ 전경





‘행복한 들’에서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



하늘 전망대 전경



30년 전 유원지 나들이의 기억을 살리는 ‘다목적체험장(Multipurpose Lawn)’은 오토캠핑 및 캐러반 캠핑이 가능한 총 33면의 가족캠핑장으로 조성하였다.

한국인의 천변 놀이터를 재현하는 ‘행복한 들(Field of Joy)’은 숲속 쉼터 및 놀이시설, 바닥분수 등이 있는 가족 단위의 피크닉 공간이 된다.

광교신도시의 녹지축과 연계되는 새로운 관문이며 기존의 밭에서 문화에 예술을 일구어내는 ‘재미난 밭(The Fun Field)’은 너른 원형 잔디 밭을 중심으로 인공암벽장, 자연학습원 등이 조성되어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인공암벽장에는 수직구조물의 특성을 이용하여 일반 공

아치형으로 조성된
정다운 다리는 물 위를
걸는 여유로움을 제공하고
다리 위의 정자에서
바라보는 물 위에 떠 있는
조명은 고요한 호수의
운치를 한 층 더해 준다.



원천저수지의 자연습지

원이용자들도 내부계단을 따라 오르면 주변조망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였다.

자연형 공원에 가까운 신대저수지는 기존의 수림이나 지형을 보존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다. 신대호수 제방 근처에 조성된 하늘 전망대는 신대호수 및 행복한 들을 조망할 수 있는 호수공원에서 가장 시야가 트인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양호한 기존 수림과 지형을 보존하고 이에 순응하는 공원을 만들고자 했던 신대호수 주변모습이 한눈에 들어오고, 목재큐브의 프레임을 통해 바라보는 신대호수는 또 다른 경관의 연출이 된다.

신대호수의 오목한 습지에 연꽃을 띄우고 아늑한 숲을 조성한 '조용

한물 숲, 향긋한 꽃 섬(Silent Water Forest and Flower Island)'에는 원형데크 위를 걸으며 안개분수와 함께 연꽃을 감상할 수 있다. 아치형으로 조성된 정다운 다리는 물 위를 걷는 여유로움을 제공하고 다리위의 정자에서 바라볼 때 물 위에 떠 있는 조명은 고요한 호수의 운치를 한층 더해 준다.

원천호수로부터 가장 먼 곳에 만든 '먼 섬숲(Remote Island Forest)'은 신대저수지와 가산천이 만나는 유입부에 있다. 주변 습지와 연계하여 만든 버드나무가 심겨진 섬은 물새들의 서식처를 만들고 한강으로부터 이어지는 광역 자전거도로와 만나며, 호수공원의 또 다른 관문이 된다.



어반 레비의 야간경관



정다운 다리의 야간경관



조명은 공원이용객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단을 향해 빛을 노출시키고 동선과 관계없는 공간에는 빛이 닿지 않도록 하여 ‘빛 공해’를 고려한 계획을 했다.



호수공원의 야간경관은 다채로운 빛이 호수에 반사되어 낮과는 다른 모습을 연출한다. 원천호수의 주보행로인 어번 레비에는 주간경관을 고려하여 조명 폴을 배제하고 조명을 난간 손잡이 하단에 설치했다. 조명은 공원이용객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단을 향해 빛을 노출시키고 동선과 관계없는 공간에는 빛이 닿지 않도록 하여 ‘빛 공해’를 고려한 계획을 했다.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를 아우르는 호수공원은 원천호수와 신대호수로 거듭난다. 원천호수는 도시적이고 다이내믹한 공간이라면, 신대호수는 원래의 자연을 최대한 살려 자연과 함께하는 호수공원이다. 광교신도시 호수공원이 도시와 도시민을 품어주는 넉넉한 자연을 담보하며 “Urban Soft Power”로서 도시민의 일상과 여가를 수용하고 광교신도시의 새로운 도전을 반영하기를 희망한다.

한옥 고치는 책 I - 대청과 방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2013.

이민경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한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한옥생활을 꿈꾸는 수요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옥은 좁고 불편하다’는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속적으로 한옥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방안도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 중인 한옥의 성공적인 변화 모습들을 소개하여 한옥에 대한 좋은 인식을 유도하고 수요를 증대시키는 매체로서 〈한옥 고치는 책〉을 기획하였다.

기획: 〈한옥 고치는 책〉 3부작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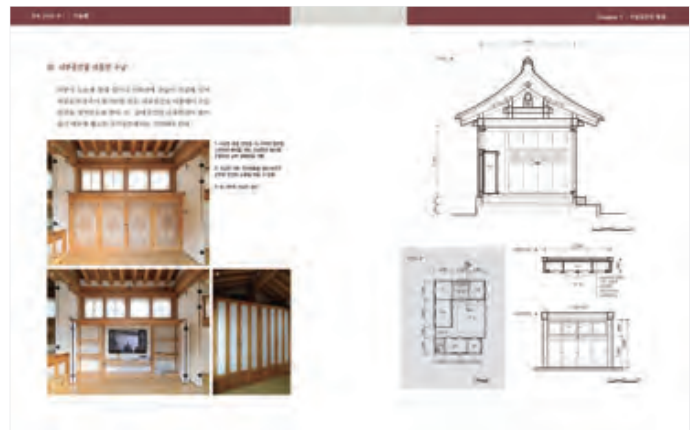
〈한옥 고치는 책〉은 한옥의 거주자와 수요자들의 요구에 대응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제로 건축된 사례를 중심으로 풍부한 도면과 사진, 시공방법 및 제품정보를 함께 수록하였다. 책자에 실린 정보를 누구나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조를 얻어 양질의 자료를 구축하였다.

〈한옥 고치는 책〉은 3부작으로 구성된다. 한옥의 공간을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대청과 방을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다. 두 번째 책에서는 주방·욕실·설비 등 서비스 공간을, 세 번째 책에서는 마당·담장·대문 등 외부공간을 대상으로 사례를 소개한다. 이에 따라 〈한옥 고치는 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한 권씩 시리즈로 발간된다.

그중 〈한옥 고치는 책 I〉은 한옥의 대청과 방이 현대화되면



한옥의 고유한 장점을 계승하면서도
종래의 취약점을 극복하여 세련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우수한 사례들을 통해 한옥을
짓거나 고치는 데 이 책이 유용하게
쓰이기를 기대한다.



서 새롭게 요구되는 변화들을 다루었다. 이에 더하여 대청과 방의 의미나 공간에 대한 소개와 함께 사용재료의 종류와 특성 및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였다.

한옥의 현대화를 위한 대청과 방 고치기 가이드

세부적으로 '1.소개편'에서는 한옥의 현대화를 논의하기에 앞서 전통한옥의 생활공간인 방과 대청의 이해를 돕고자 온돌과 마루의 유래, 대청과 방의 사회적·공간적 의미와 구성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2.기능편'에서는 반외부적 공간이었던 대청의 실내화, 생활양식의 변화와 생활용품의 증가로 인한 공간의 협소함, 현관의 요구 등 현대인의 생활에 맞추어 요구되는 공간변화에 대해 검토하였다. 공간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별동을 증축하거나 마당의 상부를 덮어 내부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결방안의 주안점은 한옥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며 현대적 편의성을 반영한 것으로, 바닥·벽·선반·다락 등을 이용한 수납공간의 설치와 지하공간을 활용한 수직증축, 한옥의 전통미를 훼손하지 않는 현관 및 신발장 설치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3.성능편'에는 한옥에서 관심이 크게 집중되는 바닥·벽·지붕·창호에서의 단열 및 기밀 성능 확보에 관한 해결책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한옥은 본디 숨 쉬는 구조로 단열에 대한 고려

가 취약하다. 또한 목부재의 노후화, 수축과 팽창에 따른 벽·창호·지붕 등의 틈으로부터 들어오는 바람으로 인해 단열에 약한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한옥거주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현대적 재료와 기술을 적용한 바닥 난방 설치 △벽체와 지붕의 단열 △이중창 설치 등 단열과 기밀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4.제품정보편'에서는 한옥을 짓거나 고치는 데 사용되는 재료들을 목재·벽체(단열재 포함)·창호·마감재·조명으로 구분하여 부재와 제품의 종류 및 특징, 제품 사진과 시공 사진을 수록하였다. 특히 한옥의 거주자와 수요자들이 실제 공사 시 취사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의 정보를 수록하였다.

〈한옥 고치는 책〉의 주요 독자는 한옥 거주를 희망하는 국민들과 현재 한옥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한옥의 고유한 장점을 계승하면서도 종래의 취약점을 극복하여 세련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우수한 사례들을 통해 한옥을 짓거나 고치는 데 이 책이 유용하게 쓰이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한옥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과 한옥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내일의 건축

이토 도요, 안그라픽스, 2014.

엄윤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건축을 걷다

김병윤, 기문당, 2014.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의 한국관은 국가관에 주어지는 황금사자상을 받으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 가운데 2012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한국관과 일본관의 커미셔너였던 김병윤과 이토 도요의 책이 비슷한 시기에 발간되어 눈길을 끈다. 두 권의 책은 건축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래의 건축을 생각하다 <내일의 건축>*

<내일의 건축>은 3·11대지진 이후의 건축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한 형식이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 책은 출판사의 제의로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건축의 궤적과 피해 지역에서의 활동, 대지진 이후의 건축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 자료에 가필과 수정을 통하여 출판하였다. 그래서인지 이 책을 읽으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느낌이 생생하다.

책은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3·11 그날의 풍경'은 대지진 이후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자가 보낸 2개의 이메일을 소개한다.

첫 메일은 3월 23일 센다이 시장과 이토 도요 자신이 설계한 센다이 미디어테크의 직원에게 보낸 것으로, 위로와 격려가 담겨 있다. 다음 메일은 센다이를 다녀온 이후인 4월 3일 야마모토 리켄, 나이토 히로시, 구마 겐고, 세지마 가즈요 등 4명의 건축가들에게 보낸 것이다. 추후 진행방향을 설명하는 메일이다. 사고가 있고 즉각적인 행동과 조치들이 취해지는 모습 속에서 이토 도요가 생각하는 건축가와 사회에 대한 고민, 자연과 건축,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고민들을 살펴볼 수 있다.

2장 '가마이시 부흥 프로젝트'는 피해지역 중 하나인 가마이시의 부흥계획에 대한 소개 글이다. 가마이시 지역계획의 관점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적 차원에서의 고민 과정을 설명한다. 기존의 토

지이용계획방식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언급한다.

3장 '모두의 집 프로젝트'는 구체적인 건축 프로젝트다. '모두의 집'은 사고를 겪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의미로서의 명칭이다. 또 가설주택에 수용된 사람들에게 대화와 식사를 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된다. 건축가의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와 적극적인 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건축가와 사용하는 사람 간의 '심리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기록하여 베니스 비엔날레에 전시하게 되었다.

4장 '이토건축학교'는 2011년 이토 도요가 새로운 건축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학교에 대한 이야기로, 기존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언급한다. 5장 '내가 걸어온 길'에서는 건축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돌아보며 사회와 건축의 관계, 건축의 공공성, 공공건축, 이미지로서의 건축, 자연에 가까운 건축 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6장 '미래의 건축을 생각하다'에서 그동안의 건축에 대한 반성과 향후 건축의 방향을 제시하며 책은 마무리된다.

2012년 한국 건축의 모습, <건축을 걷다>

<건축을 걷다>는 2012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의 전시결과 보고서 형식이다. 행사 전체의 주제가 'Common Ground'로 설정된 상황에서 한국관이 정한 주제는 '건축을 걷다'였다.

8명의 참여 작가(김태안, 김현수, 박승홍, 박진택**, 이상림, 오영욱, 한종률, 윤창기)와 3명의 커미셔너(김병윤, 전영훈, 유현준), 그리고 1명의 어드바이저(피터 헤레토)의 글들을 통하여 각자의 입장에서 당시의 전시를 정리하고 있다.

커미셔너는 한국의 건축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건축을 걷다'를 5개의 소주제(Scenographic background to five walks - POST MAX,



POST GRAY, ENGRAVING, EMOTIONS, ENGRAVING TECTONICS, WAT TACTILITY)로 구성하고 다시 8명의 작가가 만들어 내는 8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소주제는 작가의 작업을 위한 느슨한 틀로서만 제공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주제설명은 담겨 있지 않다.

전시는 기존의 패널과 모델의 방식이 아닌 영상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시각이 전제된 '보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걷다'가 가지고 있는 신체의 움직임, 소리를 듣는 것, 체험 등 다양한 신체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유현준 커미셔너의 언급^{※※※}처럼 전시는 멈추어 있지 않고 매번 방문할 때마다 다른 전시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방식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시 자체가 이미 사라져 버렸고, 책에서도 전시공간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도면이나 화보들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다. 글을 통하여 전시 공간을 경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주제에 대한 생각 정도만 볼 수 있다는 한계는 있지만, 2012년 한국 건축의 상황과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해 본다.

당시의 일본관과 한국관이 제시한 주제와 건축가들의 이야기는 2014년 지금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2014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한국관은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이미 한국관의 도록 『Venice Biennale 2014 - Crow's Eye View』(아카라이프,

2014)가 출판되었고, 국내외의 다양한 신문과 잡지 등에서 한국관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그러나 수상만 바라보지 말고 전시가 담고자 했던 것, 그들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다시 잘 살펴봐야 한다. 이 책은 2014년 한국건축의 모습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여 줄 것이다.

※

일본에서 2012년 10월 출간된
“あの日からの建築”의 한국의 번역출판본

※※

박진택은 전시 이후에 별도의 단행본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발간한 바 있다.
『존재사건』(2013, SPACETIME)

※※※

“영상물들은 때로는 시각적으로, 때로는 청각적으로 독립적 혹은 충돌적으로 하나의 전시공간 안에서 비발발처럼 뒤섞여서 비껴져 있다. (중략) 방문자가 방문했던 시각에 그 공간에 전시되는 영상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전시로 ‘편집’되어지는 것이다.”

auri 소식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신규과제를 소개하고 안전한 마을만들기 정책토론회, 한옥포럼, 보행도시포럼, 세미나 등의 다양한 활동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2014년도 수시·수탁 과제 소개

- 수시 과제
- 수탁 과제



포럼 및 세미나

- '안전한 마을만들기 정책토론회' 개최
- 2014 auri 국가한옥센터 제2차 한옥포럼 '오래가는 한옥짓기' 개최
- 2014 auri 보행도시포럼 '보행자를 위한 도시, 정책 현안과 과제' 개최
- auri 근린재생 역량강화 세미나 '근린재생을 위한 전담조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효율적 운영 전략' 개최
- 충청남도 건축관련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연구소 단신

- 2014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실시
- 건축문화자산 네이버 테마지도 서비스 개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수시·수탁 과제 소개

| 구분 | 과제명 | 연구책임 |
|----------|--|------|
| 수시 과제 | 한옥 등 건축자산의 효율적인 등록·관리를 위한 건축물대장 개선방안 연구 | 신치후 |
| |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지침 마련 연구 | 김승남 |

수시과제

01 한옥 등 건축자산의 효율적인 등록·관리를 위한 건축물대장 개선방안 연구

2015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한옥 등 건축자산의 기초조사와 정보체계 구축이 포함됨에 따라, 건축자산 관련 통계 및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건축행정시스템상에서는 한옥의 분류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한옥에 대한 건축물 정보가 건물마다 다르며 부정확하다. 따라서 한옥 현황파악을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며, 건축물대장과 유사 건축물정보 관련 문서 간에 증·개축 등 갱신사항이 누락돼 있어 정보 간 연계성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이러한 현황에 따라 본 연구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련에 앞서 건축자산 기초조사와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과 관련한 건축물대장의 관리 항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의 건축물대장과 유사 건축물정보 내에 한옥 등 건축자산 관리 항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건축물대장 내에 관리항목 및 표기법을 보완 또는 개선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신치후

02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지침 마련 연구

지난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었다(2014년 5월 개정). 이 법안은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과 각 전략의 지역별 시행계획을 담은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2014년 말 발표될 예정이며, 서울시·경기도·충청남도 등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1차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조성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수립절차에 관한 지침은 해당 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이로 인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 수

| 구분 | 과제명 | 연구책임 |
|--|--------------------------------|------|
| 수탁 과제 | 2014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기획 및 운영관리방안 연구 | 이강민 |
| | 선진국의 문화재 보존관리 규범현황 및 내용에 관한 연구 | 심경미 |
| |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 연구 | 유광흠 |
| | 독일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체계 연구 | 차주영 |
| <p>립되면서, 국가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국가 기본계획의 원칙과 지역 단위의 특수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의 녹색건축 정책 현황과 유사 지침에 대한 검토를 통해 17개 광역지자체의 녹색건축 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이강민</p> <p style="text-align: right;">김승남</p> <p>수탁과제</p> <p>01 2014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기획 및 운영관리방안 연구</p> <p>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가 주관하는 2014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의 기획 및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한옥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한옥에 대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함으로써 한옥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앞으로 한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p> <p>2014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누구나 누리는 한옥’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계획 부문, 준공 부문, 사진 부문 등 모두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그중 준공 부문(접수기간 7월 28일-8월 1일)은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준공 완료된 한옥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주택과 1·2층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접수되었다. 사진 부문(접수기간 7월 28일-8월 1일)은 일반인과 청소년을 구분하여 작품 접수를 받았다. 현대와 전통의 공존, 자연환경과의 조화, 한옥에서의 일상 등 다양한 관점에서 표현된 작품이 다수 접수되었다. 준공·사진 부문은 8월에 작품 접수와 심사가 완료된 상태다. 계획 부문 역시 참가등록과 작품접수를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한 뒤 심사를 마쳤다. 추후 시상식(10월 1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세미나실)과 전시회(10월 13~19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갤러리 문)도 예정되어 있다.</p> | | |
| <p>도시의 현대화 과정에서 한옥이 급속히 멸실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우리의 한옥을 문화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한옥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홍보 기회로써 의미가 있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리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이 한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장으로 지속되길 기대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이강민</p> <p>02 선진국의 문화재 보존관리 규범현황 및 내용에 관한 연구</p> <p>최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내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규범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관리 종합규범체계 정비 및 구축사업’에 대한 3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p> <p>이와 관련한 첫 단계로 문화재청은 해외 주요국들이 유형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규범을 어떻게 마련해 두고 있는지 현황 파악에 대한 연구를 발주하였으며, 이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5월 연구에 들어갔다. 본 연구는 일본·프랑스·영국·독일의 유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약 6개월간 진행되어 11월 8일 종료될 예정이다.</p> <p>본 연구는 △유형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률 및 하위규정, 지침서 또는 해설서, 업무편람 등 관련</p> | | |

규범의 제정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문화재 유형별, 행위 유형별(지정, 등록, 보호, 관리, 활용)로 DB화하며 △각국의 해당 조항 및 조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본 연구는 문화재청의 관련 실무자들에게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해외의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국내 관련 규범들을 정비하거나 신규 규범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향후 국내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 향상과 체계적인 제도정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경미

03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및 실태 조사 연구

건축서비스산업은 물질 자본을 주요 생산 원료로 하는 일반 제조업과는 다르게 전문 기술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인적자본을 주요 투입요소로 하는 고도의 지식서비스 산업이다. 국가기간산업의 해외 진출을 매개하는 등 국가의 위상과 부가가치를 증폭시키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구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간 엔지니어링 산업을 제외하고 건축설

계산업에 대한 통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통계청의 자료는 아주 기초적인 산업규모만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관련 정책 및 제도 개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시행(2014년 6월 5일)됨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조사항목 및 방법 등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를 위한 구조적 틀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건축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산업시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및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찾아본다.

유광홍

04 독일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체계 연구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제도는 도시발전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도시개발에 따른 다양한 행위를 관리하는 실천적 수단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민간개발로 인한 이익과 공공의 편익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토지이용규제와 관련하여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시장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증가하면서 규제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민간개발과 공공의 편익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은 1800년대부터 지역별로 발전해 온 도시관리제도를 1960년 연방건설법전으로 일원화하면서 토지이용계획과 지구상세계획으로 이원화된 강력한 계획적 관리시스템으로 전 국토를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도 민간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건설법전을 제·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처럼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민간개발과 공공편익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시관리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과 운영기준,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와 법제도의 운영방법 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차주영

포럼 및 세미나

‘안전한 마을만들기 정책토론회’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9월 15일(월) 오후 2시, 안전행정부와 공동주최로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안전한 마을만들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계속되는 사고, 범죄, 재해, 재난으로 인해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 도시, 마을, 건축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생활환경의 안전을 위한 각계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제해성 소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개회사와 이성호 제2차관(안전행정부)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기조발제자인 이재은 교수(충북대학교 행정학과)는 ‘우리는 안전한 도시에 살고 있는가?’를 주제로 위기관리의 중요성, 안전한 도시를 위협하는 위기 요소, 주요 생활안전 위기의 내용을 소개하며, 안전도시 만들기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후 도시, 마을, 건축 각 분야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신상영 연구위원(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은 ‘안전한 도시공간을

위한 정책방안’을 주제로 도시에서 나타나는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현황 및 특징, 국내외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추진사례와 앞으로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김은희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은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올해 안전행정부에서 완료한 10개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그동안의 경과, 사업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김 부연구위원은 1차 시범사업의 성과를 현행 제도에 비추어, 향후의 장단기적인 개선 과제를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경훈 교수(고려대학교 건축학과)는 ‘지역기반 범죄예방전략으로서의 셉테드’를 주제로 범죄문제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기반의 셉테드(CPTED)의 의미와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셉테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경훈 교수를 좌장으로 정지범 행정관리연구부장(한국행정연구원)과 주제발표자였던 신상영 연구위원, 김은희 부연구위원이 패널로 나섰다. 패널과 청중들은 주민주도의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함을 공감하였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특정 사업목표 설정 및 지역개발 현황과의 연계, 부처별 사업 연계 등의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지자체의 안전 관련 부서 공무원과 건축, 도시, 안전 분야의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 등 총 약 13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한옥포럼

2014 auri 국가한옥센터 제2차 한옥포럼 '오래가는 한옥짓기'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가 주최·주관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2014년 auri 국가한옥센터 제2차 한옥포럼'이 지난 7월 3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

2014년 한옥 포럼은 '신기술로 만나는 한옥'이라는 대주제 아래 편리하고, 오래 가며, 실험적이고, 알뜰한 한옥 짓기를 주제로 총 4차례가 계획되어 있다. 두 번째로 개최된 이날 포럼에서는 '오래 가는 한옥 짓기'를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이기봉 팀장(서울시 한옥조성추진반 한옥조성팀장)이 '한옥수선 가이드라



인 들여다보기'를 주제로, 서울시의 노하우가 축적된 한옥수선 가이드라인을 소개하였다. 한옥에 사는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든 한옥수선 가이드라인은 주변지역의 특성과 조화를 위한 공간구성 및 배치계획, 전통적인 한옥의 구성과 비례를 고려한 지붕 및 입면계획과 단면계획, 그리고 마당·화단과 현대적인 생활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설비시설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규철 본부장(사단법인 한국목조건축협회)은 '100년 주택을 향한 목조건축 품질 인증제'를 주제로, 매년 성장하고 있는 목조주택시장의 시공품질 제고를 위해 2009년부터 도입한 5-star 품질인증제의 기준과 인증절차, 그리고 총 93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매뉴얼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세 번째 발제자인 이강민 센터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은 '한옥건축 인증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한옥의 법적 정의를 간소화하고 한옥건축기준을 강화하여 한옥의 품격을 보존하면서 현대적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한옥인증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 센터장은 한옥의 '디자인과 경관' '안전과 내구성능' '친환경과 에너지 절감'의 3가지 분야에서 각각 필수·심 의·권장으로 구분된 인증항목, 그리고 항목당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된 점수를 기준으로 한옥을 등급화할 수 있는 한옥등급제의 초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필원 교수(한남대학교 건축학부)를 좌장으로 김정희 과장(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안국진 연구위원(수원시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정기황 이사(㈜



엑토종합건축사사무소), 황하진 수석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기술기준처)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자들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원활하게 시행되려면 한옥 정의를 재정립하고 한옥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한옥 관련 제도의 개선과 한옥 보급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보행도시포럼

2014 auri 보행도시포럼 '보행자를 위한 도시, 정책 현안과 과제'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한 '2014 auri 보행도시포럼'이 지난 7월 8일 서울역 사박물관에서 열렸다. '보행자를 위한 도시, 정책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오성훈 본부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간문화정책연구본부)의 '보행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적 과제'라는 기조발제에 이어 심한별 연구원(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이 '아마존시범사업의 효과와 과제', 남궁지희 연구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추진 현황과 과제', 김지엽 교수가 '보행자 관련 법적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주제발표에 앞서 오성훈 본부장은 보행도시를 위한 정책 방향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행연구에 대해 소개했다.

첫 주제발표자인 심한별 연구원은 아마존(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구역)시범사업에 대한 현황과 시행 후 평가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그는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속도저감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만족하나 보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아마존시범사업을 시행할 때는 학교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남궁지희 연구원은 보행자우선도로의 도입배경과 시범사업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와 행태에서 의미 있는 변화와 가능성을 발견하였다"며 "후속 사업을 위해서는 보행자우선도로에 적합한 포장기법 연구, 대상지별 특성을 살린 설계기법 등을 점진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지엽 교수는 국내 보행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보행자보다는 차량 소통 위주로 만들어진 법제도가 문제라고 꼬집은 김 교수는 보차 구분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보행권을 보장받기 위해 보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소현 교수(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좌장으로 이병민 사무관(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이원목 과장(서울시 보행자전거과), 김종식 팀장(성북구



교통개선팀), 김중효 선임연구원(도로교통공단), 오성훈 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경험한 어려움과 성과 등을 되짚어 보았다. 이번 포럼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 등 170여 명의 참석하여 보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세미나

auri 근린재생 역량강화 세미나 '근린재생을 위한 전담조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효율적 운영 전략' 개최

도시재생지원기구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근린재생 현장의 경험과 사례 소개 등을 통해 근린재생의 다양한 분야(주거, 사회, 경제, 복지, 문화 등)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근린재생 전문가와 담당자 간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고자 '근린재생 역량강화 세미나'를 계획하여 올 7월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지난 8월 7일에는 '근린재생을 위한 전담조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효율적 운영 전략'을 주제로 두 번째 세미나가 열렸다.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표자 이재길 소장(광주 시문화마을연구소)은 '시화마을 사례를 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전략'이라는 주제로, 광주 시문화마을 만들기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주민 주도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지역주민조직·행정조직·지역업체 등과의 협업과정과 그 성과들을 설명하

였다.

10여 년에 걸쳐 진행된 시문화마을 만들기 과정을 소개한 이 소장은 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지역 주민이며, 지속적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또는 이벤트 등을 시행하여 지역의 숨어 있는 인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 유창복 센터장(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은 '서울시 마을정책 돌아보고 내다보기'라는 주제로,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정책을 설명하고 현재까지의 마을만들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짚어 보았다.

특히 유 센터장은 "마을만들기는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주민리더와 주민의 재능 발굴, 나아가 사람과 사람의 연결(Network)이 중요하며, 주민에게 의사결정권·거부권이 부여되어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도시재생선도지역 담당 공무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담당자, 도시재생지원기구 담당자와 연구원들이 참석하여 주민참여 유도과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대응 방안, 도시재생사업 계획의 중요한 과제, 행정과 주민 간의 중간매개자 찾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며 △행정 주도의 모임과 행사 개최나 초기에 재정자원을 소진하기 보다는 주민의 관심과 재미를 고취할 수 있는 작은 프로젝트들을 시행하고 △한두 명의 불평·불만에 흔들리기보다는 다수의 긍정의견에 집중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도시재생사업계획상의 과제 발굴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주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를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당 지역사회의 정서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인재 발굴이 필요하며, 이들이 중간매개자로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도시재생지원기구로서 앞으로도 연구소 내외에서 도시재생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놓고 여러 전문가, 도시재생사업 관련자, 지역 주민들과 논의를 벌여 나갈 예정이다.

공청회

충청남도 건축관련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충청남도 건축도시과는 8월 22일 충남 아산시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충청남도 건축 관련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어 충남도민, 건축 관련 전문가 및 학생, 15개 시·군 건축·도시 관련 담당 실무자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충청남도로부터 지난해 8월 건축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광역건축 기본계획과 지역녹색건축물조성계획을 통합 수립하는 '충청남도 건축 관련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위탁받아 수행해 왔으며, 오는 10월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연구진이 계획안을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의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조상규 연구위원이 건축 관련 기본계획 수립의 배경과 광역건축기본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김승남 부연구위원이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향후 5년간 충청남도 건축정책이 지향하는 비전과 3대 목표 및 9개 추진전략, 20개 실천과제를 제안하였다.

건축기본계획에서는 '살기 좋고 행복한 생활공간 조성'과 '일상이 풍요로운 건축문화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대해 6개 추진전략과 14개 실천과제를 제안하였으며,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서는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친환경 건축·도시 구현'이라는 목표에 대해 3개 추진전략과 6개 실천과제를 제안하였다.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운영태 교수(경희대)를 좌장으로 강인호 교수(한남대), 동재욱 교수(공주대), 박철희 연구부장(충남발전연구원), 이병연 교수(충북대), 이희원 교수(선문대), 조한권 과장(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홍규 과장(충청남도 건축도시과)이 패널로 참석하여 충청남도 건축 관련 기본계획(안)의 보완 사항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토론을 통해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의미를 확인하고, 건축기본계획과 녹색건축물조성계획 통합 수립의 효율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남은 과제수행기간에 충청남도의 지역적 특성을 좀 더 반영하고 계획의 실행력 담보를 위해 계획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당부의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자뿐 아니라 충남 소재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교수, 충남건축사협회 회원, 시·군 공무원 등 공청회에 참석한 다수의 전문가들도 충청남도 건축 관련 기본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10월 최종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며, 충청남도의 효율적인 건축정책 시행을 위해 도청의 건축도시과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연구소 단신

2014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실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13년 6월 5일 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 제2항 제6호에 의거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에 걸쳐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서울특별시(29일), 대전광역시(29일), 부산광역시(30일), 광주광역시(31일) 등지에서 이루어졌으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제23조)와 개편된 설계발주제도(제21조)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차주영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장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개요」를 시작으로 김은희 부연구위원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염철호 연구위원이 ‘공공건축 설계발주 제도의 개편’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먼저 차주영 센터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 배경 및 목적, 입법과정,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김은희 부연구위원은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의 절차,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발주기관이 작성해야 하는 사전검토 신청서의 작성 방향 및 실행에서 등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염철호 연구위원은 설계발주방식의 개편방향과 주요 설계발주방식인 설계공모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개편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이번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은 23개의 국가기관과 70개의 지방자치단체, 74개의 공공기관, 24개의 지방공기업, 12개의 기타 기관 등 모두 203개 기관에서 435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당초 참가신청은 이보다 훨씬 많아 무려 952개 기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향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교육에서 오간 질의응답 내용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npb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때 배포한 자료집(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 가이드 및 공공건축설계발주 가이드)은 같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건축문화자산 네이버 테마지도 서비스 개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민들이 우수 건축문화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네이버 테마지도를 통해 9월 1일부터 '건축문화 테마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대한민국 건축문화탐방'이라는 주제의 시리즈로 기획되었으며, 그 첫 번째로 서울지역의 주요 관광명소와 연계한 우수 건축물 답사 코스를 소개하고 있다. 8개의 코스로 구성된 '건축문화 테마지도'는 시청, 광화문, 종로 일대와 동대문, 이태원·남산, 여의도, 홍대·신촌 등 서울의 역사와 건축문화를 함께 둘러볼 수 있다. 또한 서울의 인기 관광명소를 운행하는 서울시티투어버스 코스와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객들은 시티투어버스 정류장에 하차해서 선택한 코스를 도보로 둘러볼 수 있다. 서비스는 네이버 웹페이지(<http://me2.do/GID0yOKD>)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지역별 건축문화자산을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그 밖에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해성 소장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구축한 건축문화자산 정보를 대중포털과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건축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좋은 건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보고서 안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연구 성과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www.auri.re.kr)에서 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으며, 발간물 구입에 관해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자료실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실 (031)478-9640, information@auri.re.kr

auri 연구보고서(2013)

AURI-기본-2013-1
보행중심도시 조성정책 및 제도 연구
10,000원

AURI-기본-2013-2
지자체 건축·도시 관련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2,000원

AURI-기본-2013-3
가로단위 공간관리 수단으로서의
특별가로구역 제도 연구 29,000원

AURI-기본-2013-4
공공건축 활용성 증대를 위한 관리 정책
연구 24,000원

AURI-기본-2013-5
건강개념에 대응하는 근린환경 조성 정책
연구 23,000원

AURI-기본-2013-6
도시공원 정책 수립을 위한 공원 평가
모델 개발 연구 16,000원

AURI-기본-2013-7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주도형
건축협정 제도 연구 25,000원

AURI-기본-2013-8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제도 개선 연구
21,000원

AURI-기본-2013-9
녹색건축 정책수립을 위한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구축 및 분석
21,000원

AURI-기본-2013-10
건축자산의 목록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28,000원

AURI-기본-2013-11
한국도시의 경관경쟁력 평가 연구
20,000원

AURI-기본-2013-12
중소도시 쇠퇴지역 재생정책 합리화를
위한 근린단위 연구 30,000원

AURI-정책-2013-1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개선방안 연구 11,000원

AURI-정책-2013-2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확충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8,000원

AURI-정책-2013-3
창조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중소기업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 연구 8,000원

AURI-정책-2013-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기반
연구 8,000원

AURI-정책-2013-5
여건변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축사 제도 개선 8,000원

AURI-정책-2013-6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체계 및 제도 기반 연구 12,000원

AURI-정책-2013-7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자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례 연구 13,000원

AURI-정책-2013-8
노후 주거지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및 수준 분석 13,000원

AURI-정책-2013-9
국가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건축정책 발전방안 연구 12,000원

AURI-협동-2013-1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1) 20,000원

AURI-한옥-2013-1
한옥의 규모와 형태에 따른 목재비용
산출 조사 연구 6,000원

AURI-한옥-2013-2
기존 한옥 리모델링 시공과정의 사례
9,000원

AURI-한옥-2013-3
2013 전국 한옥분포 현황조사-대구 및
전주권 30,000원

AURI-한옥-2013-4
한옥의 특성을 고려한 인증제도 도입
방안 연구 31,000원

AURI-한옥-2013-5
2013 한옥건축산업 동향 14,000원

AURI-한옥-2013-6
한옥 전문인력 교육 및 자격 인증방안
연구 18,000원

AURI-한옥-2013-7
한옥활성화를 위한 신한옥 모델개발
연구(2) 38,000원

AURI-한옥-2013-8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
발굴(2) 20,000원

AURI-보행-2013-1
보행환경과 행태: 조사분석 보고서(1)
33,000원

auri 연구보고서(2012)

AURI-기본-2012-1
가로주택 정비사업 적용을 위한 제도방안
8,000원

AURI-기본-2012-2
건축행정정보의 정책적 활용 및 건축통계
개선방안 연구 7,000원

AURI-기본-2012-3
근린 재생을 위한 도시 내 유휴공간 활용
정책방안 연구 16,000원

AURI-기본-2012-4
도시공간개선사업의 저탄소 계획요소
적용에 관한 연구 13,000원

AURI-기본-2012-5
저층주거지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방안
17,000원

AURI-기본-2012-6
도시 공공공간 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공개공지 제도 개선방안 연구 13,000원

AURI-기본-2012-7
공공건축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
시범적용 및 제도화 연구 11,000원

AURI-기본-2012-8
상업가로 활성화를 위한 도시설계 방안
연구 22,000원

AURI-기본-2012-9
소규모 주택사업 다양화를 위한 주택관련
제도 유연화 방안 연구 12,000원

AURI-기본-2012-10
SOC 시설의 복합적·입체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17,000원

AURI-기본-2012-11
주거단지의 도시성 구현을 위한
공간구조모델 및 제도개선 연구
13,000원

AURI-기본-2012-12
장소중심의 공간계획을 위한 인터넷 사전
정보 활용 방안 17,000원

AURI-정책-2012-1
건축기획업무 내실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 11,000원

AURI-정책-2012-2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내 한옥 보급
방안 연구 10,000원

AURI-정책-2012-3
농어촌 경관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8,000원

AURI-정책-2012-4
건축설계 발주제도 개선방안 연구
7,000원

AURI-정책-2012-5
최근 한옥입주자 특성 및 한옥수요 조사
연구 8,000원

AURI-정책-2012-6
다세대주택의 규모 규제완화
방안에 관한 연구 7,000원

AURI-정책-2012-7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지침 연구
7,000원

AURI-정책-2012-8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례 연구 9,000원

AURI-정책-2012-9
근린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건축물 규제
개선 기본방향 연구 8,000원

AURI-정책-2012-10
한옥학교의 운영실태 및 교육현황
조사 연구 6,000원

AURI-협동-2012-1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2) 19,000원

AURI-일반-2012-1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
발굴 연구(1) 18,000원

AURI-일반-2012-2
수요창출에 기반한 한옥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17,000원

AURI-일반-2012-3
한옥활성화를 위한 신한옥 모델개발
연구(1) 18,000원

AURI-일반-2012-4
기존 한옥의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방안 연구 20,000원

auri 연구보고서(2011)

AURI-기본-2011-1
주거문화 진단 및 주택정책 방향설정
연구 10,000원
(부록 - 주택정책의 새로운 비전
10,000원)

AURI-기본-2011-2
한국 도시설계에 적용된
서구도시건축이론의 재고 20,000원

AURI-기본-2011-3
주거지 재생의 공익성 향상을 위한
공공의 역할 18,000원

AURI-기본-2011-4
도시공간조직에 대응하는 주거지
정비방안 연구 15,000원

AURI-기본-2011-5
수변도시 재생에 대응하는 수변경관
조성방안 연구 23,000원

AURI-기본-2011-6
건축의 품격 향상을 위한 건축물
형태규제 개선방안 연구 23,000원

AURI-기본-2011-7
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10,000원
(별책 - 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사례
10,000원)

AURI-기본-2011-8
중소도시재생을 위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활용방안 17,000원

AURI-기본-2011-9
건축문화 저변 확산을 위한 기초건축교육
실행방안 연구 17,000원

AURI-기본-2011-10
단독주택지내 생활중심시설의 공급 방안
연구 13,000원

AURI-기본-2011-11
건축관련 법제의 체계적 정비방안 연구
9,000원

AURI-정책-2011-1
도로·철도·복합환승센터 및
마리나항만 경관관리의 이해와 활용 방안
7,000원

AURI-정책-2011-2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기반 구축
방안 연구 7,000원

AURI-정책-2011-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방안 연구
7,000원

AURI-정책-2011-4
해피차일드 정책지원방안 12,000원

AURI-정책-2011-5
필지단위 주택정비 활성화 방안 연구
7,000원

AURI-정책-2011-6
블록형 집합주택의 주거성능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6,000원

AURI-정책-2011-7
신도시 단독주택지 공간구조
개선방안 연구 10,000원

AURI-협동-2011-1
친환경 근린개발 평가인증체계의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2) 9,000원

AURI-협동-2011-2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1) 17,000원

AURI-일반-2011-1
한옥 주거현황 조사 및 정보 구축 방안
연구 15,000원

AURI-일반-2011-2
한옥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및 법제도
개선 연구 15,000원

AURI-일반-2011-3
한옥마을 지원정책을 통한 역사문화가로
경관 조성방안 18,000원

AURI-일반-2011-4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공급 방안 연구
20,000원

auri 연구보고서(2010)

AURI-기본-2010-1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 관리시스템 구축
연구 10,000원

AURI-기본-2010-2
공공청사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방안 연구
10,000원

AURI-기본-2010-3
단독주택지 재생을 위한 주택관리 및
정비 지원방안 12,000원

AURI-기본-2010-4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U-City
실험방안 연구 8,000원

AURI-기본-2010-5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및
설계방향 15,000원

AURI-기본-2010-6
공동주택의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디자인
강화방안 연구 15,000원

AURI-기본-2010-7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공동주택 디자인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8,000원

AURI-기본-2010-8
녹색성장을 위한 건축 관련
법·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 -
지식서비스산업으로의 구조개편을
중심으로 10,000원

AURI-기본-2010-9
SOC 시설의 디자인 향상 방안 연구
15,000원

AURI-정책-2010-1
특별건축구역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7,000원

AURI-정책-2010-2
도시형 생활주택 계획현황 진단 : 서울시
단지형 다세대주택 사업승인 사례를
중심으로 7,000원

AURI-정책-2010-3
건축/건설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환경조사 7,000원

AURI-정책-2010-4
사용자 중심이론에 기반한 보육시설
공간환경 디자인 방향설정 연구
7,000원

AURI-정책-2010-5
건축법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연구 7,000원

AURI-정책-2010-6
경관향상을 위한 도시특성별 건축물 높이
관리 방안 연구 7,000원

AURI-협동-2010-1
중국의 탄소저감 정책동향 및 도시규모별
대응전략 연구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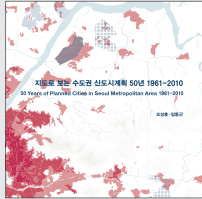
AURI-협동-2010-2
친환경 근린개발 평가인증체계의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1) 10,000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단행본 안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건축·도시 관련 분야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단행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단행본 소개 및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www.auri.re.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서점을 통해 구매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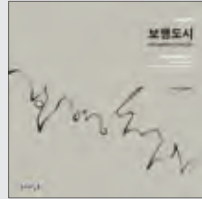
문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홍보팀 (031)478-9640, information@auri.re.kr



지도로 보는 수도권
신도시계획 50년 1961-2010
오성훈, 임동근
20,000원



보행자를 위한 도시설계1
오성훈, 남궁지희
20,000원



보행도시
오성훈, 남궁지희
50,000원



보행환경 조사분석 매뉴얼
오성훈, 이소민
10,000원



건축·도시설계를 위한
척도연습
오성훈, 김원경
10,000원



한옥 정책·제도·사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비매품



한옥 고치는 책 I -대청과 방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비매품



한옥 짓는 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비매품



유비쿼터스 건축·도시공간
고일두
7,000원



아파트를 새롭게 디자인하라
최두호, 한기정
9,000원



건축과 도시, 공공성으로 읽다
이영범, 염철호
8,000원



황금빛 양동마을, 그 풍경
속에 담긴 삶
강동진
10,000원



주거지재생 패러다임의 전환
김찬호, 서수정
8,000원



한옥의 진화
윤재신
12,000원



옥상의 공간사회학
전상인, 김미영
7,000원

자료회원 가입안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자료회원과 메일링서비스 회원에 가입하시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발간하고 있는 발간물들을 다양한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홍보팀 (031)478-9640, information@aur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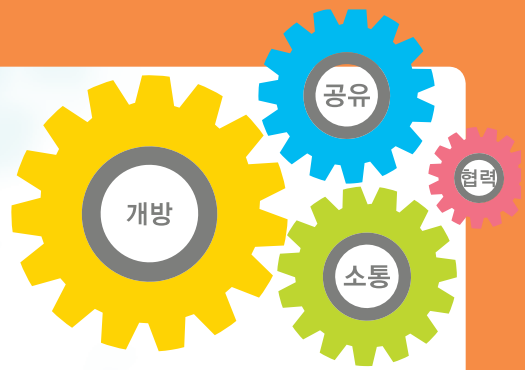
| 회원의 종류 | 받으실 자료 | 연회비 |
|-----------|---|---|
| 자료회원 | 당해연도 연구보고서 auri brief(격주간) 한옥정책 brief(월간) 건축도시정책동향(월간) 건축과 도시공간(계간) | 개인 10만 원 기관 20만 원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자료우송료 연구소 부담) |
| 메일링서비스 회원 | 세미나 등 행사소식 안내 간행물 발간 안내 | 무료 |

◆ 가입방법

- ◇ 자료회원 : 연구소 홈페이지(www.auri.re.kr) [참여공간] ▶ [자료구입 안내]에서 신청, 회원비 납입 확인되면 회원등록 완료
- ◇ 메일링서비스 회원 : 연구소 홈페이지(www.auri.re.kr) [참여공간] ▶ [메일링 서비스]에서 신청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해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새 시대를 정부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정부3.0



공공정보 공개확대로
「국민의 알권리」충족



국민의
정부정책 참여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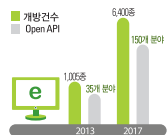
정부 내 칸막이 제거로
통합적 행정서비스 제공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접근 제고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으로
새로운 일자리창출



정보공유와 디지털협업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구현



창업과 기업활동
지원 강화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